경기연구원-한국정치사상학회 공동학술회의

“더 많은 민주주의를 향하여”

일시: 20214년 4월 23일(금)
13:00-18:00

장소: 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 신한은행홀

주최·주관: 경기연구원, 한국정치사상학회

경기연구원-한국정치사상학회 공동학술대회

○ 주제 : “더 많은 민주주의를 향하여”

○ 일시 : 2021년 4월 23일 (금) 13:00 ~ 18:00

○ 장소 : 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 신한은행홀

○ 주최·주관 : 경기연구원, 한국정치사상학회

○ 일정

구분	시간	내용	비고
등록	13:00 ~ 13:10	참석자 등록	사회 : 오재호(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개회사	13:10 ~ 13:20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환영사	13:20 ~ 13:30	한국정치사상학회장 장현근	
제1세션 13:30 ~ 15:00		**좌장1 : 이나미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13:30 ~ 14:00	기조발제 : 윤비 “(한국)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하다- 포퓰리즘이 던지는 질문”	
	14:00 ~ 14:20	발제1 : 이상원 “서양정치사상에서 인민(people)의 실존과 정치적 문제성”	
	14:20 ~ 14:40	발제2 : 안효성 “한국정치사상에서 people의 대응개념과 그 의미, 그리고 포퓰리즘”	
	14:40 ~ 14:50	토론1 : 오수웅 (숙명여자대학교)	
	14:50 ~ 15:00	토론2 : 이영재 (한양대학교)	
휴식	15:00 ~ 15:10		
제2세션 15:10 ~ 17:10		**좌장2 : 홍철기 (서강대학교)**	
	15:10 ~ 15:30	발제3 : 김은중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과 인민”	
	15:30 ~ 15:50	발제4 : 박성진 “포퓰리즘은 왜 그리고 어떻게 몹쓸 것이 되었나?”	
	15:50 ~ 16:10	발제5 : 이승원 “민주적 포퓰리즘과 정치의 재구성”	
	16:10 ~ 16:30	발제6 : 김성하 “실천적 시민과 민주주의 지속”	
	16:30 ~ 16:40	토론3 : 박정원 (경희대학교)	
	16:40 ~ 16:50	토론4 : 심승우 (서울교육대학교)	
	16:50 ~ 17:00	토론5 : 장석준 (전환사회연구소)	
	17:00 ~ 17:10	토론6 : 백미연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	
휴식	17:10 ~ 17:15	휴식	
종합 라운드 테이블		**좌장3 : 박주원 (영남대학교)**	
	17:15 ~ 17:55	참석자 전원 토론 (경기연구원장, 한국정치사상학회장, 기조발제자, 좌장1, 좌장2, 발제자, 토론자 등)	
폐회	17:55 ~ 18:00	폐회사 및 마무리	사회 : 오재호(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세션1

좌장: 이나미(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기조발제: 윤비(성균관대학교)
발제 : 이상원(인천대학교)
안효성(대구대학교)
토론 : 오수웅(숙명여자대학교)
이영재(한양대학교)

기조발제

(한국)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하다.
- 포퓰리즘이 던지는 질문

윤비(성균관대학교)

제1절 포퓰리즘이 던지는 문제들

사회과학의 여러 논쟁들과 마찬가지로 포퓰리즘에 대한 논쟁도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 앞에 절실한 문제로 다가왔다. 2000년대 초반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포퓰리즘이란 복지확대에 반대하고 성장주의를 내세우는 입장에서 (그것도 주로 일부 저널리즘에서) 제기한 이슈였다. 주장은 간단하다. 포퓰리즘은 국가와 사회발전에 대한 거시적인 계획에 근거하지 않는 '퍼주기'이며 이를 통해 주로 일부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물질적 이해를 충족시킴으로써 인기를 얻으려는 얄팍한 정치 전술이다. 이는 이성과 합리성에 대한 말초적 쾌락의 승리이면서 동시에 국가의 재정기반을 파괴하고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할 것을 오늘을 위해 의미없이 소비해버리는 한탕주의이다. 포퓰리즘의 결말은 경제의 쇠락과 파탄이며 동시에 그러한 정책을 통해 이익을 얻은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 간의 균열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 뒤에는 대중을 움직여 개인의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대개 스스로는 사회의 계층위계에서 상층에 속한) 정치가의 야심과 이기주의가 있다.

사실 포퓰리즘이라는 외래어를 성장주의를 내세우는 입장에서 그 반대측을 비판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유는 흔히 그 용어가 일으키는 연상작용 때문이다.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는 보수정파에서 보다 이념적 스펙트럼상에서 왼쪽에 서 있는 자유주의 정파나 다른 진보정당들을 깎아내리기 위한 프레임으로 기능했다. 포퓰리즘은 학계에서나 저널리즘에서 중남미 국가들과 사회를 몰락으로 이끈 병리적 현상으로 이해되어 왔다. 포퓰리즘은 흔히 흥분하여 거리를 휩쓰는 군중들, 그들을 선동하는 핏대세운 지도자, 경제 및 사회질서의 붕괴, 모라토리엄 등의 부정적 이미지와 연결되어 왔다. 복지확대와 부의 분배구조의 변화를 주장하는 입장에 대해 반대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를 충분한 고려없이 싸잡아 포퓰리즘으로 부르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개념과 이미지를 동원한 정치적 투쟁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십여년간을 돌이켜보면 이 모든 '반 포퓰리스트들'의 주장이 한국정치에서 점점 더 영향력을 넓혀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복지체계가 성장하고 저소득층 및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지출의 확대되면서 이에 대해 우려하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아져왔으며 무책임한 낭비, 인기영합주의라는 비난이 일어났다. 또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정치인들이나 고위관료들에게는 무책임하면서도 위선적인 (강남)좌파라는 비난이 따라붙곤 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어느덧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외래어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방금 설명한 사정이 2021년 현재 한국에서 포퓰리즘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의의 의미를 모두 설명하지는 않는다. 현재 벌어지는 (그리고 이 책의 논의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포퓰리즘에 대한 한국에서의 논의는 같은 주제에 대해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논쟁들의 한 축이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이 책에 실린 글들에서 거듭하여 이야기하기 때문에 상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우파와 좌파를 막론하고 최근 포퓰리스트들이 거둔 성공, 특히 서구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국가들인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에서 포퓰리스트들의 약진은 한편으로는 포퓰리스트들의 위협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포퓰리스트들의 성공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서 더 나아가 민주주의와 사회의 바람직한 발전에 대해 포퓰리즘이 갖는 혹은 가질 수 있는 함의에 대한 문제의식도 덧붙여졌다. 그 결과 포퓰리즘에 대한 논의는 오늘날의 민주주의와 사회에 대한 비판적 검토의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단지 포퓰리즘이 현재 민주주의와 사회의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겸허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와 그 주체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을 수없게 한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 당연하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른다면 흔히 그 반대물로 이해되는 포퓰리즘이 무엇인지도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다. 포퓰리즘에 대한 논의는 정치이론사와 정치사에서 일부 후발 민주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등장한 민주주의의 병리현상에 대한 토론이었다. 한국에서는 정치적 동원을 위한 수사로서 2000년대 이후 이용되었다. 최근 포퓰리즘의 세계적 약진은 여기에 한 마디를 덧붙이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오늘날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의, 그것도 가장 도전적인 한 부분이다.

제2절 한국민주주의의 미래와 포퓰리즘

그러나 이 책이 단지 세계적인 이론적 트렌드에 한마디 보태려 위해서 쓰인 것은 아니다. 2021년 한국에서 포퓰리즘이 왜 문제로서 제기되고 어떻게 논의하고 답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없다면 그러한 논의는 서구학문의 유행에 대한 맹목적 추종이라는 혐의를 벗기 어려울 것이다. 포퓰리즘의 한국 사회에서의 현재성에 대해서 필자는 적어도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

첫째, 앞에서도 지적했듯 한국 사회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는 정치적 동원을 위한 수사로서 종종 이용되어 왔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는 어쨌든 미래에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자주 등장하는 낱말의 리스트에서 빠지지 않을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복지체계의 확대와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의 확대는 피하기 어렵다. 분명히 지난 몇 년간 한국사회에서 복지체계의 발전방향과 범위, 속도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고 때로 정치적으로 심각한 대립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누가 집권하는가와 상관없이 한국사회의 복지는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복지분야에서 정부 재정지출의 확대 및 세수의 확대가 필연적이고 그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 지지가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한편, 여전히 과거의 가난에 대한 공포, 1998년 경제위기로부터 얻은 심리적 트라우마, 여전히 빠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잡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그에 대한 반발 역시 커질 것이다. 그런 만큼 미래에도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는 사회의 한편에서 지속될 것이며 정치투쟁의 용어로서 한국사회의 정치 담론안에 계속 등장할 것이다.

둘째, 한국사회와 민주주의가 점점 더 발전할수록 서구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 보이는 다양한 유형의 포퓰리즘이 모습을 드러낼 가망이 크다. 뒤의 저자들이 상세하게 논의하겠지만 흔히 포퓰리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린다.(cf. Mude and Kaltwasser 2017; Mude 2017; Kaltwasser et al 2017;)

a. '평범한 사람들'이 주체이며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가 제도화 구조화되어야 한다는 생각. 이들 평범한 사람들은 공동체 지향적이고 도덕적으로 순수하다는 생각.

b. 이러한 '평범한 사람들'의 이해가 부패하고 이기적인 엘리트 집단들에 의해 침해되고 있으며,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가려지고 있고 심지어 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단을 잃어버렸다는 생각.

c. 따라서 모든 사회정치운동의 궁극적 목표는 이러한 사회정치체제를 '평범한 사람들'의 공동의지가 지배하는 체제로 대체하는 것에 있으며 그러한 체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은 이미 '평범한 사람들'의 지혜안에 있다는 생각.

여기에 우리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를 덧붙일 수 있다.

d. 이기적인 엘리트 집단들은 제도를 독점하고 그 안에서 배타적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으며 좌/우 혹은 진보/보수의 구별은 실질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것.

e. 현 정치체제는 엘리트 집단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안에서 제시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는 필요에 의하면 우회되거나 무시될 수도 있다는 생각.

문제는 이러한 정의가 사실상 포퓰리즘과 민주주의를 정확히 나눌만큼 충분히 날카롭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 포퓰리즘이 정말 민주주의와 구분되는 이데올로기적 실체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도 긴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어떤 의미에서 포퓰리즘의 기초를 마련해온 것은 민주주의 자신이다. 포퓰리즘의 주장의 상당수는 급진적이든 보수적이든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정치가들과 정부, 그리고 식자들이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때로 적극적으로 선전해온 명제들에 기초해있다.

한국 사회로 문제를 좁혀보면 민주화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해소를 요구하는 오랜 사회정치적 운동에서 제시된 여러 이론과 주장이 이와 같이 정의된 포퓰리즘과 상당부분 겹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70년대부터 맥을 이어온 한국의 민중운동론 (1980년대에는 민중 개념을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풀빛에서 출간한『한국민중사』가 그 예이다)의 민중 개념과 정치사회적 상황에 대한 인식은 a, b, c의 요소를 빠짐없이 담고 있다. 민중은 도덕적으로도 부패한 기득권 집단의 이기주의에 의해 차별당하고 기본적이고 당연한 이익을 실현할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들이며 사회정치운동의 궁극적 지향점은 민중의 이익이 실현되는 정치체제를 이루는 것이다. 민중의 이익이 실현되는 정치체로서 선호된 것은 직접민주주의형식 혹은 코뮨 형식의 공동체이다. 헐벗은 사람들, 번지르르하지 않고 심지어 못생기고 꾸밀 줄도 모르는 민중들의 공동체라는 생각은 80년대 저항운동

을 장식한 민중예술의 이미지들에서 지금도 손쉽게 발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d와 e의 요소도 한국의 저항운동의 언어에서 찾기 어렵지 않다.

물론 한국의 민주주의의 운동의 담론이 갖고 있는 포퓰리즘과의 친소관계는 앞으로 심각하게 논의되어야 할 대상이다. 이미 언급하였듯 민주주의의 언어와 포퓰리즘의 언어는 기본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많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권위주의적인 지배체제에 맞서 저항의 동력을 끌어올려야 하는 순간에 등장하는, 수사와 뒤섞인 여러 주장들은 포퓰리즘의 명제들과 구별하기 힘들만큼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모든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을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마찬가지로 앞서 한국의 저항운동에서 등장한 언어가 포퓰리즘의 언어와 가지고 있는 유사성을 근거로 저항운동을 포퓰리즘으로 낙인찍는다든가 혹은 포퓰리즘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이끌어왔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면적이다. 그러나 그러한 언어들이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 역시 일면적일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영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한 영향에 대한 논의는 이제 시작해야 하는 과제이다. 다만 현재 필자가 이야기할 수 있는 바는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 포퓰리즘의 언어가 친숙한 만큼 포리퓰즘의 잠재력도 크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다. 계층 및 세대, 나아가 지역 간의 불평등의 확대는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 민주주의 내지 진보라고 일반적으로 불렸던 여러 정파와 사회집단들간에 견해차이를 낳고 있으며이러한 견해 차이는 조국 전법무부장관의 재산형성 및 자녀진학을 이슈로 실제적인 정치적 갈등으로 드러났다. 공정, 평등 등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감수성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그러한 정파 및 사회집단들간 사회정치적 비전의 분화는 더 가속화될 것이다. 그러한 분화의 한 가운데에서 앞서 말한 포퓰리즘의 잠재력이 어떤 방향으로 등장할 것인가는 쉽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선진 자유주의 국가가 경험과 것과 같은 혹은 그와 다른 유형의 포퓰리즘이 한국사회에도 강력한 힘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최근에 등장하여 여전히 기세를 올리고 있는 포퓰리즘이란 무엇이며 그 동력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고찰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고민하는 모두에게 던져지는 과제이다.

제3절 피플, 민주주의, 포퓰리즘

포퓰리즘이 한국에서 정치를 연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영어로 피플(people), 우리가 흔히 국민 혹은 인민이라고 부르는 존재의 의미를 심각하게 되새겨보아야 한다는 것이다.(필자는 이 절에서만큼은 의도적으로 (그리고 궁색하게도) 국민도, 인민도 아닌 피플이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한다. 국민, 인민, 혹은 민중까지 모두가 이미 일정한 정치적 비전의 기표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피플은 외국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쓰이기 때문에 무색무취하게 들린다.)

민주주의는 수입된 제도이다. 그것도 서구화, 근대화와 더불어 수입된 제도이다.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관점부터 그 안에 동원되는 개념까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것은 별로 없다. (강정인 2000;

이동수 2007; 이영록 2010; 이관후 2016; 장규식2018) 피플이라는 개념을 두고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피플이라는 인간범주를 과연 어떻게 상상했는가? 피플은 누구인가? 모든 유권자? 기층민중이라고 일컫는 사회정치경제적 불평등 구조의 피해자? 1980년대의 한국사회의 많은 이들은 민주주의가 가져다 줄 '멋진 신세계'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그 아래에는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피플에 대한 큰 기대가 있었다.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안착하고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미래의 이상으로서가 아니라 현실로서 경험하면서 피플에 대한 기대와 생각은 변화를 겪고 요구받고 있다. 최근 미국이나 영국을 비롯한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겪는 내홍과 혼란은 길었던 냉전과 이념대립에 가려져 좀체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거나 간과되어 왔던 민주주의의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민주주의는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제도라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그냥 놔두어도 알아서 멋진 꽃을 피우는 그런 제도는 아닌 것이다. 민주주의는 부패하고 무능한 지도자를 권좌에 밀어올리기도 하며 민주주의는 때로 배제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이제까지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던) 다른 칼날에 대한 이러한 각성은 또한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피플의 존재와 의미에 대한 각성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 가장 단순한 의미에서 유권자로서 피플을 정의한다면, 이 피플이 언제나 현명한 것도, 피플의 의지가 언제나 민주주의에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 민주주의에 널리 퍼져있는 낙관론과 달리 피플은 언제나 현명하고 언제나 정의로우리라는 기대와 어긋나게 행동할 수 있다. 핍박받고 소외된 이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피플을 상상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포퓰리즘의 성공의 적지 않은 부분은 바로 이 소외된 이들의 소외감과 관련되어 있다.

피플의 지배라는 것은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왜 우리는 피플의 지배로서 민주주의를 여전히 소중히 여기고 심지어 그를 위해 목숨마저 걸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가? (지금 이 순간 미얀마에서는 실제로 한국인들이 과거에 그러했듯 많은 이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거리에 나서고 있다) 피플과 민주주의의 관계는 무엇인가? 피플의 정체성과 가능성 혹은 잠재된 위험에 대해 다시금 되새겨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었다. 오늘날의 포퓰리즘은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더욱 더 중요하게 만들었다.

참고문헌

강정인 (2000).「민주주의의 한국적 수용」.『한국정치학회보』34-2.

이관후 (2016).「왜 '대의민주주의'가 되었는가?: 용례의 기원과 함의」.『한국정치연구』25-2.

이동수 (2007).「개화와 공화민주주의. <<독립신문>>을 중심으로」.『정신문화연구』30-1.

이영록 (2010).「한국에서의 '민주공화국'의 개념사」.『법사학연구』42.

장규식 (2018).「3. 1운동 이전 민주공화제의 수용과 확산」.『한국사학사학보』38.

Kaltwasser, C. R. et al (2017). "Populism. An Overview of the concept and the State of the Art". In C. R. Kaltwasser et al eds, The Oxford Handbook of Popu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Mudde, Cas (2017). "Populism: An Ideational Approach". In C. R. Kaltwasser et al eds, The Oxford Handbook of Popu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Mude, Cas and C. R. Kaltwasser (2017). Populism.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University Press,

발제 1

서양정치사상에서 인민(people)의 실존과 정치적 문제성

이상원(인천대학교)

제1절 민주주의, 포퓰리즘 그리고 인민의 문제

오늘날 민주주의의 위기는 지속되고 있지만 민주주의의 이상에 대한 전 세계 대중의 기대와 외침은 과거 그 어느 시대보다 높다. 많은 정치지도자들과 국민들은 이 모든 문제의 해법은 결국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길이라고 부르짖는다. 그러나 각자의 입장에서 제시하는 참된 민주주의의 구현방향은 서로 다르기 마련이다. 모두가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전 세계 모든 시민들의 다양성을 통합할 수 있는 단일한 형태의 민주정부의 구현은 쉽지 않다. 특히 소위 선진 민주정체라 불리는 미국과 영국의 민주주의가 보여주는 최근의 배타성은 우려할 만하다(주디스 2016, 19; 김남국 2018, 17-19). 트럼프는 중남부의 보수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수의 지지자들을 끌어 모았지만, 그의 대중선동전략은 미국 고유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외부 이민자의 유입을 배격하면서 인종 갈등까지 부추기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영국의 인민 다수는 민주적 표결을 통해 유럽통합을 탈퇴하면서 민주주의의 공유와 확산보다 영국만의 독자적 길을 걷는 방향을 택했다. 결국 지구화 시대의 민주주의는 국경의 테두리 바깥으로 확장되지 못한 채 자국만의 인민주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나 그마저도 계층 및 인종 갈등 속에 인민들의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소위 근대 민주주의의 기원이자 오늘날 선진 민주정체라고 평가받는 두 나라의 민주주의가 보여주는 모습은 공통적으로 인민 다수의 존재와 힘에 호소하는 포퓰리즘의 경향성과 직결된다(서병훈 2008, 182-184).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고는 민주적 다원성과 갈등의 역동적 조율에 초점을 두는 새로운 포퓰리즘 해석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그 출발점은 특정한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인민의 실존이 지닌 정치적 한계와 가능성을 직시하는 것이 될 것이다.

제2절 현대사상에서 제기된 존재의 질문과 인민

인민의 실존에 대한 이해는 결국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는 결국 각 개별자의 고유한 존재 의미에 대한 다양한 고찰에 근거한다. 따라서 현대 존재론의 사유는 실존의 의미를 보편적 이성이나 합리적 범주로 섣불리 규정하는 시도를 비판한다. 오히려 실존적 접근은 지금, 여기라는 특정한 맥락에서 존재 자체의 의미에 대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인간 존재의 특수성을 중시한다(Heidegger 1962, 26-27). 우리는 저마다의 일상과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의 삶과 존재 의미에 대한 물음을 언제든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일상의 반복 속에서 인간 존재의 열린 가능성은 꾸준히 드러나기도, 하고 때론 감추어지면서 한계 지워지기도 한다. 결국 각자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존재의 의미에 대해 묻는다는 일상적 경험이 인간적 실존을 구성한다. 이렇게 제한된 경험 속에서 존재의 개념은 다양한 해석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양한 존재 물음과 해석의 가능성은 단지 무한정하게 창출되거나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존재물음은 내가 지금, 여기에 처한 특정한 상황적 맥락에 구속받고 있다. 동시에 존재의 일상적 한계는 그 경계를 넘어 열린 미지의 가능성에 대한 인간의 갈망을 끊임없이 야기한다. 이렇게 실존이 지닌 '가능성과 한계'는 결국 보편성과 특수성 어느 한편으로 규정되기 어려운 인간적 삶의 역동성으로 드러난다.

인간 존재의 역동성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측면은 결국 존재에 대한 물음과 개별적 의미 찾기가 "타자와의 함께함"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Heidegger 1962, 157). 나와 다른, 결코 하나일 수 없는 타자와의 공존이 인간의 일상을 구성한다(Levinas 1969, 39). 공존의 현상은 단순히 서로 다른 여러 개인들 간의 물리적 집합체 혹은 추상적 다원성의 개념으로 환원될 수 없다. 인간의 공존은 삶 속에서 직면하는 생존의 구체적 문제들, 나아가 더 나은 존재 가능성의 탐색을 둘러싼 다양한 관점의 형성과 교류, 충돌의 역동적 과정이다. 이때 개별자들의 존재에 대한 의미 찾기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규정된 세계와 존재에 관한 일반적 시각을 반영한다. 그리고 이들이 모인 공동체의 삶은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공존의 다양한 의미부여가 교차하며 특정한 방향의 역사를 구성해 나간다 (Heidegger 1962, 436). 따라서 인간 존재의 역사성은 단지 지나간 일이나 고정된 것이 아니다. 역사는 특정한 방향으로 한계 지워지는 동시에 반복되는 일상을 넘어 존재의 또 다른 방향성을 찾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인간 존재가 처한 특정한 공동체의 역사적 상황에 따라 각 공동체별로 존재의 의미에 대한 서로 다른 지배적 견해가 형성된다. 즉 인간 존재는 모두 나, 우리, 혹은 그들이 속한 공동체들과 세계 전체에 대한 특정한 시각 혹은 믿음, 즉 세계관을 형성하고 살아간다.

서로 다른 공동체 간 세계관의 교류는 단지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마찰과 갈등의 움직임을 야기한다(Levinas 1969, 70). 역사적 맥락 속에서 타자들과 함께하는 존재로서 나 혹은 우리, 그들의 존재가 특별하게 규정된다. 존재가 특정한 방식으로 지배적으로 규정되면 더 이상 다른 공존방식에 대한 비판적 질문이 제기되기 어렵다. 일상에서 진정한 존재물음의 은폐, 회피 혹은 포기는 특정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나의 실존을 이미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의 경계 안에서 종종 일어난다. 존재의 의미를 특정 짓는 공동체의 지배적 믿음들은 이미 내가 향유하는 일상적 삶의 방식 속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 따라서 역사 속에서 특정한 정치공동체가 구성되고 유지되면서 나름의 독특한 개인적, 집단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은 필연적 현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인간 존재는 진정한 정치공동체의 모습과 더 좋은 공존의 길에 대한 열린 존재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동체의 지배적 교리는 시간성 속에서 깨지고 새롭게 형성되며, 이러한 역사적 과정은 반복된다. 따라서 참된 존재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물음 즉 '진리의 추구'는 역사 속에서 제한되거나 감추어지면서도 결코 제거할 수 없는 인간 존재의 가능성으로 남아있게 된다(Heidegger 1962, 57). 이러한 열림과 닫힘의 긴장성 속에서 역동하는 인간 존재의 모습은 진리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의견들을 야기하고 이를 둘러싼 개인적, 집단적 충돌을 끊임없이 촉발한다.

민주주의하에서 인민의 존재는 다수의 역사적 집단성과 그 동질적 힘에 호소하는 대중적 담론에 의해 쉽게 재단되기 쉽다. 민주주의의 보편적 이상의 추구 속에서도 인민의 실존이 딛고 있는 정치공동체의 역사적 맥락과 그 한계는 여전히 지속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전체 인민 개개인에게 정치공동체의 궁극적 권력인 주권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민주주의는 역설적으로 인민의 사회적 단합을 더욱 강조하는 경향을 띠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수의 결정에 의존하는 민주정치의 제도적 특성은 인민들의 개별적 차이보다는 집단적 동질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흐르기 쉽다(Derrida 2005, 104). 이때 대다수 인민의 정치적 단결과 세력화를 강조하며 여타 소수자들을 구별짓고자 하는 포퓰리즘의 흐름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즉 민주정체에서 포퓰리즘의 대두는 단순히 비정상적인 것이라기보다, 주권자인 인민의 동일성과 차이가 다수의 집단성에 대한 강조를 중심으로 표출되는 필연적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포퓰리즘의 움직임이 인민의 존재 의미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열린 탐색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소수에 대한 배타적 억압이 시작된다. 특히 인민의 실존이 공동체의 역사적 맥락과 단일한 경계성에 대한 왜곡된 강조로만 규정되면 민주공동체가 지닌 열린 가능성은 망각되기 쉽다. 인민의 비판적 존재물음이 억압되고 정치공동체의 폐쇄성이 극단적으로 고착화될 때, 타자를 폭력적으로 배제하는 전체주의의 경향성이 쉽게 도래하게 된다(서병훈 2008, 193). 전체주의 속에서 인민의 실존은 소수를 아우르는 진정한 전체가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 일부만의 일시적이고 뒤틀린 결합물로 축소되고 변질된다. 이러한 왜곡된 집합체는 더 이상 건전한 공동체의 유지를 불가능하게 하고 인민의 실존적 기반을 붕괴시킨다. 전체주의 속 개인들은 더 이상 공동체의 닫힘과 열림 속에 역동하는 정치적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존재의 다양성을 배격하는 폐쇄적 집단성에 의존하는 개체로 굳어진다. 한편 공동체의 역사성은 새로운 존재지평을 향한 움직임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향수와 종족적 동질성에 대한 강조로 끊임없이 회귀한다. 즉 민주적 인민이 지닌 다양한 열린 가능성은 역사적 혈연, 인종과 같은 즉각적인 뿌리를 과장하는 편협한 세계관 속에 극단적으로 한계 지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포퓰리즘의 타락은 역사적 동일성과 집단주의의 배타적 표출을 통해 결국 민주정 자체를 붕괴시키고 전체주의의 폭정으로 이어지기 쉽다. 여기서 우리는 인민의 실존을 보다 열린 정치적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구체적 질문에 봉착한다. 포퓰리즘의 필연적 흐름 속에서도 인민의 다양성과 차이를 끌어안는 민주적 정치공동체는 과연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제3절 근대정치사상에서 바라본 인민의 공존 가능성

현대사상이 제기하는 인민의 실존과 민주주의의 문제에 대한 고찰은 오늘날 민주공화정의 기본적 디자인을 제시한 근대의 정치적 사유에 대한 질문으로 우리를 이끈다. 특히 최초의 입헌민주주의 성문헌법을 탄생시킨 논의의 기록물로서 미국『연방주의자 논고(Federalist Papers)』의 사유는 민주주의의 근원적 문제를 파악하고 극복하기 위한 실천적 통찰을 담고 있다(Hamilton, Jay and Madison 2003 [이하 Federalist]). 미국의 헌정구조 디자인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부분은 민주정체의 필연적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인민 모두의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창출하기 위한 공화주의의 강조이다. 공화정체

는 다수의 폭정이 야기할 수 있는 포퓰리즘의 왜곡을 극복하기 위한 다원적 사회체제의 구성, 대의제와 권력분립을 통한 안정된 정부수립 등을 주요 특성으로 한다(태가트 2017, 84). 무엇보다 『연방주의자 논고』에 제시된 민주공화정체에 대한 아이디어들은 단순한 이론 텍스트가 아니라 민주헌법의 기본적 원리로서 현대인의 정치적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근대정치사상이 깔고 있는 인간 존재에 대한 고찰은 오늘날 인민의 실존과 정치적 문제성의 이해에 유용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미국의 헌정 디자인에서 주목할 것은 사회적 통합을 섣불리 강조하기보다 인간 존재의 필연적 분열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간 존재가 정치공동체를 구성하고 하나의 인민으로서 공존하게 될 때 다양한 믿음과 의견의 분출은 피할 수 없다. 사회경제적 격차를 둘러싼 실제적인 논쟁과 갈등이 발생할 때 항상 이를 둘러싼 개인 간 의견의 차이는 특정한 리더와 추종자를 바탕으로 한 집단적 편가르기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분열은 결국 정치공동체의 권력을 둘러싼 "파벌(faction)"의 발생이라는 현실정치적 문제를 야기한다(Federalist, 71-73). 결국 인간 존재가 지닌 관점과 의견의 차이는 특정 정치공동체를 구성하는 인민 내부의 다양한 파벌의 형성과 이들 간의 극심한 생존 경쟁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파벌적 분열의 움직임은 시대를 막론하고 사회적 공존의 토대를 침식하면서 정치공동체를 붕괴시키는 비극적 결과를 초래해 왔다. 그렇다면 인민의 실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파벌의 필연적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핵심적 과제로 대두한다. 파벌의 형성은 각 개인 및 집단의 서로 다른 믿음 그리고 이해관계의 충돌과 직결된다. 따라서 인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견의 형성과 표현을 허용하고 경제적 이익의 추구와 소유권을 보장하는 민주적 체제일수록 파벌의 문제는 더욱 긴급한 문제로 다루어질 수밖에 없다(Locke 2005, 350-353).

미국의 건국자들이 제시한 공화주의적 해법은 파벌의 움직임을 역설적으로 넓은 대규모의 정치공동체 안에서 확장시키는 것이었다(Federalist, 76). 수많은 파벌의 등장은 인민의 분열성을 증대시키지만 사회적 디자인과 제도구성에 따라 공동체 전반의 붕괴로 이어지는 흐름을 차단할 수 있다. 즉 파벌의 확장된 분열은 전체 공동체를 붕괴시킬만한 압도적 파벌의 형성을 막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다양한 파벌들이 큰 규모의 정치공동체 내에 자유롭게 번성할 때, 인민의 실존은 갈등과 분열에도 불구하고 민주정체의 근간을 위협할 정도의 하나의 지배적 파벌로 쉽게 동질화되기 어렵다. 『연방주의자 논고』에 따르면 민주공화정의 안정된 유지는 확고한 헌정체제하에서 중소규모의 파벌들이 각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경합하는 사회적 상황을 창출할 때 가능하다(Federalist, 78). 각자의 믿음과 이익 추구에 기반한 무수한 파벌들 간 경쟁과 공존은 중앙정부가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민주정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레 일어난다. 이때 특정한 파벌 세력이 인민 모두의 공존을 위협하지 않는 한, 인민 개개인들은 자유로이 원하는 단체에 가담하면서 사적, 공적 참여의 평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과 집단의 의견과 믿음은 하나로 규합되거나 동질화되지 않고 각각의 차이를 유지하며 역동적인 다양성을 산출할 수 있다.

한편 사회적 긴장을 한 공동체 안에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파벌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헌정을 수호할 수 있는 강력하고 안정된 중앙정부가 반드시 필요하다(Hobbes 2006, 121-129 [Ch.18]). 이때 미국의 헌정체제가 제시한 또 다른 공화주의적 해법은 직접 민주주의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대의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었다. 공화정체의 핵심적인 특징은 각

지역의 대표자를 인민들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이들이 의회에서 대중의 의견에 휩쓸리지 않고 신중하게 공적인 사안을 심의할 수 있는 제도의 지향이다(Federalist, 237). 민주적 대표자들은 각 지역 민중의 선호를 반영하면서도, 다수의 의견을 단지 따르기보다 공적인 토의 과정 속에서 정의와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대한 나름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공화정체는 임기제를 통해 주기적으로 대표자들을 새롭게 선출함으로 정부 내 파벌의 형성과 확대를 차단하고, 심의기구를 통해 다수와 소수의 공존을 위한 방향으로 심도있게 입법이 진행되도록 한다.

나아가 미국헌법은 정치권력을 기능별로 분립함으로써 정부 내 주요 파벌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제도적으로 관리하고자 했다. 인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권력기능을 입법과 행정 그리고 사법으로 구분하고, 각각 독립적인 지위와 힘을 부여하는 동시에 서로 간에 경쟁과 견제를 통해 권력독점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결국 권력의 핵심부에서 그 어떤 파벌도 인민주권을 독점할 수 없다. 『연방주의자 논고』의 사유는 권력에의 욕망을 가지고 있는 정부 리더들의 인간적 본성을 직시하면서, 이들을 서로 경쟁시켜 권력의 집중화를 방지하고자 한다(Federalist, 318-319). 즉 정부구조 내의 파벌적 경쟁 체제를 통해 엘리트들이 정치적 야심을 서로 조율하게 하면서 민주공화정체의 지속가능한 권력기반을 구축하고자 한 것이다. 권력분립의 원칙은 정부의 지도자와 관료들 중 일부가 민주정부의 모든 기능을 장악하는 강력한 파벌집단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한다. 『연방주의자 논고』의 사유는 1) 거시적 차원에서 파벌성의 사회적 확장과 자율적 경쟁을 통해 인민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방향을 추구했다면, 2) 미시적 차원에서는 권력분립을 통해 정부구도 안에서 파벌들 간의 견제와 균형을 안정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을 제시한 것이다.

『연방주의자 논고』는 인민의 실존이 단순히 다원성의 강조 혹은 평화로운 공존의 이상적 원칙으로만 유지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준다. 정치적 존재로서 인민의 규율은 서로 다른 인간 존재들이 서로 충돌하고 경합하며 형성되는 파벌성의 문제에 끊임없이 직면해야 한다. 근대 민주공화정의 실존적 통찰은 민주주의의 필연적 불안정성을 확고한 헌정원칙과 공화주의적 제도의 수립을 통해 조율할 수 있는 실천적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연방주의자 논고』는 여러 포퓰리즘 세력들 간의 역동적 충돌과 조화의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민주공화정의 제도적 디자인이 결국 “공공선(public good)”과“정의(justice)”를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한다(Federalist, 322). 그러나 민주공화정의 헌정원칙이 지향하는 것은 단순한 이상적 목표의 선언이 아니다. 민주공화정체의 지속가능한 자유와 평등은 파벌들의 현실적 갈등을 수용하면서도 다수와 소수, 인민 전체의 공존을 함께 추구하는 역동성에 기반한다.

그러나 다양한 자치공동체의 구현, 대의제, 삼권분립 등의 혁신적 원리를 제공하고 있는 근대 민주공화정의 아이디어도 내재적 한계를 지닌다. 근대정치사상은 민주정이 지향하는 정의에 대한 본질적 물음에 집중하기보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지닌 파벌들의 역학관계와 경쟁구도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의 자발적 표출을 용인하는 헌정 원칙은 민주정체의 제도적 유지를 보장하면서도, 인민의 의식 깊숙한 곳에서 싹트는 도덕적 회의주의와 상대주의의 확산을 차단하기는 어렵다(서병훈 2008, 174). 인민들이 민주정체 그 자체의 유지에 초점을 두게 되면 과연 어떠한 삶이 더 선하고 좋은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방기되기 쉽다. 다양한 파벌적 교리들이 용인되는 다원주의하에

서 각 개인이 정의나 공공선의 존재, 미덕과 진리의 가능성 자체에 대한 진지한 사유와 대화를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허무주의적 삶의 모습은 결국 민주공화정의 열린 시각 자체를 부정하는 독재자의 대중선동 혹은 전체주의적 파벌의 등장 앞에 무력하기 마련이다. 일상적 삶의 윤리의식에서부터 극우 담론이 대중적 의견과 여론을 잠식해 갈 때, 이러한 흐름을 단지 파벌들 간의 역학관계나 권력분립, 대의제의 제도적 기제만 가지고 막아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즉 민주공화정의 유지와 인민주권의 안정된 실현을 위해서는 정의와 여타 덕성에 대한 실존적 고민이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도적 메커니즘에 의존하는 근대정치사상의 한계는 민주정체의 도덕적 근거에 대한 원초적 고민이 담긴 고대정치사상의 문제의식을 다시 돌아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제4절 고대정치철학이 제기한 인민의 자유와 우애의 문제

고대정치철학의 기초를 닦은 플라톤은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를 "자유(eleutheria)"로 제시한다(Plato, Republic 557b; Aristotle, Politics 1317a40).[1] 민주정체의 인민들이 갈망하는 자유의 의미는 특별하다. 민주정의 자유는 부, 권력, 명예 등 다른 가치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기보다 이 모두를 허용하는 욕망의 다원성을 지향한다. 이러한 민주적 자유의 의미는 사실상 모든 가치를 초월한다. 민주정체의 자유로운 삶 속에서 다양한 가치들의 공존에 익숙해진 인민 개개인들은 어떠한 특정 가치의 지배를 배격한다. 만약 시대 상황에 따라 특정한 가치가 인기를 끈다 하더라도 다원적인 사회에서 이러한 현상은 단지 일시적일 뿐이며 결코 진리의 위치를 점할 수 없다. 민주정에서 모든 인민들은 자신들의 취향과 선호에 맞게 다양한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기 때문이다(서병훈 2008, 174). 민주적 권리의 근간으로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다양한 개인과 집단의 공존에 심각한 방해가 되지 않는 이상 공동체의 제도적 원칙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이렇게 제도화된 다원성과 상대주의적 삶의 양식 속에서 민주적 인민의 실존이 구성된다. 일상 속에서 민주 시민들은 민회에서의 공적 논의, 광장에서의 자유로운 토론, 그리고 개인적 이익의 추구까지 모든 차원의 자유를 누리고자 한다. 이때 시민들의 의식 속에서는 타인의 견해와 삶의 방식에 대한 관용이 주도적인 원리로서 자리 잡고 민주주의의 일상적 태도와 세계관을 구축한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열망하는 자유 속에서 인간적 욕망의 다양한 표출이 보여주는 현실적 공존의 모습은 그 근본에서부터 한계를 보인다. 민주적 삶은 민주정과 다른 정치적 삶의 방식에 대한 견해를 적극적으로 주창하는 사람들의 비판과 공격 앞에 취약하다. 민주적 자유는 여러 가치들의 공존만을 주장할 뿐 그 스스로가 왜 다른 삶의 방식보다 더 진리에 가까운지 주장하기 어렵다. 민주주의하에서 추구되는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한 관용은 어떤 삶이 진정한 의미가 있는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수행하기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Republic 561c). 옳음이나 정의의 문제가 일상에서 쉽게 등한시되거나 무시될 때 인민의 실존은 그 스스로의 의미와 정당성의 근거를 찾기 어려운 허무주의의 늪에 빠지게 된다. 그럼에도 민주적 삶 속에서 인민들은 더 이상 도덕적 선과 진리에 대한

1)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고전 텍스트 인용은 표준화된 방식을 따라 스테파누스 번호(플라톤 저작), 베커 번호(아리스토텔레스 저작)를 각각 표기한다.

철학적 물음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불편하게 생각한다. 민주정의 자유는 그 어떤 견해와 믿음의 추종에도 관대할 것을 요구하지만 그 취약성은 다원주의적 경향 속에서 은폐되기 쉽다.

고대정치사상의 관점에서 민주정체 속 인민의 실존은 이처럼 그 스스로의 존재방식을 지켜내고 정당화하는 데에 있어 모순되고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다. 민주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행복한 삶은 의견과 사상,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하에 인민들의 현 상황을 비판적으로 논의하고 최선의 삶의 방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유하기 어렵게 한다. 그러나 바로 이 자유로운 상황 속에서 민주정체의 다양성과 관용의 가치 확산에 대한 혐오와 전복을 시도하는 전체주의와 독재정의 독버섯 또한 싹트기 쉽다. 따라서 민주 시민들은 이러한 왜곡된 사회적 흐름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인민주권의 원칙에 기반한 민주적 삶이 어떻게 하면 다른 정체의 삶보다 더 좋을 수 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정이 추구하는 모든 인민의 자유가 왜 돈, 권력, 명예 같은 다른 가치들보다 아름답고 소중한지를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민주적 삶의 방식이 지속적으로 야기하는 상대주의와 허무주의의 풍조는 진리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일상에서 중요한 도덕적·윤리적 문제제기를 종종 어렵게 만든다.

파벌들 간 갈등이 지속되는 정치적 현실 속에서 권력에의 욕망을 지닌 자들이 웅변술과 온갖 수사적 기교를 동원해 다수의 인민을 선동할 때 민주정은 심각한 위기에 처한다(Republic 565e). 특히 민주정치의 혼란기에 대중적 리더가 쉽게 호소할 수 있는 인민의 역사적 정통성과 인종적 우월성에 대한 강조는 고대정치사상에서도 핵심적인 문제로 거론된다. 고대정치사상에서 묘사하는 포퓰리즘의 고전적 문제는 오늘날 극우선동정치와 함께 대두하는 민주정의 위기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아테네 민주정의 대표적 지도자인 페리클레스의 전몰장병들을 위한 장송연설에서도 아테네 인종의 우월성과 역사적 뿌리에 대한 강조는 주요 내용을 차지한다(Menexenus 244a). 고대와 현대를 관통하는 인민의 실존에 대한 고전적 통찰은 정치공동체가 결코 인간의 보편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강조만으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을 드러낸다. 특히 민주적 공동체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개인과 집단들 간의 자유로운 공존 속에서도 특정한 동질성과 유대감을 바탕으로 사회적 통합과 나름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 결국 인민의 실존은 시간의 흐름 속에도 모두를 지속가능한 하나의 공동체로 엮는 역사의식과 미래를 향한 기대감을 공유할 수 있는 확고한 공존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이때 혈연, 전통과 관습, 언어, 민족성 등의 동질적 유대감에서 비롯한 시민적 우애 혹은 정치적 친밀감이 공동체의 중요한 기반으로 제시된다.

고대철학은 민주정체에서 중시되는 시민적 우애의 문제에서부터 우애의 기초를 구성하는 인간적 우정(philia)의 본질에 대한 질문까지 파고든다(Plato, Lysis, 212a ff.; Aristotle, Ethics, bks. 8-9). 고대철학의 사유는 우정이 단순히 인간 모두의 평화를 자연스레 보장하는 보편적 가치로서 쉽게 정의되거나 규정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친구의 일반적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운 데서 드러나듯, 우정의 본질은 항상 모호하다(Lysis 222e). 더군다나 현실 속 우정은 복수의 인간들 간에 형성되는 특정한 경계를 설정하기 마련이며, 모두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 우정이 지닌 모호성과 한계의 문제는 특정한 정치공동체 속의 인민의 실존을 구성하고 지탱하는 시민적 우애에도 적용된다. 인간적 우정과 우애가 추구하는 특정한 존재들 간의 끈끈한 정서적 울타리는 공동체를 유지시키기도

하지만, 공동체들 간의 경계짓기를 통한 갈등과 투쟁을 야기하기도 한다. 동료시민의식 혹은 애국심 등으로 발현되는 정치적 우애는 특히 보편적 인권을 강조하는 민주정체에서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인민들의 민주적 동지애의 바탕이 되는 시민권은 모든 타자에게 무한정 부여되지 못하고 특정한 정치공동체의 상황에 맞추어 한정된다. 민주적 우애가 특정한 민주정체 경계바깥의 외국인이나 이방인들을 같은 인간적 지위를 지닌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수용하지 못하고 배척하는 경향을 띨 수 있기 때문이다(태가트 2017, 165). 민주정체가 지닌 포퓰리즘의 기본적 경향성은 다수의 동질적 우애심에 대한 편협한 강조와 결합될 때 소수의 추방과 제거를 용인하는 전체주의로 흐를 위험성을 내포한다.

인민의 자유와 우애의 모순성에 관한 고대정치사상의 통찰은 민주적 다원주의 속에서도 결코 포기될 수 없는 진리 추구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오늘날 입헌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초를 제시한 근대정치사상의 사유는 다수의 폭정과 파벌성 등 민주정의 핵심 문제를 간파하면서 공화주의적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근대적 사유는 다양한 파벌 간 세력균형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환경 조성과 대의제, 권력분립 등 정부권력구조를 효과적으로 디자인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고대정치철학은 이러한 헌정원칙과 정치제도의 체계적 구상 이전에, 민주정의 도덕적 존립근거에 대한 물음이 여전히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즉 민주적 삶의 방식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자유와 우애의 추구가 담고 있는 윤리적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사유를 방기하지 말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민주정의 법제도를 창출하고 자유로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민들은 공동체의 정치적 삶에서 미덕을 갖추는 노력을 필요로 한다. 대중선동세력에 대해 용기 있게 대항하면서 정의를 추구하는 인민의 모습은 정치공동체 자체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다수 인민들은 자신의 자유와 욕망을 절제 있게 추구하고 의견을 지혜롭게 소통하는 태도를 통해서만 편협한 배타적 교리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도덕적 상대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덕을 질문하는 인간 유형을 민주정체에서 구현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결국 인민의 실존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질문이다. 민주주의는 스스로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다원적 체제하에서 진리추구의 자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제5절 인민의 정치적 실존과 참된 민주주의의 지향

민주주의 체제에서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인간적 고민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정된 공동체를 유지하면서도 '더 나은' 공존의 방식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유지하느냐의 실존적 질문일 것이다. 인민의 실존에 내포한 정치적 문제는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결코 쉽게 해소되지 않고 각 시대별로 특정한 맥락에서 변주되며 제기되어 왔다. 인간 존재는 역사 속에서 특정한 경계와 함께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어떤 공동체의 인민으로서 살아간다. 동시에 인간 존재는 이 경계를 넘어서는 존재의 새로운 가능성을 갈망하기도 한다(캐노번 2015, 110-111).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현대의 존재론적 사유는 존재 자체에 대한 물음 그리고 그 물음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제기한다. 존재물음에 대한 실존적 고찰은 기존의 철학적 체계나 종교적 교리에 의존하지 않고, 시간의 흐름

속 존재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냉정한 직시를 하게 한다. 인간적 존재물음은 정치공동체의 역사적 상황과 지배적인 의견에 영향 받으며 일상적으로 한계 지워지는 인민의 실존적 현실을 반영한다. 이러한 실존적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직면을 통해 인간 존재는 나 혹은 우리의 일상적 삶의 맥락을 구성하는 정치적 존재의 진실과 대면할 수 있다.

인민주권 원칙하에서 다수결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민주주의 제도운영의 특성상 포퓰리즘은 피할 수 없는 핵심적 현상이다(태가트 2017, 192). 포퓰리즘의 주기적 발생은 기존 기득권세력에 대항해 민주주의를 이끄는 주체로서 인민의 실존적 의미에 대해 진지한 질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포퓰리즘의 움직임이 도덕적 상대주의와 인종주의 등 편협한 존재규정과 융합하게 되면 민주정체의 열린 가능성은 오히려 약화되고 소수의 존재 의미가 부정되는 폐쇄적 여론이 형성된다(서병훈 2008, 174). 이때 다수의 힘에 호소하기 위해 인민의 실존을 계층과 인종 등에 근거해 편협하게 규정하고, 공동체 전체를 편향된 방향으로 이끄는 배타적 포퓰리즘이 등장하기 쉽다. 포퓰리즘의 타락 가능성은 결국 민주주의의 일상과 내면의식에서부터 전체주의나 여타 극우세력이 언제든 발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흐름이 기층에서 확산될 때 다수와 소수를 포함한 인민 모두의 존재 기반으로서 민주공화정체는 결국 파괴될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주정체의 자유가 지니고 있는 도덕적 상대주의와 우애의 배타성의 고전적 문제를 제기하는 고대정치사상의 고찰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2)]

포퓰리즘을 진지하게 접근한다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인민 모두의 정치적 실존에 대한 고전적 질문에 직면하는 것이다.[3)] 민주주의는 다수와 소수의 정치적 구분문제가 아니라, 전체 인민의 자유와 인간다운 삶 그리고 이를 위한 최선의 제도적 디자인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정이다. 민주정체 자체의 유지를 위해 제기되는 윤리적 질문의 필연성은 결국 민주주의가 진리에 대한 지향과 괴리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진리에 대한 고민은 인간 존재의 의미 추구와 정치공동체의 실존적 진실에 대한 사유를 수반한다. 따라서 민주정체에서 인민의 실존은 존재 자체의 의미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해서 인민의 실존이 지향하는 자유와 평등, 우정과 연대의식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연결 짓는 노력 속에서 유지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민주주의가 지닌 취약성과 배타성을 신중히 통찰하고 존재의 필연적인 경계지음 속에서도 보다 열린 가능성을 끊임없이 지향하는 인간적 공존의 방식으로서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지켜갈 수 있을 것이다(진태원 2017, 36). 민주주의는 단지 지금, 여기 멈추어선 나 혹은 우리를 지켜줄 무언가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결국 나, 우리 혹은 그들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고 더 좋은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 어렵지만 계속 함께 걸어가야 할 인간 존재의 길이다.

---

2) 철학은 바로 자유를 지고의 가치로 하는 고전적 민주주의의 토양에서 자라났으나 민주주의가 지닌 한계성과 집단적 배타주의의 가능성은 결국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제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관용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질서가 그 한계너머 진리를 향한 철학적 비판을 견뎌내지 못할 수 있다는 고전적 문제를 드러낸다.

3) 진정한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찾고자 하는 현대인들은 배타적 선동정치 등 포퓰리즘과 연관된 여러 정치적 문제들을 단순히 비판하는데 그치지 말고, 포퓰리즘을 통해 제기되는 민주주의의 근원적 한계에 대해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참고문헌

김남국. 2019.『문화와 민주주의』. 서울 이학사.

서병훈. 2008.『포퓰리즘: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와 선택』. 서울: 책세상.

진태원. 2017.「포퓰리즘, 민주주의, 민중」. 진태원 편,『포퓰리즘과 민주주의』. 서울: 소명 출판, pp. 19-54.

주디스, 존. 2017. 오공훈 옮김.『포퓰리즘의 세계화』. 서울: 메디치.

캐노번, 마가렛. 2015. 김만권 옮김.『인민』. 서울: 그린비

태가트, 폴. 2017. 백영민 옮김.『포퓰리즘: 기원과 사례 그리고 대의민주주의와의 관계』. 파주: 한울 아카데미.

Aristotle. 1985. Politics, translated by Carnes Lor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_____. 2003. Nicomachean Ethics, translated by Harris Rackham.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Derrida, Jacques. 2005. The Politics of Friendship, translated by George Collins. London: Verso.

Hamilton, Alexander, James Madison, and John Jay. 2003. The Federalist Papers, edited by Charles Kesler. New York: Signet Classic.

Heidegger, Martin. 1962. Being and Time, translated by J. Macquarrie and E. Robinson. New York: Harper & Row.

Hobbes, Thomas. 2006. Leviatha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Levinas, Emmanuel. 1969. Totality and Infinity, translated by A. Lingis. Pittsburgh: Duquesne University Press.

Locke, John. 2005. Two Treatises of Govern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lato. 1991. Republic, translated by A. Bloom. New York: Basic Books.

_____. 1925. Lysis, Symposium, Gorgias, translated by W. Lamb.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_____. 1999. Timaeus, Critias, Cleitophon, Menexenus, Epistles, translated by R. bu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토론 1

「서양정치사상에서 인민(people)의 실존과 정치적 문제성」 발제문에 대한 토론

오수웅(숙명여자대학교)

상기한 글은 인민의 실존,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의 문제에 관해 깊은 철학적 사유와 고민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도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이 요구되는 오늘날에 좋은 보기가 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사유와 고민의 궤적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인민의 실존을 탐구하는 개인의 상황과 조건, 둘째, 첫째와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관계와 전개 속에서 나타나는 포퓰리즘의 순기능과 역기능, 그리고 셋째, 근대 미국의 공화주의와 고대 아테네 철학에서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의 순기능적 결합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 사상적 방안의 탐색이다. 필자는 글에 나타난 모든 사유와 고민에 전적으로 동의하기에, 세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리하고 좀 더 생각해볼 거리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토론의 소임을 갈음하고자 한다.

첫째, 개인은 일상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묻는 경험의 반복에서 실존을 탐구한다. 인민의 실존은 "타자와의 함께함"의 공간이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해 지속되는 과정에서, 특정한 공동체의 역사적 상황과 "진리의 추구" 결과의 차이에 의해 달리 규정된다. 그래서 인민의 실존에 관해 다양한 견해가 생성될 수밖에 없고 지배적인 견해가 등장할 때 서로 갈등하며 공존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글은 이렇게 인간이 실존의 의미를 탐구하는 상황, 과정, 결과 현상을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모든 개인이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고 있는지, 또 인민의 실존을 탐구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탐구'하는 개인은 소수에 불과하고 이들이 이질적인 견해의 생성과 확산, 그리고 특정 견해가 지배적인 견해가 되도록 주도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다. 어떤 고유한 성질을 가지는 사회란 실재하지 않고 사회는 단지 '개인들의 합'일 뿐이라는 관점에 따르면, 인민은 실재하지 않고 인민의 실존에 관한 어떠한 견해도 인민의 실존을 대변하거나 규정할 수 없다. 이는 인민의 실존에 관한 어떤 지배적인 견해가 있다면, 그 견해를 누가, 어떻게, 왜, 지배적이게 만들려는 것인지를 질문해야 함을 시사한다. 포퓰리즘 현상이건 다른 어떤 이념이건 모두, 역사적으로 '인텔리겐차'로 불리기도 하는 소수의 지식인이 규정해왔다. 포퓰리즘이 인민의 실존에 관해 대두되는 견해이고 민중주의 또는 대중주의로 번역될 수 있다면, 다수의 민중이나 대중과는 상관없이 규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누가, 어떻게, 왜 포퓰리즘을 지배적인 견해로 만드는 것인지를 물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민주주의는 다수의 결정에 의존하기에, 실존에 관한 열린 질문과 탐색에 따른 다원적인 가치(견해)의 표출을 허용하면서도, 역설적으로 개별적인 차이보다 집단적 동질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수의 단결과 세력화를 강조하며 여타 소수를 구별하려는 포퓰리즘이 나타난다. 그래서 포퓰리즘은 민주주의 아래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아니라 필연적인 현상이다. 포퓰리즘은,

역사적으로 인민 중 소수가 실존을 규정하고 그에 따라 다수를 과도하게 지배하는 현상이 나타날 때, 다수가 실존을 새롭게 규정해서 과도한 지배에 대항함으로써 양자의 균형과 공동체의 안정을 가져오는 순기능을 해왔다. 그러나 공동체의 역사적 맥락과 단일한 경계에 대한 왜곡으로 실존이 규정될 때, 소수에 대한 배타적 억압이 발생해서 전체주의로 변질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에, 포퓰리즘은 '민주공화국'을 붕괴시키는 역기능을 할 수도 있다.

여기서 만약 개인이 자신과 인민의 실존을 탐구하는 현상이 보편적이라면, 포퓰리즘은 모든 정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것이므로, 포퓰리즘이 과연 민주주의에 고유하고 필연적인 현상일지를 질문할 수 있다. 포퓰리즘은 어느 시대, 어떤 공간의, 어떤 정체건, 현재하는 권력이나 질서를 바꾸길 원하는 '소수 안의 소수', '다수 안의 소수', 또 '다수의 소수'에 의해서 주창될 수 있다. 전체주의와 같은 포퓰리즘의 역기능이 '소수 안의 소수'와 '다수 안의 소수'가 그와 입장을 달리하는 다른 소수에 의한 권력의 장악을 방지하기 위해 일련의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강제할 때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다수의 소수'가 기존의 지배 질서를 바꾸기 위해 대항하는 것을 과연 역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지를 질문해야 할 것이다. '다수의 소수'가 일어선 상황이라면 이미 그 국가는 '민주공화국'에서 벗어난 상태일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포퓰리즘의 역기능은, 흔히 우려하듯이, '다수의 소수'에 의한 현상이 아닐 수 있으며, '소수 안의 소수'와 '다수 안의 소수'에 의해 씌워진 누명일 수 있다. 순기능과 역기능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

셋째, 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 포퓰리즘의 역기능을 완화 또는 제거하고 순기능을 하게 하는 지혜(제도와 사상)를 미국의 건국이념과 고대에서 현대로 계승되고 있는 공화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인민의 정치적 실존을 규정하려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파벌을 양성화하고 사회 전체로 확장해서, 다양한 견해를 생성하고 정치적으로 표출할 것을 보장하면서도, 특정한 견해가 지배하지 않게, 그래서 압도적인 파벌이 등장하지 않게 서로 견제하는 상황을 조성한다. 둘째, 이를 위해 특정한 견해나 파벌에 휘둘리지 않는 안정된 정부가 필요하고, 직접 민주제보다 대의제가 정부의 안정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정체를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구성해서 견제와 균형에 이르게 한다. 넷째, 민주、공화주의의 결합은 "더 좋은" 견해를 도출하려는 사유와 대화의 진행을 어렵게 하기에 인민의 실존에 대한 회의주의나 상대주의에 취약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유를 제한하거나 절제하고, 인민 상호 간의 우정(philia)에 기초한, '절제된' 동료 시민의식 혹은 애국심 등을 진리의 차원에서 발현할 수 있는 인간을 양성해야 한다.

이런 사유와 고민은, 민주주의에서 포퓰리즘은 공화주의 제도와 진리와 덕을 추구하는 교육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런데 만약 민주、공화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 포퓰리즘이 등장하고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면, 이것은 제도의 실패인가 아니면 교육의 실패인가를 질문할 수 있다. 또 반대로 양자나 어느 하나의 성공이 아닌가를 반문할 수도 있다. 포퓰리즘은 자유주의, 사회주의 등의 이념이나 정체, 심지어 교육의 문제도 아닐 수 있음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오히려 인민의 실존을 탐구하고 규정하려는 것 자체가 포퓰리즘의 시작일 수 있음을 인식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처음의 질문으로 환원되는, 플라톤이 언급한 "수벌"(drone)의 등장일 수 있다. 오늘날의 민주、공화주의가 '드론 정치의 시대'를 연 것이 아닐지를 성찰해야 한다.

발제 2

한국정치사상에서 people의 대응 개념과 그 의미, 그리고 포퓰리즘

안효성(대구대학교)

한국의 역사와 전통 정치사상에서 서양어(영어) '피플(people)'에 대응할 수 있는 개념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그리고 그 개념이 지시한 대상과 존재들의 정치 사회적 위상과 역할은 어떠했을까? 해당 존재에 대한 위정자들의 정치적 인식과 태도는 어떠했을까? 한국정치사상의 맥락에서 여러 이름으로 호명되었던 인민 대중의 의미와 작동을 조명해 봄으로써, 우리는 현재 한갓 선동적 대중영합주의라는 오명을 쓰고 정쟁의 키워드로 악용되고 있는 '포퓰리즘(Populism)'이란 단어의 오남용 때문에도 쉬 잊히는 정치의 근본을 돌이켜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한국 민주주의 현실의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제1절 people에 해당하는 동양 고대의 명칭들

라틴어 포풀루스(populus)에서 유래한 영어 people은 흔히 '인민'이나 '민중'으로 번역되지만, '대중', '평민', '군중' 등의 의미도 가지며 의미의 역사적 변천까지를 고려하면 복잡성이 따르는 것처럼, 한국을 위시한 한자 문화권의 전통에서 people에 직접 맞대응하는 개념어 한 가지를 단 한 글자로 된 한자어 중에서 찾는 것은 쉽지 않다. 고대 로마에서 원래는 '포풀루스'가 귀족만을 의미했지만 점차 평민까지를 포함한 전체 시민을 뜻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가 더 뒤에 가서는 평민만을 지칭하는 쪽으로 의미가 역전되기도 한 것을 감안하면, 한자 문화권의 동양 전통에서는 사람 일반을 뜻하는 보통명사로 쓰이기도 한 동시에 노예주 내지 통치계급을 지칭하는 단어였던 '인(人)'[4]과, 대개 노예 및 피통치계급, 평민을 지칭하는 단어였던 '민(民)'을 합하거나 병칭한 낱말로 널리 쓰인 '인민'이 그나마 가장 people의 의미에 가까운 개념일 것이다.

people이 평민, 보통사람을 지칭하는 쪽의 의미를 강하게 가지는 경우에는 '민'이 그 대응어로 적절하다 할 수 있다. 한자 단어 '민(民)'은 전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1)사람 내지 인간[人] 그리고 전체로서의 인간, 2)군주에 의해 통솔되는 중서(衆庶), 즉 백성, 3)관위(官位)가 없는 서인(庶人), 4)토착(土著) 중서[5], 5)농민 이외의 중서로서 사(士)·공(工)·상(商), 6) 죽은 자에 대해서,

4) '인(人)'도 고대에는 이민족 포로를 지칭하는 용어로 많이 쓰였으므로, 본래부터 노예주나 통치계급만을 한정해 가리키는 말은 아니었던 것이다.

5) 자국에서 계속 거주해온, 관직을 맡지 않은 사(士) 계층(또는 설사 관직을 맡았더라도 미관말직인 사 계층)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 직접 농사짓는 농민을 말한다.

살아있는 사람(중서) 등이다.[6] 곧 민은 군(君), 왕(王), 군자(君子), 인(人), 맹(氓)[7], 사공상(士工商), 귀신(鬼神) 등과 대비되는 성격을 갖는다. 민중(民衆), 민인(民人), 민서(民庶), 인민(人民), 서민(庶民), 려민(黎民), 백성(百姓), 서인(庶人), 중인(衆人) 등도 민과 거의 같은 의미를 갖는 말들이다.

이때의 '민'은 아직 '개인'으로 분해되지 않은 일종의 '집합체[衆庶]'의 의미가 강한 다소 추상적인 뉘앙스를 지니고 있었으며, '평등'과는 거리가 먼, 어디까지나 피치자계급(층)에 속하는 것이었다.[8] '민초(民草)'라는 이미지가 반영하고 있듯이, 그들은 '통치의 주체'가 아닌 '통치의 객체'에 불과했고, 적극적인 의미의 '정치 참여'는 확실히 그들의 너머에 있었다. 바로 이 점은 '주권의 소재'와 관련하여 '민주주의(democracy)'와 확연히 구별되는 측면이다.[9]

그럼에도 동양 정치의 주류 의식, 특히 유교 정치관에서는 민을 가벼이 여기고 학대해서는 안 되며,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편안히 잘 보살펴야 한다는, 한 마디로 부모가 자식 대하듯, 성한 사람이 다친 사람 대하듯 어질게 대해야 한다는 (관념적인 것으로나마) 의식과 행동상의 규범이 존재했다. "민은 오로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확고해야 나라가 편안하다"(『상서(尙書)』, 「오자지가(五子之歌)」), "군주는 민을 체(體)로 삼는다"(『예기(禮記)』, 「치의(緇衣)」), "민은 국가의 근본이다"(『회남자(淮南子)』, 「주술훈(主術訓)」), "민은 제후의 근본이다"(『신서(新書)』, 「대정상(大政上)」), "민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며, 군주는 오히려 가벼운 것이다. 구민(丘民)의 마음을 얻은 이가 천자가 되고, 천자의 신임을 얻은 이가 제후가 되고, 제후의 신임을 얻은 이가 대부가 된다."(『맹자(孟子)』, 「진심하(盡心下)」),[10] 등의 말은 모두 "민은 귀하다"는 의식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러한 주의 주장이 민본사상(民本思想) 또는 민본주의(民本主義)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민본사상에 기초하여 백성들을 교화하고 그들의 신뢰를 얻어내는 것이야말로 유교에서 말하는 '덕치주의(德治主義)', '인정(仁政)', '왕도(王道)'인 것이다.

제2절 전근대 한국사에서 people의 대응 개념들과 지위

한국사에서 나타나는 people의 대응 개념으로 눈여겨볼 것에는 '민' '인민', '국민(國民)', '시민(市民)', '백성'이 있고, 정치사상적 의미에서 좀 더 적극적인 의미를 투여해 보자면, '신민(臣民)'과 '사민(士民)' 개념까지도 포함해 볼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인민'이라는 단어가 2,504회, '백성'이란 단어가 1,728회 등장하며, '국민'은 163회, '시민'은 395회 등장하는 것이 확인되기도 한다. 이때 등장하는 국민이나 시민이란 용어는 오늘날 서양의 개념어를 번역한 낱말일 때와 그 의미가 똑같지는 않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유사한 의미가 담겨 있을 때도 있다.

---

6) '중(衆)'은 원래는 경작자를 의미하는 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분적 의미를 지니는 용어가 되었다.
7) 다른 곳(나라)에서 귀화해 온 민이 맹으로(段玉裁, 『設文解字注』. "自他歸往之民則謂之氓."), 토착 농민으로서의 민에 대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맹 역시 넓은 의미의 농민이다.
8) '민'이란 글자가 사용된 것은 상(商)나라 때부터인 것으로 확인되지만, 그 단어가 피통치자 전반을 지시하는 용어로 보편화된 것은 춘추전국(春秋戰國) 시대 이후다.
9) '제민(齊民)'이라는 용어도 쓰였는데, 이때는 민이 지배자와 이념상으로는 평등하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10) 맹자는 "'민'이 정치체에서 차지하는 존재론적 위상을 군주보다 상위에 위치시키고, '민'이 공통으로 표출하는 일반의지에 최고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맹자는 '민'이 표출하는 일반의지를 '우주적 공공이성'(道)을 주재하는 '천'(天)의 대리적 표현으로 간주한다."(이승환, 2005, p. 9)

‘인민’의 의미를 함축하기도 하면서 관리나 지배계급 이외의 피통치계급 일반, 군주 밑의 백성 일반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가장 폭넓게 사용되었던 단어는 ‘민’이었다. 전통적으로 양반과 평민을 모두 일컫는 말이었던 ‘사민’과 관원과 백성을 아우르는 말이었던 ‘신민’은 군신공치(君臣共治)를 지향하는 유교 정치사상에서 ‘민’의 정치적 의미와 지위에 대한 적극성을 더욱 배가시키는 개념으로 자리하며, 19세기 말 이후로는 서구적 공화정치의 주체로 ‘사민’ 개념이 부각되기도 했다.

people에 대응하는 전근대 한국사 중의 개념과 그 개념이 지시하는 계급적 존재들은 넓게는 정치에 있어 능동적 위치에 있는 존재와 피동적 위치에 있는 계층을 포괄했고, 좁게는 피동적 피지계 계층에 한정되었다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피지배 기층민중으로서의 ‘민’조차도 위정자들의 정치 운영에 있어 최우선 계산 대상이었고, 부정의한 폭정이 아닌 한 민은 정치에서 가장 귀한 자산이자 정치와 정권의 정당성을 보증하는 원천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들의 존재는 정치의 상수에 다름없었고, 그들의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은 정치의 목적으로 간주되었다. 심지어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특정한 간헐적 시기에 보여주는 봉기와 항쟁의 방식을 통해 그들은 정치변동의 주요 주체들로 역할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인민’이란 어휘는 ‘국민’이나 ‘시민’은 말할 것도 없고 ‘백성’보다도 더 많이 등장한다.[11] ‘인’과 ‘민’이 사람을 지칭하는 데 쓰인 한자 문명권의 가장 오래되고 핵심적인 단어였던 만큼, ‘인민’은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집합적 사회구성원 일반을 가리킬 때 가장 흔하게 사용되었던 것이다. 다만 중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인과 민은 합쳐진 한 단어였다기보다는 주로 인은 관리 이상의 지배층을 의미하고 민은 평민과 피치자를 의미하는 쪽으로 서로 구별되어 사용되었으며, 인민이라고 하였을 때는 인과 민이라는 두 낱말을 나란히 병렬하여 인과 민을 모두 아울러 지칭하기 위함이었다. 인민은 광범위한 개념이었지만, 군역과 부세를 담당하는 국가의 중심 자원으로 취급되었고 그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관리는 정치의 가장 주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조선왕조실록 중 세종실록에서 517회, 성종실록에서 258회, 중종실록에서 221회, 선조실록에서 358회 ‘인민’이란 글자가 등장하는데, 이때가 국가체제 정비와 백성에 대한 정치 개입이 빈번했던 시기임을 감안하면, 인민이 정치의 중요한 객체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12]

‘국민’이란 단어는 태조실록에도 이미 등장하고 조선 시대 기록에서 자주 발견되지만, ‘백성’이나 ‘인민’에 비해 19세기 말까지는 널리 쓰이지 않았다. 오히려 ‘nation’의 번역어로 사용되면서 근대적인 정치 주체의 의미로 널리 쓰이기 시작한 것이다. 전통적으로는 영토적 정치 공동체 단위를 의미하는 ‘국’과 집합적인 사람들을 지칭하는 ‘민’을 병칭하거나, 국의 구성원이란 의미로 쓰일 때 국과 민을 병기해 사용하였다. ‘국인(國人)’이나 ‘국중인민(國中人民)’과 같은 말도 국의 구성원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다.

‘국’과 ‘민’의 관계는 불가분리적인 밀접한 관계였고, 경제적이고 인신적인 차원에서 조선이라는 나라의 부세와 역을 담당하는 국민은 조선의 위정자들에게 있어 정치의 목표나 정당성과 관련하여 중차대한 의미를 지니는 존재였다. 따라서 표현만 다를 뿐 이런 의미를 갖는 용어로서의 ‘국민’은 ‘인민’이나 ‘민’ 혹은 ‘백성’의 개념과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정도전(鄭道傳)은 “대개 군주는

11) 중국의 사료에서도 ‘인민’의 등장 빈도는 잦다. 『이십오사(二十五史)』에서 인민은 304회 출현하는 반면 국민은 13회 등장한다.
12) 조선시대 후기에 가면 ‘민인(民人)’이란 표현이 더 자주 사용되기도 한다.

나라[國]에 의존하고 민에 의존한다. 민은 나라의 근본이며 군주의 하늘이다. [...] 인군(人君)된 자가 이 뜻을 안다면 애민(愛民)하는 것이 지극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로 국가 차원에서 민의 정치적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 서양어 citizen, citoyen이나 bourgeoisie의 번역어로 쓰이고 있는 '시민'은 원래 한자 문명권에 있던 용어로서 조선 시대에도 사용되던 용어이다. 다만 그 의미는 현재 사용되는 의미와는 많이 다르다. 조선 시대의 '시민'은 물자유통과 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였던 '시' 또는 '장시'의 '민'을 의미했다. 즉 시에서 활동하는 특수한 집단이 '시민'이었던 것이다. 또한 한양 시전의 상인들을 일컫는 것으로서 한양의 평민 대표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조정에 예속되면서도 특권을 보장받던 한성 상인층으로서의 시민은 일반적인 민중과는 차별되는 조선형 상업 유산계급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people 개념과 견주어 보자면, 조선의 '시민'은 광의의 people의 일원이되 협의의 people에는 고스란히 대응하기 어려운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제3절 한국정치사상과 민본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 한민족의 최고(最古) 건국이념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이다. 널리 사람 사는 세상을 이롭게 하고, 인간 내면의 초월성을 깨우쳐 사람들이 문명적 존재로 어울려 살아가게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를 세웠다는 것이 소위 고조선의 '홍익인간 재세이화(在世理化)'라는 건국이념이다.[13] 홍익인간의 정치이념은 나의 이익과 남의 이익을 나누어 보지 않고 하나의 공공적인 것으로 본다. 서로 돕고 조화로이 공존하는 가운데 서로 깨우쳐 '사람이 사람답게 될 수 있도록 돕는' 공존공영의 지향이 자고로 한국 정치사상의 기초를 이뤄왔다. 고구려의 건국이념인 '이도여치(以道與治)'[14]나 신라의 건국이념인 '광명이세(光明理世)'[15]도 고조선의 건국이념을 계승한 것이고, 철저히 중의와 공론에 입각하는 제가평의(諸加評議), 군공회의(郡公會議), 화백회의(和白會議)[16]와 같은 고대의 정치제도에서부터 두레, 품앗이, 동제, 계 등의 상부상조하는 미풍양속의 전통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전통 정치사상과 사회 윤리는 인간을 중심에 두고 최대한 평등한 관계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통해 폭넓게 번영과 발전을 꾀하는 것이었다.

홍익인간의 건국이상을 시원으로 하는 한국 고유의 정치사상은 인간과 공공성을 최중심에 두는 것으로서, 유교의 인본주의 및 민본주의, 덕치주의의 정치이념과 일맥상통하며, 조선이라는 유교 이념 국가에 이르기까지 유교 사상의 체계 속에 융합되어 발전해 왔다. 한국의 정치적 전통에서 민은 정치적 주체까지는 아니었을지라도 정치이념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작동하였다. 중국의 정치사상에서부터 군신의 합으로서 민은 천지의 상대이자 국의 근본으로 여겨졌고,[17] 군주 및 관료의 상대편에 있는 피지배

13) 한자경은 웅녀가 동굴 속 기도를 통해 인간으로 변하고 다시 환웅과 결혼해 단군을 낳는 단군신화의 구조를 인간의 내재초월에 관한 철학적 이야기로 해석한다. 홍익인간은 그에 관한 이념을 담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박휘근은 그보다 더 진일보하게 단군신화와 홍익인간 개념에 대한 놀라운 수준의 철학적 해석을 보여준다(한자경, 2008, pp. 15-34; 박휘근, 1998)

14) 고조선 시대로부터 전해오는 정치적 이념이라 하며 도로써 백성을 더불어 다스림을 정치의 요체로 삼는 것이다. 강권이나 폭력이 아니라 하늘의 섭리를 따르는 덕치로써 정치하고자 하는 신념이 담겨 있다.

15) 밝은 이치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정치이념.

16) 제가평의는 부여, 군공회의는 고구려, 화백회의는 신라의 정치제도다.

17) 『국어(國語)』, 「초어상(楚語上)」. "땅에는 높고 낮음이 있고, 하늘에는 어둡고 밝음이 있으며, 민에는 임금과 신하가 있고,

계층 모두로서 민은 군주와 상호의존적 관계에 있는 존재로 여겨졌으며,[18] 나라를 움직이는 근본으로서 시비선악을 분별하는 덕의 표준이자 정치의 기준으로 간주되었다(장현근, 2016, p. 294-299).

한국정치사상의 주류였던 유교적 관점에 따르자면, 민은 하늘이 내린 귀한 생명 존재로서 민심은 곧 천심으로 간주되고, 민은 정치적 성패의 향방을 가르는 결정력을 행사하는 존재다.[19] 따라서 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생활을 안정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안민(安民)과 보민(保民)]이 정치의 핵심이 된다. 민을 군주와 사직보다 중시하는 귀민(貴民)과 위민(爲民)의 민본정치 사상은 이런 배경을 가진다.

맹자(孟子)는 제후의 세 가지 보배로 토지, 정사(政事)와 함께 인민을 꼽았으며(『맹자』, 「진심하」), 나아가 "천하를 얻는 데 길이 있으니, 민을 얻으면 천하를 얻을 수 있다. 민을 얻는 데 길이 있으니, 마음을 얻으면 민을 얻을 수 있다. 마음을 얻는 데 길이 있으니, 원하는 것을 주어 모이게 하고, 싫어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맹자』, 「이루상(離婁上)」)라거나, "여민(黎民)을 굶주리게 하지 않고 춥게 만들지 않는다면, 천하에 왕노릇하지 못하는 자는 없다."(『맹자』, 「양혜왕상(梁惠王上)」)라고 말했는데, 모두 그런 이유에서이다.

맹자는 정치에 있어 민생을 중심에 두고 민심과 민의를 중요한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민에게 가족이 넉넉히 먹고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안정된 생업과 물자가 있어야 안정된 마음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복지형 경제정책의 설계자였고(『맹자』, 「등문공상(滕文公上)」), 권력자의 부귀 독점을 비판하며 군주와 인민 혹은 위정자와 민이 재화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라고[여민동락(與民同樂)] 부르짖은 진보적 정치사상가였다.

하지만 맹자는 정신적 노동자[노심자(勞心者)]와 육체적 노동자[노력자(勞力者)]를 사회적 분업에 근거해 구분하였고, 그가 말하는 민은 어디까지나 농(農)·공(工)·상(商)의 경제적 생산을 위한 육체적 노동에 종사하는 자로서의 피지배계급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맹자의 귀민 민본정치는 민이 자기 계급의 이익을 위한 정치 참여를 할 수 있거나 주권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맹자가 구상한 위민은 사(士) 이상의 지배계급에 의해 위에서 아래로 상하 수직적으로 작동하는 시혜적 위민의 성격에 그친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실, 특히 유교의 민본주의에는 민권 개념이나 인민주권 인민자치의 개념과 제도가 결여되어 있기에 민본주의가 결코 민주주의와 등치될 수는 없다는 사실로 인해 민본주의 자체의 의미를 격하시킬 필요는 없다. 유교 정치사상 안에서 민의 존재는 권력의 감시자와 최종 승인자로서 국가의 존망을 결정할 수 있는 신성한 기준계로 인정받았다. "하늘이 민을 낳은 것은 군주를 위해서가 아니다. 하늘이 군주를 세운 것은 민을 위해서이다. 따라서 옛날에 제후를 세워 봉건한 것은 제후를 위해서가 아니며, 대부에게 작위와 봉록을 주어 관직에 나가게 한 것은 대부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모두 민을 위해서였다."(『순자(荀子)』, 「대략(大略)」)라고 순자가 말했듯이, 유교 정치사상의 관점에

나라에는 도읍과 시골이 있는 것이 고대로부터의 제도다."

18) 민은 통치자를 위해서 노역에 종사하고 세금을 납부하며 군역을 담당하기도 한다. 따라서 통치자는 민의 사정과 고통을 헤아리고 그들을 보살펴야 한다. 통치자와 피통치자 곧 군주와 민은 상생 관계다(장현근, 2016, p. 298).

19) 『상서(尙書)』, 「태서상(泰誓上)」; 『춘추좌전(春秋左傳)』, 「양공 31년(襄公 31年)」. "민이 바라는 것을 하늘은 반드시 따른다."; 『상서』, 「태서중(泰誓中)」; 『맹자(孟子)』, 「만장상(萬章上)」. "하늘이 보는 것은 우리 민이 보는 것에 따르고, 하늘이 듣는 것은 우리 민이 듣는 것에 따른다."

서 위정자는 인민을 위한 존재로 상정되었고, 민의 생활 안정과 교화는 정치의 사명이었다.

현실적으로는 사회적 생산계층이자 정치적 동원수단이기도 한 민은 왕권과 정권의 유지 강화를 위한 이용 대상이 분명했지만, 제대로 위무 받지 못하고 그들을 향한 부당한 대우와 부정의가 임계점을 넘길 때라면 언제든지 지배 권력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거두고 봉기나 혁명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존재였다. 유교를 통해 정교화된 한국의 전통 정치사상은 이와 같은 정치 현실의 긴장을 민감하게 의식하는 것이었다. 『상서』에서 "민심에는 한결같음이 없고 그저 혜택을 주는 이를 따를 뿐"(『상서』, 「채중지명(蔡仲之命)」)이라 했고, 순자가 "군주는 배요 백성[庶人]은 물이니, 물은 배를 실어 주기도 하고 배를 뒤집기도 한다."(『순자』, 「왕제(王制)」)고 말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의 위정자들은 인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고, 인민은 지배자와 그 권력을 판정하고 비판하는 주체로 인정받았다. 투철한 애민(愛民)과 외민(畏民)의 정신만으로도 한국의 민본주의 정치사상은 상당히 고무적인 가치가 있다.

홍익인간의 건국이상과 장구한 유교 정치사상에 간직된 민본주의, 인간 공공성 중심주의가 갖는 지향점과 가치를 조명해 볼 때, 그것이 비록 만민이 정치적 주체가 되는 지배와 피지배의 완전한 일치 원리를 성립시켰거나 그러한 이념을 현실화 한 시기는 없었을지라도, 우리의 전통이 공화주의와 민주주의와도 호응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정치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제4절 지금 한국의 포퓰리즘 관념에 대한 성찰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포퓰리즘'이란 단어가 특정한 방향의 정책과 특정 정치인, 정치세력을 비방할 목적으로 언론과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쓰이는 양상이다. 아직 포퓰리즘이 확정된 정의를 갖고 있지 못하고, 포퓰리즘을 평가하는 합치된 관점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기에, 글쓴이 역시 포퓰리즘을 특정하게 규정하거나 포퓰리즘에 대한 확정된 태도를 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현재 우리 정치와 언론에서처럼 중남미의 실패한 대중영합주의 정치의 단면을 가리키는 대명사로서의 포퓰리즘 이미지만을 침소봉대해 가져다 쓰는 것은 명백한 용어 오염 행위라는 것과, 오염된 용어의 남용을 통해 정당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무모하고 부당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광범위한 혹세무민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만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추세 때문에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포퓰리즘에 대한 경시와 반발, 포퓰리즘 프레임을 덧씌워 반대 정치세력을 공격하는 현상이 만연한데, 포퓰리즘에 대한 경시와 반발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반민주적 계급주의(엘리트주의)가 저변에 깔려있으며, 둘째, 엘리트와 민중의 계급대립을 촉발하고, 셋째, 포퓰리즘에 대한 부정을 확산시켜 민중의 자발적 계급의식 형성을 와해시키고, 넷째, 민주주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망각하게 만든다. 수혜자 범위가 넓어지는 정책이나 정치의 방향을 무조건 '포퓰리즘'이란 꼬리표를 붙여 비난하고 거부하는 것은, 불평등 구조를 온존한 채 그 속에서 사회적 재화를 계속 독차지하려는 특권층의 부정의한 발악이거나 그에 부화뇌동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망각한, 혹은 그에 대해 무지한 발상과 태도에 불과할 것이다.

우리 정치사상의 전통을 되돌아보더라도 힘없고 가난한 기층민중인 '민' 혹은 광범위한 나라 구성원인 '인민'은 절대권력자를 위시한 위정자의 사랑과 경애, 그리고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철 지난 역사의 유교 사회에서도 '애민'과 '외민'은 누구도 함부로 부정할 수 없는 정치의 올바른 마음가짐이었고 좋은 정치, 이상적인 정치의 기본 정서이자 원리였다. 그런데 역사의 도도한 물결 속에서 전개된 인류 집단지성의 결실로 정치가 더욱 발전해 있는 작금의 시대에 들어, 빈자와 약자를 적극적으로 구휼하고 보편 복지를 실현하려는 애민 정치를 외면하고, 정치 공동체 안의 모든 주권자들에게 '권리를 가질 권리'를 평등하게 줌으로써 주권을 누릴 수 없는 시민들을 남겨두지 않으려 하는 외민 정치에 도전한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반민주'를 넘어 '반정치'에 다름 아닐 것이다.

근래 한국 정치의 한 단면을 보자면, 코로나 사태 속에서 특정한 소수 부자들을 제외하면 종사 업종과 사회 계층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경제적 손실과 심리적 우울감에 시달리는 국민들이 넘쳐나는데도, 한사코 긴급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은 포퓰리즘이라고 비방하며 반대하는 세력이 넘쳐난다. 그들은 혈세 낭비며 국고가 거덜 날 것이라는 이유를 든다. 또 약탈적 금융자본의 고이율 대출을 낮추는 것이나 기본소득제 도입 등과 같이, 빈부 격차를 극대화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초토화시키는 방향으로 달려나가는 자본주의의 폭주를 통제하고, 약자와 빈자들을 먼저 챙기면서 나라 안에 사는 다수의 사람들의 삶의 수준을 고루 높이려는 정책의 시도들이 '포퓰리즘'이란 말장난에 걸려 좌초되거나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는 상황들은 정의로와 보이지 않는다.

좋은 정치란 무엇이며,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애초에 인간의 생존과 번영에 유리하기 때문에 국가 등의 정치 공동체가 고래로부터 꾸려진 것이 아니겠는가? 정치 공동체의 지붕 아래 들어와 사는 다양한 인자들에게 모두 유리할 수 있어야 그것이 좋은 정치 공동체고 좋은 정치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래야 또 입장과 처지가 다양하기 짝이 없는 모든 구성원들은 만족해하며 해당 정치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힘을 보탤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란 정치 공동체의 시민들이 모두 평등한 주권자로 인정받고 권리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었던가? 인간 세상의 현실상 당장에 만인이 동등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성취를 향유하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또 일상적으로 직접민주주의를 운영할 수 없는 형편일지라도, 그렇지 못한 현실의 한계나 잘못됨을 극복하고 바로잡으려 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갈 길이 아니던가? 대체 왜 보다 더 많은 보통사람들을 위한 정치가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는가?

물론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정책을 단지 권력을 얻기 위해 시행하는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한국에서 포퓰리즘을 떠들어대는 자들이 어떤 의도를 가진 자들이며 어떤 정치적 지형에 서 있는지 모르지 않는다. 포퓰리즘 프레임을 유포해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세력들 때문에라도 people의 존재와 그들의 정치적 지위 및 역할에 관해 고민해 보는 것은 중요할 것이다. 우리 정치사상의 전통에서도 민은 이론적으로나마 정치의 중심으로 취급되었고, 위민과 애민, 외민, 민본은 정치의 핵심 정서이자 원리였다. 오늘날 애꿎은 포퓰리즘 단어놀이로 불평등을 쥐어 잡고 기득권을 계속 누리려는 세력들에게 휘둘릴 필요가 없다. 민본 민주주의의 영혼을 가지고만 있다면 포퓰리즘조차 어쩌면 좋은 정치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國語』/『孟子』/『尙書』/『荀子』/『新書』/『禮記』/『春秋左傳』/『淮南子』/『設文解字注』, 『조선왕조실록』(한국고전종합DB)

김형효 외, 『민본주의를 넘어서』, 청계, 2000.

박명규, 『국민·인민·시민』, 삼화, 2014.

박휘근, 『한국인의 존재지혜 Ⅰ: 단군신화와 한국인의 존재지혜』, 미출간 서적, 1998.

송호근, 『인민의 탄생』, 민음사, 2011; 『시민의 탄생』, 민음사, 2013.

장현근, 『관념의 변천사』, 한길사, 2016.

한자경, 『한국철학의 맥』,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8.

김윤희, 「근대 국가구성원으로서의 인민 개념 형성(1876~1894」, 『역사문제연구』제21호, 2009.

박병석, 「중국 고대 유가의 '민' 관념: 정치의 주체인가 대상인가?」,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제13권 2호, 2014.

이나미, 「'사민공치(士民共治)'로 본 한국 공화주의」, 『담론 201』 제21권 3호, 2018.

이승환, 「동양에서 '공적 합리성'의 특성과 근대적 변용」, 『철학연구』 제29집, 2005.

이태진, 「민본(民本)에서 민주(民主)까지: 한국인 정치의식의 과거와 미래」, 『韓國史市民講座』 26권, 2000.

최성흠, 「중국 '인민'의 유교적 내재성」, 『중국학연구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2006.

함규진, 「한국적 민주주의의 형성과 민본주의의 역할」, 『정치·정보연구』 제19권 1호, 2016.

溝口雄三 外 編, 『中國思想文化事典』, 東京大學出版會, 2001.

토론 2

민본주의와 포퓰리즘 사이

이영재(한양대학교)

한국정치사상의 맥락에서 people의 대응 개념과 의미를 고찰한 발표문을 통해 많이 배웠습니다. 의미 있는 연구에 토론을 맡게 되어 감사합니다. 안효성 선생님의 발표문은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절과 제2절은 people 개념의 동양철학적, 한국사적 지위를 개념사적 비교를 통해 다루고 있습니다. 발표자는 제3절 한국정치사상과 민본주의, 민주주의를 매개로 제4절 지금 한국의 포퓰리즘 관념에 대한 성찰에서 방향을 잘못 잡은 최근 한국의 포퓰리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토론자는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발표문을 읽으면서 느낀 점들을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1. people 개념과 동양의 비교, 그리고 여기에 민본주의 더하기

발표자는 동양철학 전공자이면서 서양철학에도 조예가 깊어 동서를 넘나들며 풍부한 용례를 들어 people 개념에 대응하는 동양의 개념들을 일별하고 있습니다. 이 일별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학술적 기여라고 생각합니다. 라틴어 populus에서 유래한 영어 people이 인민, 민중, 대중, 평민, 군중의 다양한 의미와 역사적 변천의 의미를 갖는 것을 고려하면 서양의 people 개념사를 곧 민주주의 발전사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발표문에 잘 제시되어 있듯이 people에 해당하는 동양의 다양한 개념들 역시 통치의 객체, 통치의 주체라는 차원에서 다양한 용례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발표자가 제시하고 있듯이 민을 국가의 근본으로 삼았던 민본사상 또는 민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민본주의는 관념적인 것이었든, 실체가 있는 것이었든 people을 매개로 한 통치의 객체, 통치의 주체 구분보다 풍요로운 동양 정치철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표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동양에서 민본주의 전통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이후 민을 통치의 주체로까지 확장하는 서구 민주주의 정치원리를 수월하게 수용할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민주주의로 진입하는 문턱에서 민본주의는 아래로부터의 도전(A), 자부심을 갖는 수용의 준거(B)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A) 1894년 4월 19일경(양력 5월 19일경) 초토사에게 보낸 함평서한에서 전봉준은 민유방본을 손에 병장기를 거머쥐는 정당성의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대저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며 근본이 튼튼하면 나라가 안녕하다(民者國之本也 本固邦寧)’는 옛 성현의 유훈으로서 시무의 대강입니다. (…) 오늘

저희들의 행동은 이처럼 어쩔 수 없는 사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손에 병장기를 거머쥐고 오직 살아갈 방법을 강구하자는 것입니다.[20]

(B) 영국 혜량왕(惠良王) 제4시대에 새로운 의원들이 논의한 일이 민심을 자못 알고 체득하여 옛날 백성을 생각하고 의지하는 것을 잊었던 것과 비함에 한 계산을 높이 내니 이에 따라 영국백성이 점차 생기를 갖추게 되었다. 서력 1832년 영국제도가 처음 이에 준하여 개정될 수 있게 되니 이것으로부터 줄곧 영국 조정이 '민위방본'의 의리를 깊이 생각하여 위정자들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진실로 간혹 민정民情을 점차 받들려면 백성에게 따로 현명한 의원을 선거하는 것을 허용하여 그 직을 대신하게 하니 영국백성들이 다 크게 환희했다. 이 '민·위·방·본' 네 글자의 의리는 고금천하의 정치가들의 요무이기에 동서양에 나라가 있은 이래 넘을 수 없는 원칙이다.[21]

민본주의에 민권 개념이나 인민주권, 인민자치의 개념과 제도가 결여되어 있어 민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등치시킬 수 없지만 민본주의 자체의 의미를 격하시킬 필요가 없다는 발표자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토론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민본주의가 갖는 적극적 의미를 포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해 봅니다.

2. 한국정치사상의 민본주의를 거쳐 포퓰리즘 비판으로

발표자는 안민(安民)과 보민(保民), 귀민(貴民)과 위민(爲民)의 민본정치 사상으로 한국정치사상을 설명하고, 우리의 전통이 공화주의와 민주주의와도 호응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정치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토론문을 준비하면서 이 한국정치사상의 정치철학적 함의가 제4절로 이어지는 중요 논거가 되었으면 더 좋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쉽게도 포퓰리즘 비판의 중요 논거가 될 수 있는 함의가 더 발전적으로 전개되지 않고 제4절 현재 한국사회의 포퓰리즘 오남용 비판으로 다소 단절적으로 넘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욕심을 내서 조금 더 논점을 강하게 가져가 본다면 포퓰리즘의 오남용과 달리 한국정치사상 맥락에서 포퓰리즘이 갖는 함의를 긍정적 논점으로 반론해 볼 수도 있어 보입니다. 토론자가 이런 생각을 한 것은 포퓰리즘을 들어 비판적 논점을 전개하는 오남용자들은 눈앞의 이익에 굴복하는 이익총합적 대중을 전제(중우정의 전제)하고 있는 것 같고, 이 민 개념과 한국정치사상의 민본개념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발표자는 기본소득제 논의를 포퓰리즘 오남용자들에 대한 비판 논거 중 하나로 활용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분량의 제한 때문일 수 있겠지만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정치철학적 함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발표문과 다소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포퓰리즘 오남용자들의 논거가 인용으로 제시되면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20) 황현, 『오하기문』, 88-89쪽.
21) 「皇城新聞」, 1899(광무3)년 2월 22일 〈논설〉.

세션2

좌장: 홍철기(서강대학교)

발제자: 김은중(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박성진(광주교육대학교)
이승원(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김성하(경기연구원)

토론자: 박정원(경희대학교)
심승우(서울교육대학교)
장석준(전환사회연구소)
백미연(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발제 3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과 인민

김은중(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제1절 들어가며 – 견지망월(見指忘月), 견월망지(見月忘指)

견지망월(見指忘月). 달을 가리키니 달은 보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본다.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을 바라보는 사태도 마찬가지이다. 포퓰리즘을 가리키면 포퓰리즘을 보지 않고 서구 민주주의를 거론한다. 이 때문에 1960년대 중반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된 이후에도 포퓰리즘은 여전히 기존의 정치 제도를 통하지 않고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가 인민에게 직접적으로 호소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왜곡시키는 대중영합주의 현상으로 취급된다.[22]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사회이론의 바탕 위에 세워졌다고 믿는 서구 민주주의의 시각에서 보면, 포퓰리즘은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정치적 병리 현상일 뿐이다. 이 때문에 "정치 이론의 보잘것없고 빈곤한 친족쯤으로 여겨지는"(Laclau 1987, 25) 포퓰리즘은 무시되고 포퓰리즘에 대한 논의는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로 수렴되어 버린다. 민주주의는 포퓰리즘을 평가하고 비판할 수 있지만 포퓰리즘은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을 거론하게 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3세기 동안의 식민지 역사를 겪고 스페인과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도 야만과 미개, 저발전과 후진, 군부 독재와 부패의 낙인이 찍혀 있는 라틴아메리카 대륙의 포퓰리즘은 대중선동적인 정치인들이 맹목적인 추종자들을 조종하고 종국에는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후진적인 정치행태와 동일시된다. 라틴아메리카를 포퓰리즘의 대륙이라고 부르는 배경에는 포퓰리즘에 대한 경멸적이고 평가 절하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견월망지(見月忘指).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않고 달을 본다. 서구 민주주의를 준거로 삼지 않고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을 보기 위한 필요조건은 탈식민성과 역사성이다. 탈식민성은 서구에서 유래한 역사 발전론에서 벗어나 라틴아메리카의 특정한 상황과 문화적 전통 안에서 포퓰리즘을 해석하기 위한 첫 번째 필요조건이다. 탈식민적 관점에서 접근할 때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 연구에서 끊임없이 무시되어왔던 '인민적인 것(lo popular)'을 복권시킬 수 있다. 역사성은 라틴아메리카에서 포퓰리즘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맥리(脈理)를 이해하기 위한 두 번째 필요조건이다.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은 특정한 역사적 맥락에서 특정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김은중 2013). 라틴아메리카는 포퓰리즘의 진

22) 포퓰리즘의 부정적 특징은 크게 일곱 가지로 나뉜다. ① 인민에 대한 호소와 반엘리트주의 ② '우리'와 '적'의 이분법적 사회상 ③ 선동을 통한 단순화 ④ 불안의 정치와 음모론 ⑤ '원래적인 것'에 대한 동경 ⑥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에 대한 의존 ⑦ '위기'(감)에 대한 대응(주정립 2006).

원지가 아니지만 정치 지도자, 운동, 정당 그리고 사회변동 등의 관점에서 폭넓은 스펙트럼의 포퓰리즘 전통을 지닌 지역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 포퓰리즘은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 규칙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라틴아메리카 20세기 역사 전체가 포퓰리즘의 역사로 해석되기도 한다(킨·헤인즈 2014).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20세기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이 장기 16세기 근대/식민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형성 시기부터 배태되고 구조화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모순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사실이다. 이런 복합적 모순들로 인해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은 단일한 범주(category)의 일면적 현상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속성을 갖는 여러 개의 포퓰리즘으로 존재한다.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개의 포퓰리즘은 19세기 초반 라틴아메리카가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이후 근대적 사회구성체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사회구성체(Social Formation)는 사회를 완성태가 아니라 구성되어 가는 것, 형성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사회를 구성되어 가는 것으로 본다는 것은 두 가지 상반되는 측면을 내포한다. 하나는 사회란 완성된 어떤 형태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 형태로 수렴되지 않는 이질적인 요소들이 뒤섞여 있다는 것이다(이진경 2008). 20세기 후반 사회주의 블록이 붕괴한 이후 사회가 완성된 어떤 형태를 향해 나아간다는 보편적 역사법칙은 설득력을 상실했다. 이런 역사적 상황에서 사회주의 블록의 붕괴를 목격한 프란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는 근대 사회가 자유민주주의라는 형태로 완결되었다는 의미에서 '역사의 종언'을 선언했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언'을 선언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미국이 승리했음을 말하려고 했던 것이지만, 정작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근대 사회를 이질적 요소들인 자본-네이션-국가의 변증법적 체계로 파악했다는 점이다.[23]

우리가 통상 국가라고 부르는 것은 네이션과 국가가 결합된 국민국가(nation-state)를 가리킨다. 그러나 네이션과 국가가 결합되기 이전에 자본과 국가가 결합되었다.[24] 자본, 네이션, 국가는 근대 사회를 구성하는 이질적인 요소들이며, 어느 것 하나라도 없으면 나머지도 성립되지 않는 보로메오의 매듭으로 결합되어 있다. 이런 맥락에서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삼위일체를 이루는 자본, 네이션, 국가 사이에서 작용하는 권력 관계를 통해 근대적 사회를 구성해가는 과정의 산물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25] 탈식민성과 역사성을 바탕으로 근대적 사회구성체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에 대한 진전된 논의는 전 지구적 차원의 포퓰리즘 연구에 중요한 시사

23) 네이션(nation)은 민족이나 국민으로 번역된다. 네이션과 내셔널리즘(민족주의 또는 국민주의)에 대한 연구는 네이션과 내셔널리즘을 인간의 원초적 의식으로 파악하는 원초주의(primordialism)와 네이션과 내셔널리즘이 근대에 형성된 역사적 구성물이라는 근대주의(modernism)로 나뉜다. 근대주의는 '인간은 어떻게 공동체를 구성하는가(how peoples unite themselves)'라는 질문을 '국가는 어떻게 네이션을 만들어내는가(how states invent nations)'라는 질문으로 이동시켰다.

24) 유럽에서 자본과 국가가 결합된 것은 절대주의 왕권국가 시기였다.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국가와 자본의 융합이었고 이러한 융합을 가장 먼저, 가장 강력하게 실행한 것이 유럽의 절대주의 왕권이었다. 네이션의 기반이 만들어진 것도 이 시기였다. 네이션은 절대적인 주권자인 왕에게 복종하는 신민(臣民)으로 형성되었다. 절대왕권이 선행되지 않았다면 주권자인 네이션도 출현할 수 없었다. 주권자인 왕의 신민(subject)이었던 네이션이 국가의 주체(subject)로서 인민주권을 갖게 된 것은 시민혁명을 통해 절대왕권을 타도한 이후였다.

25) 근대적 사회구성체를 이루는 자본, 네이션, 국가는 각각 다른 교환 양식에 뿌리를 둔다. 자본은 화폐와 상품의 교환 양식으로 작동하고, 국가는 지배와 보호(약탈과 재분배)의 교환 양식에 의해 움직이며, 네이션은 증여와 답례의 교환 양식을 근거로 한다. 근대적 사회구성체에 대한 헤겔의 관념론적 주장을 유물론적으로 비판한 마르크스는 생산 양식의 관점에서 자본제 경제를 물질적 하부구조로, 네이션과 국가를 관념적인 상부구조로 간주했다. 이 때문에 마르크스는 자본제 경제가 폐기되면 국가와 네이션은 자연스럽게 소멸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가라타니 2012).

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의 포퓰리즘과 서구에서 수입된 이론인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전향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또한 당연시되어온 서구 사회과학의 시각을 비서구 세계의 경험을 통해 교정하고,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학계의 지속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언론매체에서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포퓰리즘에 관한 논쟁의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릴 수 있는 논의의 마당이 될 수 있다.

제2절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에 대한 네 가지 관점

라틴아메리카를 연구하는 사회과학자들이 사용하는 개념공구 상자 안에서 '손때가 묻어 유난히 반질반질 빛나는 공구'로 표현되는 포퓰리즘은 긴 역사적 경험과 이론적 논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쓰임이 모호한 공구이다(Basset 2006, 27). 분석적 관점에서 포퓰리즘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그리고 포퓰리즘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인 인민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고, 규범적인 관점에서 포퓰리즘을 민주주의의 병리적 현상으로 보는 진영과 민주주의의 확산과 심화로 보는 진영이 극명하게 나뉘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포퓰리즘에 대한 새로운 개념 규정과 인식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20세기 초반부터 반복해서 출현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의 유형과 그것의 개념화 작업이 필요하며, 인민에 대한 정치철학적 분석이 요구된다. 이것은 근대/식민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서 라틴아메리카를 위치시키는(positioning) 작업이기도 하며, 탈식민적 관점에서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개의 포퓰리즘이 전개되는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는 작업이기도 하다.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네 가지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다.

1. 구조주의적 이행으로서의 고전적 포퓰리즘

첫 번째는 구조주의적(structuralist) 접근 방식이다.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은 사회구조적 수준에서 발생한 변화의 산물이며, 시기적으로는 1930-1954년의 고전적 포퓰리즘(classical populism)에 해당한다. 20세기 초 라틴아메리카는 자본주의 체제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도시화와 산업화를 겪었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사회적 이동이 발생했고, 대중 정치가 활성화되었으며, 전통적인 과두 지배 체제가 약화되었다. 아르헨티나의 후안 도밍고 페론(Juan Domingo Perón), 브라질의 제툴리우 바르가스(Getúlio Vargas), 멕시코의 라사로 카르데나스 델 리오(Lázaro Cárdenas del Río) 같은 정치 지도자들은 전통적인 과두 지배 계급이 약화되고 국가 권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걸음마 단계의 민족 부르주아지, 신생 도시 중산 계층과 노동자 계급, 농민 조직, 그리고 계급으로 규정할 수 없는 다양한 주변부 집단을 아우르는 복합적 계급운동(multiclass movements)을 조직했다. 그리고 이러한 계급운동을 바탕으로, 식민지 시기에는 원시적 자본축적의 무대였고 19세기 초 독립 이후에는 1차 산품 수출에 의지했던 경제 구조를 수입대체산업화(import-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ISI)로 변화시키려고 시도했다.

라틴아메리카 고전적 포퓰리즘 시기는 자본주의 착취와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회주의 이데올로

기가 부상하는 시기였다. 라틴아메리카 고전적 포퓰리즘 연구자들은 이 시기의 정치적 상황을 전통적인 과두 지배 체제 국가에서 자본주의 지배 체제 국가로 이행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주변부 제3세계의 공통된 현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의 포퓰리즘 정치인들은 노동 계급 대신에 인민(people)이라는 개념을 정치적 수사로 사용했다. 1960년대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 연구의 선구적 위치에 있었던 지노 제르마니(Gino Germani)가 포퓰리즘이라는 용어 대신에 민족인민운동(national popular movements)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1934년 이탈리아에서 아르헨티나로 이주한 지노 제르마니가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조직되지 않은 인민의 등장이 사회적·경제적 구조의 갑작스런 변화 때문이며, 이런 예외적인 현상은 사회가 정상화되면 소멸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이탈리아의 파시즘을 경험했던 제르마니가 아르헨티나의 페론주의를 노동계급이 중심이 된 전체주의로 보았기 때문이다.

라틴아메리카의 고전적 포퓰리즘은 엘리트 과두 지배층뿐만 아니라 공산당과 사회주의 정당에게도 위협이 되었다. 포퓰리즘 운동이 좌파의 사회적 토대인 도시와 농촌의 가난한 사람들을 동원하는데 정치적으로 매우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포퓰리즘은 민족주의를 배경으로 경제적 재분배와 사회적 포용성을 핵심적 정책으로 내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쓸모없고 모호한 존재로 취급되던 사회적 집단에게 소속감(a sense of belonging)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었다. 소속감은 특정한 사회적 계급에 토대를 두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을 묶어주는 연결 고리였고 이러한 소속감으로 묶인 사람들을 지칭하는 개념이 인민이었다. 인민은 자본주의의 토대인 합리적 개인과도 다르고, 사회주의의 토대인 노동자 계급과도 다르다. 인민의 반대편에는 인민과 적대적인 집단이 설정되었는데, 그것은 엘리트 과두지배 계층이었다. 고전적 포퓰리즘 정치인들은, 한편에는 인민을, 다른 한편에는 제국주의 외세와 동맹을 체결하고 민족 주권을 도외시하는 엘리트 과두지배 계층을 적대로 배치했다. 요컨대, 라틴아메리카의 고전적 포퓰리즘은, 스스로를 민족주의로 부르건 아니건 간에 그 당시 막 등장한 부르주아지와 노동자, 농민 조직 사이에 체결된 일종의 '사회계약'이었고, 전통적 과두 지배 계층으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갖게 된 정치인들이 민족주의를 앞세워 국내 시장을 육성하려고 시도했던,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꼭 필요했던' 헤게모니 정치 프로젝트였다. 이런 맥락에서 라틴아메리카 고전적 포퓰리즘에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는 경멸적 꼬리표를 붙이는 것은 잘못이다. 근대적 사회구성체의 관점에서 보면, 고전적 포퓰리즘은 카리스마를 가진 정치인들이 '복합적 계급운동(multi-class movements)'을 통해 과두 지배 체제를 타파하고, 산업화를 추진함으로써 국민국가의 토대를 구축하려는 시도였다(미주 2 참조).[26] 그러나 고전적 포퓰리즘은 정치 지도자의 역할이 컸고 인민은 아직 뚜렷하게 구성되지 못한 상태였다.

고전적 포퓰리즘에 대한 연구에서 간과되어온 또 다른 문제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권력 관계이다. 국제적 헤게모니가 미국으로 넘어간 2차 세계대전은 사실상 세계대전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 내부의(intra-capitalist)' 헤게모니 다툼이었다. 승전국이 된 미국은 지구적인 차원에서 지정학적 재편을

26) 근대적 사회구성체의 관점에서 페론이나 바르가스 같은 고전적 포퓰리즘 시기의 정치인들의 역할은 유럽의 절대주의 왕권의 역할과 비교될 수 있다. "유럽에서 절대주의 왕권이 걸었던 과정은 보편적이다. 그것은 반드시 '왕'이 아니어도 좋다. (...) 예를 들어, 개발형 독재정권이나 사회주의적 독재정권은 절대주의 왕권에 해당한다고 보아도 좋다"(가라타니 2012, 263). 이런 맥락에서 페론과 바르가스는 그 당시에 포퓰리스트 정치인으로 비판받은 것이 아니라 독재자로 비판받았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시도했다. 유럽에서는 마샬 플랜을 통해 패전국인 독일의 경제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소련을 견제했고,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해 일본에 경제 원조를 제공했다. 1945년부터 1954년까지 약 10년에 걸친 중심부의 지정학적 재편을 마무리한 미국은 주변부인 라틴아메리카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했고, 첫 번째 시도가 과테말라의 군부 쿠데타를 지원한 것이었다. 미국중앙정보국(CIA)의 지원을 받은 군부는 선거를 통해 집권한 아르벤스 정권을 무너뜨렸다. 미국의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개입은 외국 자본과 선진 과학기술의 필요성을 앞세운 새로운 유형의 제국주의적 침탈이었다. 아르벤스 정권의 붕괴를 기점으로 라틴아메리카의 포퓰리즘 정부들은 도미노처럼 연속적으로 권력을 상실했다. 독일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경제 지원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확산을 막기 위한 시도였다면,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신생 민족주의 부르주아지의 성장을 가로막는 신식민주의 정책이었다. 라틴아메리카의 고전적 포퓰리즘을 논의할 때는 반드시 이러한 외적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2. 거시경제적 관점으로 본 신자유주의 네오포퓰리즘

두 번째는 거시경제적 접근 방식이다. 거시경제적 관점은 포퓰리즘을 경제 성장을 내세운 정치적 포퓰리즘과 경제적 자유주의의 결합 현상으로 해석하며, 시기적으로는 1980-1990년대의 신자유주의 네오포퓰리즘(neoliberal neopopulism)에 해당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고전적 포퓰리즘은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주변부였던 라틴아메리카가 2차 세계대전 이후 헤게모니를 장악한 미국의 제국주의 체제에 새롭게 편입되면서 소멸되기 시작했다. 과테말라 사태를 시작으로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개입을 본격화하기 시작한 미국은 '진보를 위한 동맹'의 파트너로 군부를 선택했다. 국제적인 자본주의 세력과 동맹을 체결한 신식민지 엘리트 과두 세력과 이들이 앞세운 군부 정권에 의해 고전적 포퓰리즘이 겨우 마련했던 물적 토대는 급격하게 허약해졌다. 발전(development) 개념은 제3세계를 탄생시킨 설계도였고 '진보를 위한 동맹'은 주변부 자본에 대한 중심부 자본주의의 지배를 은폐하기 위한 수사학이었다. 그러나 1973년 국제적 석유 파동을 계기로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하면서 발전주의의 환상은 깨지기 시작했고, 1980년대에 들어와 군부 정권이 와해되면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일제히 정치적 민주화를 이루었다. 하지만 정치적 민주화는 '형식적 민주주의'에 불과했다. '형식적 민주주의'는 경제 발전을 추진할 능력이 없었던 군부 독재 정권이 물러나면서 외채 위기와 함께 물려준 유산이었고, '형식적 민주주의'의 뒤편에서는 국제적 자본 세력을 보호하기 위한 신자유주의 개혁이 진행되고 있었다.[27]

라틴아메리카 민주주의는 외채 상환과 범죄 망각이라는 선고를 받고 소생했다. 마치 민선 정부가 군부의 노력에 고마워하는 것 같았다. 군부의 공포정치는 유리한 해외 투자 환경을 조성했고 이어 뻔뻔스럽게도 나라를 헐값에 팔아먹을 수 있는 길을 잘 닦아놓았다. 국가 주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노동권을 유린하고, 공익사업이 와해된 것은 바로 민주주의 체제하에서였다. 1980년대에 민권을 회복한 사회는 최상의 기력을 이미 상실한 상태였고, 거짓과 공포에서 살아남는 데 익숙해져 있었으며,

27) 1980년대 라틴아메리카의 정치적 민주화는 신자유주의 경제 개혁과 함께 진행되었다. 그러나 민주주의 촉진은 자유 시장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자본 권력의 '선제 개혁'이었다. 다시 말해, 신자유주의 개혁이 대륙 전체를 자본이 이용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면, 형식적 민주주의는 자본을 위해 대륙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전 지구적 자본의 선제적 개혁이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촉진은 사실상 민주주의의 회복과 심화가 아니라 '정치의 종말'이었다.

너무도 낙담하고 쇠약해져서 창조적 활력을 필요로 했다. 창조적 활력은 민주주의가 약속한 것이긴 하지만, 줄 수도 없었고 줄 방법도 몰랐다(갈레아노 2004, 219).

1980년대 라틴아메리카의 '형식적 민주주의'는, 한편으로는 군부 독재가 저지른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외채 상환과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을 담보로 주어진 것이었다. 라틴아메리카 종속이론(dependency theory)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진보를 위한 동맹', '발전주의'는 주변부 자본의 잉여가치가 중심부로 이전하는 현상을 은폐하는 기만적 수사학에 불과했다. 신자유주의 개혁의 목표가 세계를 자본이 이용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면, 형식적 민주주의의 목표는 자본을 위해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아르헨티나의 카를로스 메넴(Carlos Menem), 브라질의 페르난두 콜로르 지 멜루(Fernando Collor de Mello), 페루의 알베르토 후지모리(Alberto Fujimori) 같은 포퓰리즘 정치인들은 재앙에 가까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엘리트 과두 지배 체제를 공격했고 인민을 위한 진정한 정부를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들은 권력을 잡은 후에 극심한 하이퍼인플레이션을 해결하고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개혁을 실행했다. 네오포퓰리즘 정치인들은 신자유주의 강령을 따르는 개혁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순수한 인민과 부패한 엘리트 과두 지배 계층의 적대를 부각시켰다. 다시 말하자면, 부패의 근원은 자본 권력이 아니라 정치가들과 국가 권력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과두 기득권 세력을 신자유주의 강령에 반대하고 사익을 취한 집단으로 부각시켰다. 사회적 약자에게 값비싼 대가를 요구하는 신자유주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네오포퓰리즘 정치인들이 정권 초기에 55%-80%에 이르는 높은 지지를 얻었던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신생 민족 부르주아지, 도시와 농촌의 노동 계급, 농민 조직, 계급으로 규정되지 않는 주변부 집단을 국민국가의 인민으로 만들려고 했던 고전적 포퓰리즘 정치인들과 달리, 네오포퓰리즘 정치인들은 인민을 신자유주의 개혁을 위한 동원의 대상으로 여겼다. 네오포퓰리즘 정치인들에게 인민은 수동적 대중이었고 시장 경제로 편입시켜야 할 비공식 부문의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3. 정치적 전략으로서의 네오포퓰리즘

세 번째는 정치적·제도적 관점의 접근 방식이다. 정치적·제도적 관점의 접근은 포퓰리즘을 대의제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조직되지 않은 대중의 지지를 얻어 권력을 획득하는 정치적 전략으로 보며, 시기적으로는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네오포퓰리즘 시기와 중첩된다. 다시 말해, 정치적·제도적 관점과 거시경제적 관점은 네오포퓰리즘이라는 동전의 양면이다. 포퓰리즘이 감성자극적 수사를 이용한 선동적 정치인의 대중에 대한 직접적 호소라는 폄훼된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네오포퓰리즘 시기부터이며, 정치적 전략으로서의 포퓰리즘은 좌파와 우파에 모두 적용된다. "오늘날 포퓰리즘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다. 정치전략적으로 재규정되는 의미론적 미끄러짐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제 포퓰리즘은 워싱턴 컨센서스를 이론적 바탕으로 하는 세계화의 흐름을 거스르는 모든 정치적·사회적 운동과 정책을 의미하는 말이 되었다. 다시 말해, 신자유주의 기획에 반대해 일어나는 모든 인민정치운동은 포퓰리스트라는 낙인이 찍혔다. 따라서 사회과학은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를 거부해야 한다. 포퓰리즘이란 말은 반대자들(인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세련된 욕이다"(Dussel 2012, 162). 요컨대, 정치적 전략으로서의 포퓰리즘은 '인민을 위해 말하는 것(speaking

for the people)'이 아니라 '인민처럼 말하는 것(talking like the people)'이다(Kazin 1998). 이런 맥락에서 라틴아메리카의 신자유주의 네오포퓰리즘은 정치 엘리트가 주체가 된 '사이비 포퓰리즘(pseudopopulism)'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근대적 사회구성체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네오포퓰리즘 시기의 신자유주의 개혁은 중상주의가 출현했던 때부터 국가와 분리된 적이 없었던 자본이 국가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였다. 신자유주의가 내세우는 시장근본주의는 국가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시장자유주의, 시장자율주의, 시장에 의한 경제적 차원의 극대화를 촉진하며, 이를 전 지구적으로 확산시키려고 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국가의 주권이 시장(자본)으로 넘어갔고, 국가의 해체가 가속화되면서 국민주의도 소멸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국민'과 '국가'가 더 이상 일치하지 않고, 국민국가는 국가의 경계선을 넘어서서 탈국가적이고 초국가적인 블록으로 재편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포스트 민주주의' 혹은 '탈정치화'를 의미한다. 포스트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경합적 긴장이 사라지고 시민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권리를 실현시킬 가능성을 박탈당하는 사태를 가리킨다면, 탈정치화는 좌우 세력 간의 정치적 경계가 흐릿해져서 남는 것은 중도우파와 중도좌파 정당들이 주고받는 정권 교체일 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무페 2019).

4. 담론적 관점에서 본 급진적 포퓰리즘

네 번째는 담론적 접근 방식이다. 담론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포퓰리즘은 현 상태(status quo)의 유지를 바라는 진영과 비판하는 진영으로 분리하는 정치적 경계를 세우고, 엘리트에 맞선 인민의 동원을 위한 담론 전략이다. 담론적 관점은 시기와 장소에 따라 변주된 형태로 모든 포퓰리즘 현상에 적용될 수 있으나,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특히 1990년대 후반 이후 급진적 포퓰리즘(radical populism)에 해당한다. 1998년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Hugo Chávez)의 대선 승리를 기점으로 가시화된 라틴아메리카 급진적 포퓰리즘은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 에콰도르의 라파엘 코레아(Rafael Correa)가 차베스의 뒤를 이어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대륙 전체로 확산되었다. 급진적 포퓰리즘 정치인들은 신자유주의 네오포퓰리즘 정치인들과 달리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자유시장 정책을 강하게 반대했으며, 다수 인민을 위한 발전 모델을 주장했다. 또한 억압당하고 배제되었던 원주민과 아프리카계 흑인들을 포함한 가난한 인민과 부자를 적대로 설정했다. 급진적 포퓰리즘 담론은 국제자본 세력과 신식민지 과두 지배 계층의 동맹을 공격한다는 점에서 고전적 포퓰리즘과 유사하지만, 인민을 좁은 이데올로기적 계급 관점에서 바라보았던 고전적 포퓰리즘과 달리 인민을 '보통 사람들(plebeians/common people)'과 동일시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보통 사람들'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특정한 문화적 전통 및 가치관을 결합시킨 더 확장된 개념이다.

급진적 포퓰리즘 정치인들은 보통 사람들의 정치적 참여를 확대하고 보통 사람들이 주체가 된 사회운동의 지지를 받았다. 1990년대 후반 이후 다양한 스펙트럼의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은 최근 30-40년 동안의 신자유주의 모델을 비판할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인한 탈정치화를 재정치화시켰다. 이런 맥락에서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은 경제적 차원의 재분배를 넘어선 정치적 차원의 투쟁으로 인민이 집합적 행위자로 등장했음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사회운동은 아메리카 정복 이후

500년 동안 지속되어온 '식민적 권력 매트릭스(colonial matrix of power)'를 해체하려는 포괄적인 탈식민적(de-colonial) 투쟁이기도 하다.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 중에서 특별히 원주민운동과 아프리카계 흑인운동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들이 사회에서 배제된 몫 없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단적 경험과 삶 속에 유지/기억되고 있는 '가능한 다른 세계'에 대한 요구 때문이다. 특히 베네수엘라의 '21세기 사회주의'는 최대 범위의 민주적 참여를, 볼리비아와 에콰도르에서 제시하는 '수막 카우사이(Sumak Kawsay)'는 문명의 전환을 시도하는 대항헤게모니운동으로 등장했다.[28]

근대적 사회구성체의 관점에서 급진적 포퓰리즘의 주된 지향점은 자본에게 넘어간 국가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예견되었던 국민국가의 종언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러한 예견과는 반대로, 소련 붕괴 이후 중부 유럽과 동부 유럽 지역에서 새로운 국민국가들이 탄생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국민주의가 더 강화되고, 국가를 잃어버린 난민(難民)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근대적 사회구성체는 자본, 네이션, 국가가 보로메오의 매듭처럼 엮여서 어느 것 하나라도 없으면 성립되지 않는다.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국민국가는 여전히 민주주의 정치와 인민주권이 실현되는 장소이다. 라틴아메리카의 급진적 포퓰리즘은 국민국가의 재구성을 통해 자본 권력으로부터 국가 주권을 회복하고, '대안은 없다'는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민국가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급진적 포퓰리즘이 보여주는 특이점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정치권력과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사회운동의 요구가 공동전선을 형성하여 자본 권력에 맞서고 있는 것이다. 다양한 사회운동의 주체—멕시코의 사파티스타 원주민운동, 볼리비아와 에콰도르의 원주민운동, 브라질의 무토지 농민운동과 도시빈민운동, 아르헨티나의 피케테로스운동 등—들은 정치권력의 동원의 대상이 아니라 주권을 가진 집합적인 정치적 행위자가 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급진적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인민을 정치적 행위자로 인정함으로써 신자유주의가 무력화시킨 민주주의를 급진화하는 시도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급진적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의 급진화로 부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담론적 관점은 라틴아메리카에서 포퓰리즘이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이유를 이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한다. 첫째, 담론적 관점이 강조하는 포퓰리즘의 핵심적인 개념은 적대와 헤게모니이다. 담론적 관점에서 볼 때 사회는 언제나 적대적 범주('우리'와 '그들')로 분할되고, 분할된 사회는 헤게모니 실천을 통해 정치적으로 구성된다. 정치적 경계로 설정되는 순수한 인민과 부패한 엘리트 과두세력 간의 적대는 항상-이미 현존하는 가능성으로, 인민은 경험적 지시 대상이 아니라 '떠도는 기표(floating signifiers)'이다(Laclau 2005). '떠도는 기표'는 사회적 질서란 우발적 실천들의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절합(articulation)이며, 다른 가능성의 배제에 근거해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포퓰리즘에 대한 접근 방식이 정치 지도자나 정당의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면, 담론적 관점에서는 주권자인 인민의 관점에서 포퓰리즘을 바라본다. 인민은 주기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고 권력자가

28) 수막 카우사이(Sumak Kawsay)는 2008년 에콰도르 개정 헌법에 성문화된 안데스 원주민의 세계관이다. 수막 카우사이는 에콰도르 키츠아(kichwa) 원주민어이며 인간과 자연이 함께 소속되는 공동체에서의 충만한 삶(a fullness life in a community, together with other persons and Nature)을 의미한다. 수막 카우사이는 새로운 사회조직의 원리이면서 새로운 문명관을 제시하는 규합개념(organizing concept)으로 그 밑바탕에는 인간중심주의에서 생명중심주의로의 전환이 자리 잡고 있다. 수막 카우사이는 우리가 익숙하고 흔하게 사용하는 '살림'(명사), '살리다'(동사)로 번역될 수 있다.

선출된 이후에는 침묵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주권자로서 피선거권자에게 부여한 정치적 권력을 되찾아 올 수 있는 정치적 존재이다.

셋째, 담론적 관점은 포퓰리즘을 "정치란 인민의 일반의지의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중심이 얇은 이데올로기(thin-centered ideology)"로 본다(무데·로비라 칼트바서 2019, 16). '중심이 얇은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포퓰리즘이 어떤 '참된 본질'을 갖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와는 반대로, 포퓰리즘은 반(反)본질주의의 입장에서 참된 본질을 주장하는 '중심이 두꺼운 이데올로기(thick-centered or full ideologies)'의 '구성적 외부(constitutive outside)'로 기능한다. 근대 역사에서 '중심이 두꺼운 이데올로기'는 자유민주주의이다.

제3절 인민이란 무엇인가 -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과 인민

앞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은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이후 근대 국민국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속성을 갖는 여러 개의 모습으로 반복적으로 출현했다. 여러 개의 모습으로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포퓰리즘의 핵심적인 요소는 인민이다. 그러나 경험적 지시 대상이 아니라 떠도는 텅 빈 기표라는 점에서 인민은 모호하고, 불확실하며, 비학문적인 개념으로 치부된다. 따라서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에 대한 진전된 논의를 위해서는 인민이 무엇인지 규정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는 인민의 지배를 뜻한다. 인민은 주권을 갖는 존재이며 권력의 원천이다. 그러나 현실 민주주의에서 인민의 지배는 줄곧 미완의 상태로, 여전히 도달해야 할 목표로 남아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식민지로부터 독립하고 공화국이 설립된 이후에 '주권자로서의 인민(sovereign people)'이 '실제적 인민(real people)'과 결코 일치한 적이 없다. 실제적 인민은 무능력하고 공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율성과 판단력을 갖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공론장에서 배제되었다. 이 때문에 공화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주권자로서의 인민과 실제적 인민을 어떻게 일치시킬 것인가'라는 물음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었고, 사실상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은 실제적 인민이 주권자로서의 인민이 되는 계기라고 말할 수 있다.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신생 공화국들은 소수의 자격 있는 자(지배 엘리트 과두 계층)와 다수의 자격 없는 자(피지배 인민)로 분할되었고, 소수의 자격 있는 자들이 다수의 자격 없는 자들을 대표했다. 자격 없는 자들은 자신을 대표하는 자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 즉 선거를 통한 주권의 위임이라는 소극적 권리를 가질 뿐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이런 맥락에서 공화국의 대의 민주주의는 불평등과 배제의 민주주의였고 애초부터 인민 주권은 허울이었다. 인민 주권을 정치적 정당성의 근거로 삼으면서 실제적 인민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화주의의 역설이었다.

그렇다면 포퓰리즘의 인민은 민주주의에서 배제된 인민을 뜻하는가? 포퓰리즘이 인민주의를 의미한다면 포퓰리즘의 인민은 무엇인가? 포퓰리즘의 인민은 불평등과 배제의 민주주의, 허울뿐인 민주주의로부터 민주주의를 구제(redemption)하는 인민이다. 이런 의미에서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와 반목(反目)하지 않는다. 포퓰리즘의 인민은 사회계약을 통해 주권을 위임한 명목상의 인민이 아니라 민주

주의라는 정치 공동체의 주체이다.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이 반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애초에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했던 인민으로 돌아갈 볼 필요가 있다. 기원전 5세기경 도시국가 아테네에서 등장한 민주주의는 혈연에 기반을 둔 통치 체제와 단절하고 데모스(demos)라고 불리는 촌락공동체를 중심으로 행정구역을 재편함으로써 가능해졌다. 그 이전까지 혈연에 기반을 둔 공동체의 구성원은 개인들이나 집단들에게 돌아갈 몫의 분배를 규정하는 아르케(arkhê) 논리에 따라, 즉 그들의 속성 내지 자질과 그에 따른 분배의 몫을 규정하는 원리에 따라 몫을 분배받았다(랑시에르 2013). 예를 들어, 명망 있는 가문의 사람, 재산이나 지식이 많은 사람, 덕(德)이 많은 사람은 많은 몫을 분배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적은 몫을 분배 받았다. 아예 분배에서 제외되는 사람들도 존재했다. 이렇게 아르케의 논리는 불평등과 배제의 논리였고, 아르케가 '시초', '원리', '지배'를 뜻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불평등과 배제는 본래적이고 자연적인 것으로 정당화되었다. 반면에, 인민은 데모스에 등록하여 가문이나 재산, 지식에 상관없이 참정권을 비롯한 시민의 권리와 지위를 보장받은 사람이다.

데모스가 혈연에 기반을 둔 통치 체제와 단절하는 인위적인 정치 공동체라면, 데모스의 인민 또한 자연적인 불평등한 질서인 아르케의 논리를 부정하는 인위적인 정치적 고안물이다. 이런 맥락에서 인민은 경험적 지시 대상이 아니라 담론적인 정치적 구성물이다. 포퓰리즘이 호명(interpellation)하는 인민은 정치 공동체가 분할되는 위기의 순간에 출현한다. 그람시(Antonio Gramsci)의 말에 따르면, 헤게모니는 동의(consensus)에 의한 지배이며 인민은 지도 계급이 헤게모니를 상실할 때 출현한다. 공동체의 정치적 지도 계급이 헤게모니를 잃게 되면 지도력(leadership)과 정당성을 상실하고 강압적인 힘을 사용하는 지배(dominant) 계급으로 변질된다. 헤게모니와 정당성의 위기의 시기에 포퓰리즘에 의해 호명된 인민은 국민국가의 추상적 국민에서 집합적인 정치적 행위자로 변화된다. 그람시는 인민을 '역사적 지배 블록(the historical block in power)'과 적대를 형성하는 '억압받는 사회적 블록(the social block of the oppressed)'으로 규정했는데, 정치적인 관점에서 현실은 항상-이미 두 블록 간의 적대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적대는 결코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사회는 항상-이미 분할되고 모든 질서는 헤게모니적으로 구조화된다. 이런 의미에서 포퓰리즘은 현실을 정치적으로 사유하고 헤게모니적으로 실천하는 계기이다. '현실을 정치적으로 사유한다는 것(thinking the world politically)'은 현실이 두 진영('우리'와 '그들')으로 분리되는 정치적 경계를 중심으로 적대적으로 구성되고, 두 진영이 완벽하게 화해하는 조화로운 상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실을 헤게모니적으로 실천한다는 것은 모든 사회질서가 궁극적인 합리적 토대를 결여한 권력 관계들의 절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종류의 사회 질서는 헤게모니적이며, 우발성의 맥락에서 질서를 수립하려는 목표를 지닌 일련의 실천이 낳은 산물이다. [...] 즉 모든 질서는 우발적 실천들의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절합이다. 사태는 언제든 달라질 수 있는 것이며, 모든 질서는 다른 가능성의 배제에 근거해 있다. 어떤 질서든 항상 권력 관계들의 특정한 배치의 표현이다. 어떤 순간에 그에 수반되는 상식과 함께 '본래적' 질서라고 받아들여지는 것은 누적된 헤게모니적 실천의 결과이지, 그런 결과를 가져온 실천과는 하등의 상관없이 저 깊은 곳 어딘가에 존재하는 객관성의 발현물이 결코 아니다. 그러므로 모든 질서는 또 다른

형태의 헤게모니를 세우기 위해 그 질서를 탈구시키려는 대항헤게모니적 실천의 도전을 받는다(무페 2020, 31-32).

포퓰리즘의 두드러진 부정적 특징 중의 하나로 거론되는 적대는 사회를 '적(그들)'과 '동지(우리)'로 편가르기 하는 것이 아니다. 적대는 정치적인 것의 존재론적 차원이다. 무페가 지적하듯이, 적대는 적들 사이의 쟁투가 아니라 대결자들 사이의 헤게모니적 경합이다. "대결자들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대한 각자의 해석이 헤게모니적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서로 맞서지만 자신들의 대립 진영이 그 입장의 승리를 위해 싸울 수 있는 권리의 정당성을 문제 삼지 않는다. 대결자들 사이의 이런 대결이 바로 역동적인 민주주의의 조건인 '경합적 투쟁'을 구성하는 것이다"(무페 2020, 39). 이런 맥락에서 민주주의와 반목하는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자유주의이다. 근대 공화국 설립의 기초가 된 자유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두 전통인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절합을 통해 수립된 정치 질서로, 절대주의라는 공동의 적에 대한 투쟁으로 발생했다. 자유주의가 법의 지배, 권력 분립, 개인의 자유 보호 같은 원리에 기초한다면, 민주주의의 중심 사상은 평등과 인민주권이다. 자유주의가 합리주의적 의사소통을 통해 적대를 제거함으로써 최종적 화해의 가능성을 믿는다면, 민주주의는 적대의 근절 불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적대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시도이다. 이렇게 서로 다른 원리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역동적 긴장의 장소(locus of dynamic tension)'이다. 18세기 말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긴장이 느슨해졌고 자유주의 세력이 강화되기 시작했다. 19세기 초반 유럽에서 자유주의가 이상적인 사회적 이데올로기였던 반면에, 민주주의는 자코뱅주의와 동일시되는 경멸적인 말이 되었다. 19세기 이후 계속된 혁명과 반혁명의 역사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긴장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는 과정이었다.

포퓰리즘이 호명하는 인민은 민주주의의 인민이다.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포퓰리즘은 '모두를 위한 자유와 평등'이라는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주권자 인민을 호명한다. 민주주의의 평등한 주체인 인민은 단순히 공동체 성원의 총합이 아니라 수행적(performative) 실천에 의해 구성된다. 수행적 실천을 통해 인민은 공동체에 속하지만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셈해지지 않는 이들, 몫이 없는 이들을 대표함으로써, 정치적 공동체에서 자신들의 속성이나 자질과 관계없이 공동체 전체를 셈해지지 않는 이들의 셈과 동일시할 수 있게 해준다(랑시에르 2013). 다시 말해, 민주주의의 인민은 자연적인 존재가 아니라 정치 공동체에서 인위적으로 평등하게 구성되며, 공동체의 어떤 한 개인이나 집단이라도 셈에서 배제되면 공동체가 민주주의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존재이다. "[민주주의의] 인민은 공동체에 속하는 각각의 개인들이나 집단들이 지닌 이러저러한 속성이나 자격, 정체성에 덧붙여진 추가적인 속성 내지 자격이다. 그것은 [아르케의 논리에 따른] 실제의 셈의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분배의 몫을 규정하는 데서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정치 공동체인 한에서 어떤 공동체에 속하는 모든 성원들이 항상 이미 지니고 있는 속성 내지 자격이 바로 인민이라는 속성이다"(진태원 2012, 페이지 없음).

헤게모니와 정당성의 위기의 순간에 출현하는 인민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인구의 총합도 아니고, 인구 중 노동하는 계급도 아니다. 정치적 범주인 인민은 자본의 핵심적인 요소이자 경제적 범주인 노동 계급으로 환원되지 않으며, 혁명적 변화를 주도하는 최종 심급의 역사적 주체도 아니다. 유럽에서

마르크스주의를 경험했던 페루의 지식인이자 공산주의자였던 마리아테기(José Carlos Mariátegui)가 원주민을 1920년대 페루에서 정치적 헤게모니를 가진 집단적 주체로 인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이 때문에 마리아테기는 페루 공산당을 창당했던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포퓰리스트로 비난받았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식민지로부터 독립하고 공화국이 설립된 이후에 주권자로서의 인민이 실제적 인민과 결코 일치한 적이 없다. 신생 국가들에게 시급한 정치적 문제는 민주주의로의 전환이 아니라 중앙정부를 수립하고 '국민을 만드는 일(nation-building)'이었다. 라틴아메리카의 국민 만들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종족성과 인종주의가 결합되었다는 것이다. 인종주의는 식민적 상태가 종식된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는 사회문화적 위계를 통해 비(非)유럽인을 유럽인과 구별하는 기준이었다. 인종의 범주에 따른 사회적 관계는 아메리카에 새로운 사회적 정체성의 기원이 되었고, 그 이전까지 단순히 출신지를 의미했던 스페인인, 포르투갈인은 새로운 사회적 정체성으로 등장한 인디오, 흑인, 메스티소(mestizo)와 인종적 차이를 의미하는 말이 되었다. 인종적 차이를 의미하는 사회적 정체성은 사회적 위계와 역할을 함축하는 지배 관계의 표현이었다.[29] 백인 크리올(creoles) 엘리트들은 인종주의의 관점에서 '국민'이라는 상상의 공동체를 구축하고 재구축해왔다. 이 과정에서 국민을 형성하는 구성원에게 부여되는 시민적 권리, 정치적 권리, 사회적 권리는 원주민, 흑인, 메스티소(mestizo), 물라토(mulato), 삼보(zambo)에게는 결코 완전하게 주어진 적이 없다.[30] 아메리카 역사에서 이들은 배제된 사람들이었다. 유럽으로부터 수입된 공화국이라는 근대적 정치 질서에서 상상의 공동체의 주민은 해방의 주체가 아니라 공화국을 유지할 자격이 없는 장애물로 여겨졌다. 엘리트 과두지배 계층은 식민주의가 종식된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권력의 식민성(coloniality of power)'으로부터 국민을 해방시키려고 하기보다 문명화시키려고 했다. 요컨대, 공화국에는 상상의 공동체인 추상적 국민만 존재할 뿐 인민은 존재하지 않았다. 과두제적·종속적 발전 모델은 인민을 구성하지 못했고, 민주적 요구를 헤게모니적 질서 안으로 포용하지도 못했다. 인민이라는 개념에 내포된 이중성—주권자로서의 인민(populus)과 배제된 실제적 인민(plebs)—이 해소되는 계기는 포퓰리즘이 인민을 호명할 때이다. 페론은 세르반테스(Cervantes) 탄생 40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원 행사의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인민을 호명했다.

1806년 외부의 침입자를 물리치기 위해 영웅적으로 전투에 참여한 남녀들이 우리의 인민이며,

---

29) 인종(차별)주의는 정치적·경제적 식민주의를 뛰어 넘어 '존재의 식민성(coloniality of being)'을 구조화하며 사회제도적으로 끊임없이 재생산된다. 인종주의나 '인종적 사고'(racial thinking)가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간주될 때, 그것은 근대성의 일탈 혹은 실패로 제시되며, 따라서 널리 스며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근대사회로부터는 상대적으로 분리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식민성과 마찬가지로 인종주의는 근대성에 내재적일 뿐 아니라 근대성을 구성하기도 한다. 근대성-식민성-인종주의의 권력은 단 한 번도 단순히 상부구조적 현상이었던 적이 없다. 그것은 오히려 피지배 주민들의 집단적 실존 전체를 가로지르는 가운데 그들의 몸에 삼투되어 내부에서 삶형태를 생산하는 물질적 장치이다.

30) 메스티소는 백인과 원주민의 혼혈, 물라토는 백인과 흑인의 혼혈, 삼보는 원주민과 흑인의 혼혈을 뜻한다. 아메리카가 유럽의 식민지가 되기 전에는 피부색에 의한 인종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다. 19세기 초 라틴아메리카 대륙을 탐험했던 훔볼트(Humboldt)는 피부색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계급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유럽의 정복자들은 사회적 지배 관계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요소로 인종 개념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새로운 권력 모델로 자리 잡은 인종 개념은 아메리카 주민들을 분류하는 기준이 되었고, 점차적으로 전 세계 주민을 분류하는 기준이 되었다. 또한 인종 개념은 자본과 세계 시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노동력을 통제하고 착취하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냈다.

[...] 1810년 5월 혁명에 참여한 사람들도 그들과 같고, 투쿠만(Tucumán)과 살타(Salta)에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고 빌카푸히오(Vilcapugio)와 아요우마(Ayohuma)에서 명예롭게 전사한 이들의 핏속에도 인민의 피가 흐른다. 좌충우돌 굴종을 모르는 장군들도 우리 인민이요, 1816년 온 세계에 우리의 정치적 독립을 선언한 사람들, 영웅을 따라 황량하고 거친 안데스 산맥을 가로질러 간 타이탄의 후예들, [...] 민족통일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 공화국을 수립하는 데 기여한 이들, 국가의 주권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수없이 피를 흘린 사람들, [...] 그들이 우리의 피요 살이며, 영웅적이고 희생적이며, 고결하고 위엄 있는, 우쭐거리지 않으면서 도도하고, 직관적 지혜를 소유한 우리의 인민이다, 우쭐거리지 않고 평화롭고 부지런히 자신의 일상을 꾸려가는 사람들, 번잡한 도시에서 살아가면서도 이상(理想)을 간직하고 있는 이들이 우리의 인민이다(Perón 1947).

페론이 호명하는 인민은 단일하지도 않고, 동질적이지도 않으며, 무오류의 이상적인 존재도 아니다. 페론이 호명하는 인민은 차이를 갖는 다양한 보통 사람들이다. 페론이 호명하는 인민은 추상적인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한 투쟁에 참여함으로써 비로소 집합적이고 구체적인 동일성을 갖는다. 다시 말해, 인민은 다양한 차이를 갖는 보통 사람들이 수행적 실천을 통해 '등가사슬(chain of equivalences)'로 묶인 집합적 정체성이다. 요컨대, 인민은 이러저러한 속성을 갖는 각각의 개인들이나 집단들이 등가적 연결을 통해 형성된 집합적 동일성이다(Laclau 2005). 미국과 소련이 주도한 냉전 체제에 의해 재편된 지정학적 상황에서 사회주의 노선을 채택한 피델 카스트로(Fidel Castro)도 쿠바의 보통 사람들을 프롤레타리아 계급 대신에 인민으로 호명했다.

우리가 투쟁할 때 사용하는 '인민'이라는 말은 권력에 통합되지 않는 거대한 집단이고, [...] 모든 질서를 근본적이고 지혜롭게 변화시키기를 바라고,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집단인데, 무엇인가를 그리고 누군가를 믿기 때문에, 특히 스스로를 충분히 신뢰할 때 [...] 우리는 일자리가 없는 60만 쿠바인을, 임금을 강탈당하는 40만의 도시 노동자와 일용노무자를, 자기 것도 아닌 땅을 모세처럼 약속의 땅처럼 바라보면서 죽도록 일만 하는 10만의 소작농들을, 30만의 교사들을, 빚에 허덕이는 20만의 소상인들을, 희망을 가지고 기꺼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 10만의 젊은 전사들을 인민이라고 부른다. [...] 모든 불운을 겪으면서도 용기를 내 싸울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인민이다(Castro 1975, 페이지 없음).

반복하자면, 포퓰리즘은 헤게모니와 정당성의 위기에 인민을 호명한다. 인민을 호명하는 것은 각각의 개인과 집단의 다양하고 이질적인 민주주의적 요구들을 등가사슬로 묶어 억압받는 사회적 블록을 형성하고 역사적 지배 블록과 적대의 경계를 세움으로써 헤게모니적으로 경합하는 것이다. 이때 인민을 호명하는 자는 카리스마를 갖는 지도자이다. 포퓰리즘에서 카리스마를 갖는 지도자의 역할은 적대 개념만큼이나 부정적으로 인식된다. 이것이 포퓰리즘 정치가 권위주의와 동일시되거나 감성에 호소하는 선동적 정치로 비판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포퓰리즘에서 지도자가 필요한 것은 사회란 항상-이미 권력 관계로 분할되어 있기 때문이고, 헤게모니 질서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개인과 집단의 차이

를 제거하지 않으면서 등가 접속을 통해 인민이라는 집합적 정체성을 부여하는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클라우에 따르면 포퓰리즘 정치 지도자는 특정한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 인민의 집합적 정체성을 구성하고 결속시키는 어떤 이름이다. 따라서 "포퓰리즘은 오직 레닌-주의, 마오-주의, 페론-주의 등으로 존재할 뿐이다"(Vatter 2012. 진태원 2013, 203쪽에서 재인용). 이런 맥락에서 인민을 호명하는 지도자는 절대왕정 시기의 왕이 아니며 인민 또한 신민이 아니다(미주 3 참조). 지도자에 의해 호명된 인민은 실제적인 인민에서 주권자로서의 인민으로 변화된다. 이러한 변화는 1990년대 이후 급진적 포퓰리즘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지도자의 권위는 인민의 동의에 의한 것이다. 지도자는 전위(vanguard)에서 인민을 조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후위(rearguard)에서 인민의 삶의 경험을 공유하고 실천하는 존재이다. 멕시코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EZNL)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도자는 '복종하면서 명령한다(mandar obedeciendo)'.

제4절 나가며 –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이 던져주는 시사점

고전적 포퓰리즘에서 출발해 신자유주의 네오포퓰리즘을 거쳐 급진적 포퓰리즘까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등장한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이 라틴아메리카 역사와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첫째, 20세기 라틴아메리카 역사에서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 반복적으로 포퓰리즘 지도자들이 등장하여 정치권력을 장악했지만 포퓰리즘은 중심이 두꺼운 이데올로기가 아니었다. 라틴아메리카 독립 이후 건국의 이데올로기 역할을 한 것은 자유공화주의였고, 20세기에 들어와 고전적 포퓰리즘이 약화된 이후에 중심을 차지한 것은 '발전주의'와 사회주의 혁명 노선이었으며, 1980년대 이후에는 신자유주의가 가장 먼저, 가장 강도 높게 대륙 전체로 확산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중심이 두꺼운 이데올로기였던 자유민주주의와 때로는 적대하고, 때로는 결합되는 정치적 행동 방식이었다.

둘째,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은 일국적인 정치적 현상이 아니며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전 지구적인 맥락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고전적 포퓰리즘이 등장했던 양차 세계대전 시기의 주변부 자본주의는 제국주의적 약탈의 현장이었다. 또한 양차 세계대전이 라틴아메리카에 가져다준 예상치 않은 행운과 1929년 대공황은 라틴아메리카에 커다란 충격을 준 지정학적 변화였다. 여기에 영국의 헤게모니가 경제적·군사적 우위를 앞세운 미국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도 라틴아메리카 역사에 또 다른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은 이러한 전 지구적 차원의 지정학적 상황에서 등장했다. 제1차 세계대전은 라틴아메리카의 산업부르주아지와 노동계급의 성장을 통해서 신생자본주의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포퓰리즘은 이 과정에서 도시화가 진행된 나라에서 가능했던 민족주의적 성격의 '사회계약'이었다. 걸음마 단계의 취약한 민족 부르주아지가 노동 계급과 농민 집단을 동시에 성장시켰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네오포퓰리즘은 자유 시장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전 지구적 자본의 선제적 개혁의 결과로 주어진 정치적 민주화와 동시에 진행되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셋째, 포퓰리즘은 라틴아메리카 사회를 '정치적으로' 사유하고 '헤게모니적으로' 실천하는 계기이다. 사회를 정치적으로 사유한다는 것은 사회에 내재하는 적대의 존재론적 차원을 인식하고, 적대란 결코 극복될 수 없는 '구성적/근본적 부정성(constitutive/radical negativity)'에 기인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헤게모니적 실천은 항상-이미 존재하는 적대를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민주주의 질서를 추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헤게모니는 주어진 권력 작용을 통해 구성되며, 모든 헤게모니적 질서는 현존하는 질서를 탈구시켜 다른 질서를 구축하려고 하는 대항헤게모니적 실천에 의해 도전받는다.

참고문헌

가라타니 고진(2012),『세계사의 구조』, 조영일 옮김, 도서출판b.

갈레아노, 에두아르도(2004),『거꾸로 된 세상의 학교』, 조숙영 옮김, 르네상스.

김은중(2013),「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을 다시 생각한다—민중 개념의 재구성과 급진민주주의」,『역사비평』, no. 105, pp. 127-156.

랑시에르, 자크(2013),『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양창렬 옮김, 길.

무데, 카스·크리스토발 로비라 칼트바서(2019),『포퓰리즘』, 교유서가.

무페, 샹탈(2019),『좌파 포퓰리즘을 위하여』, 이승원 옮김, 문학세계사.

무페, 샹탈(2020),『경합들: 갈등과 적대의 세계를 정치적으로 사유하기』, 서정연 옮김, 난장.

이진경(2008),『사회구성체론과 사회과학 방법론』, 그린비.

주정립(2006),「포퓰리즘에 대한 이론적 검토」,『시민사회와 NGO』, 제4권 1호, pp. 43-79.

진태원(2013),「포퓰리즘, 민주주의, 민중」,『역사비평』, 105, 역사비평사.

킨, 벤자민·키스 헤인즈(2014),『라틴아메리카의 역사(하)』, 김원중·이성훈 옮김, 그린비.

Castro, Fidel(1975), "La Historia me absolverá", http://www.adelante.cu/index.php/es/coberturas/48-26-de-julio-en-cuba/4284-el-pueblo-de-fidel.

Dussel, Enrique(2001), Hacia una filosofía política crítica, Bilbao: Editorial Desclée de Brouwer, S.A.

Dussel, Enrique(2012), “Cinco tesis sobre el populismo," El eterno retorno del populismo en América Latina y el Caribe, Márquez Restrepo, Martha Lucía et. al.(eds.), Bogotá: Editorial Pontificia Universidad Javeriana, pp. 159-180.

Germani, Gino(1978), Authoritarianism, Fascism and National Populism,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Books.

Gpnzales, Osmar(2007), “Los orígenes del populismo latinoamericano. Una mirada diferente,” Cuadernos del CENDES, vol. 24, no. 066, pp. 75-104.

Ionescu, Ghita and Ernest Gellner(eds.)(1969), Populism: Its Meanings and National Characteristics, London: Weidenfeld & Nicolson.

Kazin, Michael(1998), The Populist Persuasion: An American History, Ithaca &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Laclau, Ernesto(1987), “Populismo y transformación del imaginario político en América Latina,”

Boletín de Estudios Latinoamericanos y del Caribe, no. 42, pp. 25-38.

Laclau, Ernesto(2005), On Populist Reason, London: Verso.

Perón, J.D.(1947), Discurso pronunciado en la Academia Argentina de Letras con motivos del Día de la Raza en el Cuarto Centenario de nacimiento de Don Miguel de Cervantes Saavedra, Buenos Aires, Argentina.

Vatter, Miguel(2012), "The Quarrel between Populism and Republicanism: Machiavelli and the Antinomies of Plebian Politics", Contemporary Political Theory, vol. 11, no. 3, p. 247.

토론 3

어떤 '인민'인가? - 우파 포퓰리즘 시대의 질문

박정원(경희대학교)

지난 2019년 12월 페론주의자인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후계자 격인 알베르토 페르난데스가 당선된 다음 날, 조선일보는 이례적으로 이 지구 반대편 나라의 선거 결과를 지면 1면에 보도하였다. 페론주의를 지향했던 역대 아르헨티나 대통령들의 사진을 나열하면서 이 나라가 포퓰리즘의 덫에 다시 걸려들었다는 점을 크게 강조하였다. 라틴아메리카 연구자로서 평소 아르헨티나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던 이 신문이 이렇게 큰 지면을 할애하여 보도하는 지점이 흥미로웠다. 그리고 포퓰리즘을 비난하기 위해 지구 반대편의 대선 결과를 끌어올 만큼 이에 대한 반대와 거부감이 크다는 것을 또한 차례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포퓰리즘을 비난하는 이들은 우파에 한정되지 않는다. 한국의 진보 진영에서도 포퓰리즘은 상당 부분 의심스럽고 불편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어쩌면 포퓰리즘은 이 시대의 가장 오염된 정치 용어일지 모른다. 이러한 '배드 네임(bad name)' 앞에서 김은중 교수님은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와 사례를 통해 포퓰리즘이 갖는 역동성과 '인민성'을 회복해야 함을 설득력있게 제시하고 있다. 특히, 라틴아메리카적 맥락에서 살펴볼 때 포퓰리즘은 단순히 선거용 전술이 아닌 사회의 구조적 변동의 시기와 맞물려 있다는 점, 그리고 국내적 문제뿐 아니라, 세계 체제의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강대국 혹은 제국주의적 위협에 직면한 주변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포퓰리즘은 지배에 대항하려는 민족주의적 나아가서는 탈식민적 경향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포퓰리즘에서 핵심적인, 그러나 지나치게 간과되고 있는 '인민(people)'을 글의 주요 논의지점으로 가져온다. 기존의 계급이나 집단으로 분류되지 않는, 추상적인 인민으로 분류되지만 실제로 인민으로 호명받지 못해온 이들을 포괄하고 이들의 집합적 의지를 통해 새로운 방식의 정치를 향해 나아가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런 측면에서 김은중 교수님이 인용하였듯이 포퓰리즘은 어떤 하나의 테제나 이념으로 정리되기가 힘들며, '인민'을 구성하는 주체들에 따라 레닌-주의, 마오-주의, 페론-주의로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즉, 포퓰리즘은 이런 역동성으로 인해 민주주의와 진보를 향한 새로운 대항헤게모니로서의 에너지와 정동을 담지하게 된다.

하지만 최근 십년 간의 모습을 볼 때 '인민'이 상당히 당혹스러운 방식으로 호명되는 모습을 목도하게 된다. 트럼프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득권의 위협을 받는 이들이 자신을 '보통의 평범한 사람'으로 위치 지우면서 특권과 이익을 지키기 위한 세력화와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민족주의의 경우도 오히려 강대국에서 세력화되는 상황이 지구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목도하며 라클라우의 이론적 파트너인 샹탈 무페는 포퓰리즘을 구하려는 일환으로

민주주의의 확장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우파 포퓰리즘과 좌파 포퓰리즘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드러내고자 한다. 우파 포퓰리즘의 경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통해 포용할 수 있는 집단 혹은 주체를 최소화하려는 목표 속에서 배제의 프레임을 담론으로 사용하고 이를 강제하는 방식으로 나아간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주체는 시민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반면, 좌파 포퓰리즘은 자유민주주의가 재현하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의 급진적인 확장을 시도하며 대중권력의 형성을 지향한다. 다양한 재배열을 통해 형성되는 대중은 등가적 관계 속에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절합되는 과정이 전개된다는 것이다.[31)]

포퓰리즘이란 용어가 오염된 시대에 (라틴아메리카에서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같이) 우파 포퓰리즘의 득세로 이 '인민'이라는 용어도 부침을 겪고 있다. 김은중 선생님이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고 포퓰리즘의 가치를 복원하기 위한 무페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싶다. 우파 포퓰리즘과 좌파 포퓰리즘을 구별하는 이론적 주장에 동의하시는지, 그녀의 이론화가 '인민'을 중심에 놓는 교수님의 포퓰리즘 논의에 어떤 함의가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

31) 샹탈 무페(2018), 좌파 포퓰리즘을 위하여, 이승원 역, 문학세계사, 103쪽.

발제 4

포퓰리즘은 왜 그리고 어떻게 몹쓸 것이 되었나?

박성진(광주교육대학교)

한국 사회는 포퓰리즘이라는 비극에 빠졌다.
깨어있는 국민만이 포퓰리즘의 비극에서 벗어날 수 있다.
포퓰리즘에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

제1절 들어가며

위의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 '포퓰리즘'에 대한 가치평가는 이미 끝난 것처럼 보인다. 현재 포퓰리즘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것이며 망국적인 정치행태로 인식되며 일반대중에 영합하여 갈등과 정치혐오를 부추기고 반엘리트주의를 조장하는 것이 되었다. 간단히 말해서 지금 포퓰리즘은 '나쁜 것' 혹은 '몹쓸 것'이 되었다. '포퓰리즘적 발상이다', '포퓰리즘적 정책이다'라는 말은 이미 정치인에 대한 비판의 대명사가 되었고 포퓰리스트라고 비판받는 정치인이나 관료는 자신을 변명하기 바쁘다. 많은 학자와 지식인들이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민주주의를 잠식하여 결국 파멸로 몰아넣는 것이 포퓰리즘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반(反)이성주의'로 점철된 포퓰리즘으로부터 대의민주주의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 한국이라는 이 시공간 속에서 포퓰리즘은 '악(惡)'이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하다. 수많은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 그들의 뜻을 받들겠다고 말하며 동시에 포퓰리즘을 비난하고 대중에 영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주장한다. 국민과 대중이 전혀 다른 존재가 아니고서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도 모순이다. 물론 수많은 이유를 들어 대중과 국민이 서로 다른 의미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것과 '대중에 영합한다'는 명제 사이에 중첩 지점이 존재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왜 이런 모순된 현상이 발생한 것인가?

본 연구는 도대체 포퓰리즘이라는 것이 '왜' 그리고 '어떻게' 부정의 가치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추적한다. 그렇다면 포퓰리즘이 왜 '몹쓸' 것이 되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제2절 포퓰리즘은 왜 '몹쓸'것이 되었나?

선거기간 후보자 TV 토론회나 시사토론 방송에서 상대방을 공격할 때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있다. 그것은 '무책임한 포퓰리즘적 발상입니다'라는 말이다. 그리고 이후의 전개되는 과정은 식상하다. 포퓰

리즘이라고 공격을 당한 사람이 자신의 발언이나 공약이 '포퓰리즘적'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변명하기 바쁘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과정을 아무런 거부감이나 의심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그렇다면 우리는 포퓰리즘은 '나쁜' 것이라는 이 공유된 정서가 정당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포퓰리즘이 시작한 바로 그 지점으로 돌아가 보자. 도대체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가.

19세기 말, 정확히 1892년은 포퓰리즘 정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해이다. 이 해는 미국에서 국민당(People's Party)이 창설된 해이기 때문이다. 이 당은 당시 다른 이름으로 포퓰리스트당(Populist Party)이라고 불렸고, 당원들은 포퓰리스트라고 불리었다(미즈시미 지로, 2019, p. 60). 물론 많은 학자들이 포퓰리즘의 기원을 1870년 러시아에서 나타난 '인민 속으로' 운동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포퓰리즘이라는 언어의 어원에서 보자면 미국의 국민당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서병훈, 2008, p. 27). 실제로 국민당을 창당하기 위해 모인 1891년 전국대회에서 캔자스 농민 동맹의 회원이 '포퓰리스트'라는 용어를 제시한 것이 사실이다. 이들은 19세기 말 경제사회의 대규모 변동으로 인한 극심한 빈부격차와 가공할 가난 그리고 거대 기업의 독점과 횡포에 대항하고자 포퓰리스트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며 정말로 '보통 사람들(the plain people)'을 위한 정부를 희망하였다. 다음은 1892년 7월 4일에 작성된 국민당 강령의 일부이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우리의 단합된 행동을 무엇보다도 잘 정당화하고 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물질적으로 파멸의 위기에 봉착한 나라의 한복판에 서 있다. 부패가 투표함과 주의회와 연방의회를 지배하고 사법부에까지 미치고 있다. 사람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대부분의 주는 횡행하는 협박과 매수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자를 투표함에서 격리시키고 있다. 신문은 대부분 매수당했거나 침묵을 지키거나 재갈이 물려 있고 여론은 말이 없으며, 사업은 위축되고, 가옥은 저당 잡히고, 노동자는 가난하고, 토지는 자본가의 수중에 집중되고 있다..... 수백만 노동의 결실이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소수의 거대한 부를 축적시키기 위해 뻔뻔스럽게 도난당하고 있으며, 이들 거대한 부의 소유자는 공화국을 멸시하고 자유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또한 이에 못지않게 정부의 부정으로 인해 두 거대 계급 – 부랑자와 백만장자 –이 양산되고 있다(한국미국사학회, 2006, pp. 210-11).

위의 글에 나오는 것처럼 국민당원들, 즉 포퓰리스트들은 당대의 모순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미국을 건설하고자 하였다. 정치의 현장에서 처음 나타난 포퓰리즘은 당대의 모순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하나의 운동이었지 개념화된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은 당대에도 그리고 이후 역사적으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당시 1898년 자료를 보더라도 국민당 지지자들을 '포퓰리스트'라고 지칭하며 노동자 문제와 실업 문제의 해결에 대안을 제시하는 이들의 활동과 노력에 가치를 부여한다. 포퓰리스트들의 헌신적 노력이 언젠가는 미래의 지도자들에게 새로운 길을 안내하고 그들의 진실이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평가하며 포퓰리즘에 대한 긍정성을 인정한다(Peffer, 1898, p. 23).

하지만 우리가 이 지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국민당의 진출과 성장이 기존의 기성정당, 즉 민주당과 공화당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는 점이다. 특히나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즉 막대한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대기업이나 금융회사에게 포퓰리스트 당과 정책은 자신들의 부와 재산을 위협하는 불안과 공포의 존재였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흘러 라틴아메리카에서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1930년 브라질에서 제툴리우 바르가스(Getulio Vargas)는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리고 지역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새로운 유권자로 포섭하고 기존의 부패세력을 처리하겠다는 캠페인을 전개하며 자신의 입지와 독재 권력을 굳혀갔다. 이후 대통령직에 취임한 뒤 주요 산업을 국유화하고 복지와 사회개혁을 추진했다. 하지만 높은 인플레이션과 열악한 경제 상황으로 다시 쿠데타로 실각하고 만다(Taggart, 2017, p. 108). 그리고 1943년 6월 아르헨티나에서는 후안 페론을 포함한 장교단이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 페론과 그의 동조자들은 노동자 계급에 주목하며 임금 인상, 지대 동결, 노동조합 인정 등의 정책을 실시하며 노동자와 빈민층의 지지를 확보해 나아갔다. 하지만 페론은 자신의 정적이 라디오나 신문 등 언론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였으며 명예훼손법을 이용하여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기도 하였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나타난 정치 현상은 당대의 지역적 상황과 특수성에 기반한 고유한 것이었다. 하지만 1962년 라틴아메리카에서 지노 제르마니(Gino Germani)가 포퓰리즘을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포퓰리즘이라는 단어가 붐(boom)을 일으키기 시작한다(김은중, 2012, p. 28). 그러나 포퓰리즘이라는 개념은 1960년대까지 정립되지 못한 채 남아있었고 그것에 대한 가치평가는 보류되었다. 실제로 영국의 런던정경대학교에서 진행된 포퓰리즘에 관한 논의에서도 아무런 합의와 정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었다(Gellner & Ionescu, 1969).

그런데 지금은 '포퓰리즘'이라는 단어가 라틴 아메리카의 정치를 설명하는 대명사가 되었고 과거 포퓰리즘이 가진 긍정적인 측면은 모두 삭제되고 라틴아메리카에서 발생된 많은 문제들, 즉 독재와 대중기만 그리고 경제침체 및 국가파산의 원인이 되었다. 라틴 아메리카라는 특수한 지역에서 발생한 정치현상이 포퓰리즘으로 설명되면서 포퓰리즘이 가진 본래의 긍정적 의미는 모두 사라지고 부정의 가치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긍정적이었던 것이 부정적인 것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실, 즉 단어가 가진 기표(記表, signifiant)는 그대로 있는데 기의(記意, signifié)가 변경되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대부분 권력 작용에 의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권력이 가치를 작동시키며 그것은 단어가 가지는 코드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의 보수 일간지들은 포퓰리즘에 대한 가치를 부정적인 것으로 설정하고 이것을 '대중영합주의'로 번역하며 이를 확대 재생산시키기 시작했다. 실제로 홍윤기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시대에 포퓰리즘에 대한 것을 '대중영합주의'라고 번역하는 시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나갔다.[32] 그리고 홍윤기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32) 홍윤기, "한국 포퓰리즘 담론의 철학적 검토", 『시민사회와 NGO』 제4권 제1호, (2006), p. 11. 홍윤기의 분석에 따르면, 종합일간지의 포퓰리즘에 대한 언급이 노태우 정부 때는 3건,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14건에 불과하던 것이 김대중 정부에 와서는 432건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약 1,200건(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 동안의 언급 횟수만 1,158건으로 집계됐다.) 이상으로 증가하게 된다.

한국 언론들이 populism을 부자연스러운 외래어(번역어) 병기법까지 동원하며 의미를 대중영합주의로 고착시키는 의도가 단순한 어학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참여를 조장하는 모든 시도, 시민단체들에 의한 모든 정치적 연대의 시도"를 포퓰리즘으로 공격하는 데 있다고 본다. 즉 노무현 집권기의 포퓰리즘 공세는 이제 단순히 수구적 이익에 반하는 정권에 대한 정치적 비방이 아니라, 시민 차원에서 연대적 진보를 추구하는 시민사회의 모든 움직임을 사상적으로 규정하면서 실천적으로 봉쇄하는 이데올로기 담론으로 작동한다(홍윤기, 2006, p. 17).

위 홍윤기의 지적처럼 가치 중립적인 단어, 때로는 긍정의 가치를 함의하고 있었던 '포퓰리즘'은 언론을 비롯한 기존의 기득권들의 권력 작용으로 부정의 가치를 함의하게 되었다. 니체(F. Nietzsche)의 이론에서 도덕에서의 노예 반란이 원한 자체가 창조적이 되고 가치를 낳게 될 때 시작되는 것처럼,[33] 처음 포퓰리즘 혹은 포퓰리스트가 등장했을 때 기득권이 가졌던 두려움과 원한이 창조적이 되고 가치를 산출하면서 그들은 포퓰리즘을 몹쓸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기득권들이 가진 창조적 반작용은 '포퓰리즘'이라는 시니피앙(signifiant)이 가진 시니피에(signifié)를 '대중영합주의'로 한정 짓고 포퓰리즘이 가진 가능성들에 한계를 부여한 것이다. 그리고 포퓰리즘이 긍정적으로 해설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며 이러한 담론을 지속적으로 재생산시킨다. 또한 권력과 기득권은 '포퓰리즘'이 가진 의미 그대로를 해석하지 않고 이것을 '인기영합주의'이나 '대중영합주의'라는 단어로 해석하는 것을 지식이나 교양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이러한 지식을 재생산하며 포퓰리즘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시도들을 '반지성'이나 '지식이 없는 것', '몰상식한 것'으로 치환한 것이다.

푸코의 분석에 따르면, "지식은 어떤 규칙이나 정해진 코드를 따르는 것을 '정상적'이나 '합리적'이라 정당화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비정상적'이나 '병리적'이라 배척한다. 지식이 권력의 작동에 다름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식은 규범을 만들고 이를 정상화/자연화한다. 지식은 권력에 의해 형성되고 권력은 지식 없이 작동하지 못한다"(조원광, 2012, p. 256). 이처럼 권력과 기득권은 포퓰리즘이 처음 등장했을 때의 두려움을 상기하며 자신들이 가진 권한과 이익에 배치되는 정치행위 일반을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로 규정하고 그 의미를 무책임한 '인기영합주의'나 '대중영합주의'로 규정하여 이들의 정치행위를 축소한 것이다. 권력은 '포퓰리즘은 악(evil)이다'라는 도식을 만들고 그것을 지식으로 포장하여 유통 및 재생산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켰갔다.

제3절 포퓰리즘은 어떻게 '몹쓸'것이 되었나?

권력과 지식의 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포퓰리즘에 대한 비판에는 기득권이 자신의 이익을 수호하

33) 니체는 '좋음'과 '나쁨'의 개념이 어떻게 '선'과 '악'이라는 개념으로 변질되었는지를 추적한다. 그는 선과 악이라는 개념이 탄생한 이유를 약자 혹은 노예들이 가지는 원한의 감정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강자에게 가지는 원한의 감정이 강자의 행위를 '악'으로 만들어 버리고 자신들, 즉 약자의 행위를 '선'으로 포장했다는 것이다. 니체는 이러한 것을 원한 자체가 창조적이 되고 '선과 악'이라는 가치를 만들었다고 지적하며 이것을 노예 반란으로 규정한다. 니체에게 원한의 감정은 약자들이 가지는 부정의 것이며 이것은 다시 화살을 자기 자신에게 돌려 '양심의 가책'이라는 병을 만들어 낸다. 이에 대해서는 F. Nietzsche, tran. Douglas Smith, On the Genealogy of Morals, (Oxford:Oxford University Press, 2009), GM I no. 10 참조.

고자 하는 전략이 담겨져 있다. 이러한 사실은 역설적으로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이 긴밀한 관계라는 것을 말해 준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 사실을 검토했을 때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렇다면 포퓰리즘에 대한 가치판단을 하기 전에 '포퓰리즘' 혹은 '포퓰리스트'라고 불리는 정치행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에 함의된 요소가 아닌지 의심해 보아야 한다. 아울러 이것이 일반적인 정치 현상이 아닌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하지만 기득권의 원한의 감정으로 진보적 정치인들을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포퓰리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지금은 진보와 보수 혹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우파와 좌파 구분 없이 상대 정치인을 비난하는 데 포퓰리즘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우리는 포퓰리즘이 어떠한 방식을 통해 '몹쓸' 것이 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위에서 포퓰리즘이 몹쓸 것이 된 이유를 알았다면 이제는 그 방식에 대해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하게 등장하게 되는 정치현상이 어떻게 포퓰리즘이라고 공격받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34] 바로 여기서 이데올로기나 가치관 그리고 개인적 신념을 가로질러 포퓰리즘을 '나쁜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포퓰리즘을 정의할 수 있거나 우리가 지금까지 포퓰리즘이라고 칭했던 모든 정치행위들을 가로지르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도 어떤 정치행위나 현상들을 포퓰리즘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현상, 무엇이든 포퓰리즘이라고 낙인찍고 거의 모든 정치행위를 포퓰리즘이라는 범주에 넣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규정된 포퓰리즘이라는 범주의 테두리가 굉장히 넓고 모호하기 때문이다. 포퓰리즘을 규정하는데 사용되는 일반적 요소로 '인민에의 호소', '적과 동지의 구분', '이분법적 구성', '갈등의 재생산 및 확대', '민중과 엘리트 집단의 구분', '이상향 추구', '위기 상황의 대응',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적대적 방식' 등이 있다. 포퓰리즘 연구로 유명한 폴 태가트(Paul Taggart)의 주장이나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서도 포퓰리즘을 이와 같은 요소를 중심으로 판단한다(Taggart, 2017, p. 18).[35] 얼핏 보기에 어떤 정치현상이나 행위를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기 위해 설정한 이와 같은 요소들은 충분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으며 포퓰리즘의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포퓰리즘이 가진 고유한 특성인지는 의심스러운 일이다.

'인민에의 호소'나 '적과 동지의 구분', '이분법적 구성' 및 '갈등의 재생산 및 확대'를 비롯해 포퓰리즘의 특성이라고 규정된 요소들 모두 일반적인 정치행위의 특성이다. 최소한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공동체에 소속된 정치인이나 정당에게 경쟁상대는 늘 존재하는 것이며 이 경쟁상대들은 권력을 쟁취하는데 있어 주요한 방해 요소이다. 따라서 거의 모든 정당이나 정치인들은 배척의 대상으로 결코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되는 적과 반드시 권력을 쟁취해야 하는 동지를 구분한다. 다시 말해, 거의 모든 정당이나 정치인이 갈등의 양상이나 균열을 확대하고 재생산하는 것이다. 정당체제의 형성과 변화에 대해 밀도 있게 연구한 립셋과 로칸에 따르면, 균열(cleavage)이란 일반적으로 사회구성원 간의 이해관계의 상

34) 포퓰리즘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서는 서병훈 (2012)를 참조. 서병훈은 포퓰리즘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포퓰리즘을 현대사회의 병리적 현상으로 간주하는 병리론, 포퓰리즘을 민주주의의 내적 갈등에서 비롯되는 일종의 적신호로 민주주의의 한 부분으로 보는 그림자론, 그리고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의 한 부분임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민주주의의 주변부에 있다는 주변부론으로 구분하며 이 중 주변부론이 가장 설득력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주변부는 민주주의의 중앙과 분리해서 솎아내야 한다고 말한다.
35) https://www.britannica.com/topic/populism (검색일: 2020. 10. 02)

충으로 인한 갈등이 집단의 정체성과 결합되어 조직적으로 표출되는 것으로 유권자들의 정치적 판단과 정당 간 경쟁, 그리고 정당체계를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36] 이는 균열과 갈등은 정당체제를 유지하는 정치 공동체에서는 늘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적과 동지를 구분하여 균열과 갈등을 생산하는 것이 정치 공동체의 일반적 현상이다. 포퓰리즘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정치 현상의 일반적 요소들을 가지고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한다. 즉 일반적이며 대부분의 정치 현상을 포함할 수 있는 범주를 먼저 설정한 후 비판의 대상을 바로 이 범주 안에 집어넣고 개별적 공약이나 정책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포퓰리즘을 화두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은 일종의 포러 효과(Forer effect) 혹은 바넘 효과(Barnum effect)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바넘 효과란 일반적이고 모호하며 그 범위가 매우 넓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성격묘사 등이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현상을 의미하는 심리학 용어이다(Forer, 1949, p. 118). 예를 들어, "당신은 고집이 세지만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말은 잘 듣는 편이다"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상대방이 자신의 성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그 사람의 다른 말도 신뢰하게 되는 현상으로 누구에게나 해당될 일반적 내용을 통해 신뢰를 획득하는 일종의 속임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바넘 효과가 포퓰리즘에 대한 비판에도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정당이나 정치인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일반적 요소들을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한 이후 대중들의 신뢰를 획득하고 상대방에 대한 비판의 설득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도식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포퓰리즘에 대한 정의를 일반적이고 모호하게 구성한다.
↓
일반적이고 모호한 정의에 근거하여 상대방을 포퓰리즘의 범주 안에 넣는다.
↓
대중들로부터 신뢰를 획득한다.
↓
다른 부정적 요소들을 덧입혀 대중들에게 상대방이 부정적으로 인식되게 한다.[37]

위의 도식화된 구조에서 알 수 있듯이 개념 정의도 모호하며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사라지며 그 실체도 알 수 없는 '포퓰리즘'이 상대방을 비판하는데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바넘 효과 때문이다. '포퓰리즘'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면 모호할수록 바넘 효과는 배가되고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기 쉬워진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즉 상대방을 너무나 쉽게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포퓰리즘에 대한 비판이 좌우를 가리지 않고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선택된 것이다. 포퓰리즘에 대한 비판은 처음부터 실체가 없었기 때문에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했고 아무나

36) 조성대, "균열구조의 정당체계: 지역주의, 이념, 그리고 2007년 한국 대통령선거", 『현대정치연구』 1(1), (2008), p. 170. 정당체제와 사회 혹은 정치 균열에 대해서는 Seymour M. Lipset & Stein Rokkan, Party System and Voter Alignment, (New York: The Free Press, 1967); 마인섭, "정당과 사회균열구조", 심지연 편, 『현대 정당정치의 이해』, (서울 백산서당, 2004); 오상택, "한국 정당체계의 기원과 형성: 해방기 사회균열구조와 정치적 동원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7) 참조.

37) 이 도식은 D. H. Dickson & I. W. Kelly, "The 'Barnum Effect' in Personality Assessment: A Review of the Literature". Psychological Reports 57 (1), (1985)를 참조하여 구성하였음.

사용 가능했다.

이제 우리는 누군가 상대방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한다면 그것이 우리를 현혹시키는 바넘 효과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 그리고 굳이 '포퓰리즘'이 현 정치 체제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라고 믿는다면 포퓰리즘은 없으며 '포퓰리즘들'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실체가 없기에 어디든 있을 수 있으며 어디에도 없는 것이 바로 '포퓰리즘'이다.

제4절 결론

본 연구는 포퓰리즘에 대한 일반적 사유, 즉 포퓰리즘은 대의민주주의에 대해 적대적이며[38] 대중영합적으로 인기에 집착하고 경쟁적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무책임한 정치행태를 보이는 것이라는 일반적 관념을 점검해 보는 것이 목적이었다. 하여 포퓰리즘이 정치 현장에서 처음 사용되었던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 지금의 사유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처음에는 자랑스럽고 민중의 삶과 사회적 모순을 적극적으로 대면하며 그것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투했던 포퓰리즘은 기득권의 원한의 감정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며 '몹쓸' 것이 되고 말았다. 포퓰리즘은 이 원한의 감정을 통해 민주주의의 적이 되었고 대의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나쁜' 것이 되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포퓰리즘에 대한 인식은 이러한 권력과정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아무도 정의하거나 규정할 수 없는 것을 라틴아메리카에서 발생한 정치현상과 경제침체의 원인으로 규정하며 포퓰리즘을 부정적 인신의 산물로 만들었다.

또한 포퓰리즘에 대한 정의를 모호하게 만들어 어떤 정치 현상이든 포획될 수 있게 만들어 경쟁적 정당이나 정치인을 포퓰리즘 혹은 포퓰리스트로 규정하는 모습도 살펴보았다. 기득권이나 정치인들이 이익을 성취하기 위해 바넘 효과를 사용하는데 포퓰리즘이라는 정의될 수 없는 모호한 단어는 최상의 먹잇감이었다. 일반적 정치현상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상대방의 정치를 모호하게 설정된 포퓰리즘으로 포획하며 다시 부정의 이미지를 덧칠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 가치의 전도와 바넘 효과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기에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포퓰리즘이 '몹쓸' 것이라는 주장을 상식이고 교양인 것처럼 받아들였다. 하지만 지금 포퓰리즘을 다시 보아야 한다. 최소한 정치 현상이나 사태를 철학적으로 성찰하고자 한다면 포퓰리즘은 없으며 포퓰리즘들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포퓰리즘이라는 단어가 가진 기표의 성격과 권력에 의해 허무하고 정교하게 난자된 기의를 살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기의없는 기표 혹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것, 허무의 공간을 주유하는 어떤 것에 포획되어 있다.

---

38) 대의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재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 대의와 민주주의의 합성어인 대의민주주의, 즉 '민주주의'가 '대의'라는 형용사에 의해서 꾸밈을 받고 있는 것이 형용모순은 아닌지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과두정의 정치체계를 '대의민주주의'라고 부르며 그것을 억지로 애써 정당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재성찰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마인섭, “정당과 사회균열구조”, 심지연 편,『현대 정당정치의 이해』, 서울: 백산서당, 2004.

미셸 푸코,『감시와 처벌: 감옥의 역사』, 파주: 나남, 2011.

미즈시미 지로, 이종국 역,『포퓰리즘이란 무엇인가』, 일산: 연암서가, 2019.

서병훈,『포퓰리즘이란 무엇인가』, 서울: 책세상, 2008.

존 주디스, 오공훈 역,『포퓰리즘의 세계화』, 서울: 메디치, 2017.

폴 테커드, 백영민 역,『포퓰리즘』, 파주: 한울, 2017.

한국미국사학회,『사료로 읽는 미국사』, 서울: 궁리, 2006.

김은중,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에 대한 정치철학적 재해석”,『리베로아메리카연구』23.2, (2012).

서병훈, “포퓰리즘과 민주주의”,『리베로아메리카연구』, 23(2), (2012).

서영표, “포퓰리즘의 두 가지 해석: 대중영합주의와 민중 민주주의”,『민족문화연구』, 63호, (2014).

오상택, “한국 정당체계의 기원과 형성: 해방기 사회균열구조와 정치적 동원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7).

조성대, “균열구조의 정당체계: 지역주의, 이념, 그리고 2007년 한국 대통령선거”,『현대정치연구』1(1), (2008).

조원광, “미셸 푸코 권력이론의 재조명: 교환이론, 네트워크이론, 3차원 권력이론과의 비교를 중심으로”,『경제와 사회』94호, (2012).

홍윤기, “한국 포퓰리즘 담론의 철학적 검토”,『시민사회와 NGO』제4권 제1호, (2006).

Gellner, Ernest & Ghita Ionescu, Populism: Its Meaning and National Characteristics, London: Macmillan, 1969.

Gidron, Noam. & Bart Bonikowski, Varieties of Populism: Literature Review and Research Agenda, MA: Harvard Weatherhead Center, 2013.

Lipset, Seymour M. & Stein Rokkan, Party System and Voter Alignment, New York: The Free Press, 1967.

Lipset, Seymour M. Political Man: The Social Bases of Politic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1.

Nietzsche, F. tran. Douglas Smith, On the Genealogy of Moral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Forer, B. R. “The fallacy of personal validation: A classroom demonstration of gullibilit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4 (1), (1949).

Peffer, W. A. “The Passing of the People's Party”, The North American Review, vol. 166, no. 494, (1898).

https://ko.wikipedia.org/wiki (검색일: 2020. 10. 04).

https://www.britannica.com/topic/populism (검색일: 2020. 10. 02).

토론 4

‘바넘 효과’에 빠지지 않는 대중에 대하여

심승우(서울교육대학교)

1. 발표자의 글은 포퓰리즘에 대해 ‘대중’적인 언어와 내용으로 흥미롭게 읽힐 수 있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 중간에 나오는 니체의 도덕론이 조금은 어려운 감이 있지만 글 전체의 대중성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다. 발표자는 포퓰리즘이 어떻게 몹쓸 것이 되었는지를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다. 먼저 개념적 수준에서 포퓰리즘이라는 ‘기표’ 자체는 역사적으로 규범적 평가를 단정하기 힘들지만(오히려 기득권 지배세력의 독점과 타락을 방지하겠다는 긍정적인 의미이지만) 현실의 ‘기의’로서 포퓰리즘은 부정적인 의미로 연쇄적인 고리를 가지면서 몹쓸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도 대중의 힘을 두려워하는 기득권 세력의 공포가 중요한 원인(이유)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한다.

2. 발표자는 포퓰리즘을 몹쓸 것으로 만드는 두 번째 ‘방식’의 수준에서 일종의 심리학적인 ‘바넘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모든 정치에서 발생하는 특성들을 마치 포퓰리즘만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일반화시킨 후에, 포퓰리즘으로 매도한 상대의 정당성 기반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공격을 가하는 자신들의 논의는 非포퓰리즘이라는 심리적 확증 효과를 손쉽게 거둔다는 것이다.

3. 발표자의 이러한 분석은 명료하고 또 현실적인 설명력을 가지며, 한국 정치에서 포퓰리즘을 이해하고 균형 있는 평가를 위해 중요한 쟁점들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자로서 향후 포퓰리즘의 더욱 생산적인 논쟁을 위해 몇 가지 문제제기 혹은 고견을 듣고자 우문을 던진다.

4. 포퓰리즘을 몹쓸 것으로 만들려는 집단의 입장에서 보자면, 대중은 자신들의 ‘바넘’적인 선동에 넘어가기 쉬운 대상으로 간주될 것이다. 그런데 발표자는 포퓰리즘 비난이 대중들에게 관철되는 방식을 ‘바넘 효과’로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포퓰리즘이 작동하는 원리(메카니즘)에 있어서는 발표자 역시 대중의 주체성, 능동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포퓰리즘 공격 성공=바넘 효과에 넘어간 대중. 그런데 발표자는, 포퓰리스트이든 反포퓰리스트이든 대중을 선동이나 조작의 대상으로 여기는 여타의 관점에 비판적인 입장일 것 같다. 그렇다면 발표자에게 대중은 어떤 존재인가?

5. 앞의 질문과 연관되어 있는 또다른 문제이기도 하다. 과거 종합부동산세 인상이나 최근의 세금 인상 논쟁 등에서도 ‘세금 폭탄’ 등의 담론을 활용하여 개혁정책이나 법안을 좌절시키려는 기득권 세력

의 논리가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우파 포퓰리즘으로 단순화시켜보다면, (만약 논쟁이 되는 세금인상이 공동체 전체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선택이었다고 가정할 때) 기득권 세력이 형성, 유포시키는 재산권 침해(혹은 침해당할지도 모른다는) 담론에 넘어가는, 즉, '바넘 효과'에 빠져 세금인상을 비난하는 대중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대중들은 공동선 보다는 사익 우선적이며 무지하고 맹목적이라는 플라톤적인 비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7. 결국 토론자가 이 글을 읽으면서 머릿 속에 맴도는 생각은 대중의 이중성 혹은 양가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넘 효과에 빠지는 대중과 바넘 효과에 빠지지 않는 대중, 노예 정신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노예적인 원한에 빠지지 않고 주인이 되려는 대중, 민주주의 주체, 주권자임을 주창하면서도 통치의 대상, 객체에 머무르려는 대중. 이 모순적이면서도 혼란스러우며 이율배반적인 것처럼 보이는 대중을 어떻게 이해하고, "1898년 미국의 국민당원들, 즉 포퓰리스트들은 당대의 모순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미국을 건설하고자 하였"던 대중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포퓰리즘의 생산적인 논쟁의 중요한 꼭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8. 논평문을 작성하다보니, 우문(愚問) 치고는 너무 무겁고 영원한 미완의 화두를 던진 것 같기도 하다. 발표자가 정답을 말해줄 수 있다면, 이미 그 때는 우리가 새로운 대중의 시대를 살아가는 미래가 될 것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대중이 대중에 대해 불신과 공포를 갖는 포퓰리즘(에 대한 비난)의 모순을 해소하는 것이 민주주의 질적인 업그레이드를 위한 중요한 고비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발제 5

민주적 포퓰리즘과 정치의 재구성

이승원(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제1절 포퓰리즘 계기

1. 한국사회에서 다뤄진 포퓰리즘

포퓰리즘만큼 상처가 많은 용어도 드물 것이다. '민주주의'도 이백 년 전만해도 폭도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곤 했다. '마르크스주의'가 그 학술적 내용과 무관하게,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빨갱이'와 동전의 양면처럼 사용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와 마찬가지로, 포퓰리즘도 이 용어가 탄생하게 된 역사적 맥락과 학술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그리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다.

'포퓰리즘'이 부정적 의미를 품고서 상대를 비난할 때 사용하는 용어가 될 수 있었던 역사적 맥락은 아마도 냉전이 깊어진 1950년대 미국의 매카시즘(McCarthyism), 그리고 소련 사회주의 연방의 붕괴,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자본주의 시장으로의 편입, 동서독 통일이라는 격변기를 통과한 1990년대 유럽 극우 보수세력의 정치적 급부상에서 찾을 수 있다. 포퓰리즘은 이후 주로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대중선동으로 기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통제되지 않는 병리적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어왔다. 이와 함께 포퓰리즘은 '대중 추수주의', '인기 영합주의'와 연결되면서, 이념적 경계를 넘어 '우파 포퓰리즘', '좌파 포퓰리즘'처럼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세력들 사이에서 상대 정치 지도자와 지지자들을 비난하거나, 심지어 악마화하기 위해 가장 쉽게 사용된 비난 용어 중 하나였다.

특히 냉전이 종식된 1990년대 초반 이후 포퓰리즘은 신자유주의 지구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신자유주의 지구화 구호와 함께 모라토리엄(moratorium: 채무 이행 유예 상태), 구조조정,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 자본시장 확장을 위한 탈규제, 초국적 기업, 신용평가, 노동시장 유연화, 긴축 재정 등 낯선 경제용어와 국제관계 언어들이 전 세계를 지배해왔다. 1990년대 말 우리가 겪은 IMF 금융위기 또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문제는 이 흐름이 국가와 국가 사이에는 물론, 우리 사회 안에서도 사회경제적 양극화, 불평등, 차별을 빠르게 심화시켰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 또한 지난 20여 년 동안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은 계속해서 악화되었으며, 이에 대한 정부와 국회가 제시하는 해법들은 이 악화 속도와 방향을 뒤집지 못했다. 오히려 대의제 정치는 해법의 주체가 아니라, 악화의 원인 제공자와 같은 모습을 보여왔던 것이다.

여기서, 세 가지 정도 포퓰리즘 현상을 이해할 때 주목해야 할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내외적으로 이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는 특정 정치집단이나 정부 스스로 자신을 칭하기 위해 사용되기보다, 상대방, 즉 정치적 경쟁세력의 활동을 침체시키기 위해 다른 상대집단에 의해, 혹은 다른 상대방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것이다.

둘째, 포퓰리즘의 의미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상호 간 합의 없이, 단지 정치적 경쟁자를 비난하기 위해 마구잡이식으로 이 용어가 사용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치발전을 위해서도 대단히 좋지 않은 현상이다.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나' 혹은 그 정치인이 속한 정당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어떤 가치와 비전, 그리고 목표와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 즉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실천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 제안이 다른 정치세력이나 정당의 제안보다 훨씬 현실적이며 동시에 사회발전을 위해 낫다는 것을 설명해서,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나가야 한다. 그런데, 현재 포퓰리즘 용어가 사용되는 정치적 주장 대부분은 자기 정당이 이런저런 이유로 '포퓰리즘' 보다 더 좋은 것이라는 설명은 빠져있다. 자기 내용 없이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 앞세워지는 정치는 결국 시민들이 성숙한 민주적 성찰과 합의를 통한 최선의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비난과 제거를 통한 의사결정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차악을 선택하게 한다.

셋째, 결국 포퓰리즘은 기성 정치권력 집단을 비합리적으로 위협하는 정치 이데올로기나 집단행동, 즉 일종의 두려운 대상으로 묘사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포퓰리즘으로 지칭되는 대상의 행동을 도덕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를 만들기도 한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포퓰리즘은 '좌파', '종북', '빨갱이' 등과 같은 단어와 연결되면서, 민주화운동세력을 무조건 '빨갱이', '친북용공', '체제전복 세력' 등으로 낙인찍었던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처럼 다양한 정치적 실험과 대안정치의 실천을 옥죄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러나, 포퓰리즘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상대를 비난하는 나쁜 의미로 채워진 단어가 아니며, 그렇게 간단히 분석될 수 있는 현상도 아니다. 왜냐하면, 포퓰리즘은 수많은 사람의 다양한 욕망과 얽혀있는 아주 복잡한,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이웃이나 나 자신이 포함된 집단행동이기 때문이다.

2. 포퓰리즘 계기

그렇다면, 진짜로 포퓰리즘은 부정적이고, 비난받을만한 정치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인가? 포퓰리즘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벨기에 출신 학자 샹탈 무페(Chantal Mouffe)가 주목하는 '포퓰리즘 계기(populist moment)'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샹탈 무페, 2019).

먼저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자. 영국 수상 마가렛 대처(재임 1979~1990)는 기존 복지국가 시스템을 해체하여 민영화 조치를 취하면서, 영국을 기업 위주 신자유주의 국가로 빠르게 바꿔나갔다. 대처리즘(Thatcherism)이라 불리는 대처의 신자유주의 행보는 같은 시기 같은 정치적 노선을 취한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재임 1981~1989)의 레이거노믹스와 만나면서, 1980년대 이후 지금까지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를 지배하는 신자유주의 지구화를 이뤄냈다(장석준. 2011).

하지만, 자본시장에 대한 공공 규제와 관리를 축소하는 '탈규제' 정책을 펼치면서, 신자유주의 지구화는 리만 브라더스나 론스타와 같은 초국적 금융자본, 그리고 우리나라 재벌기업의 투기적이고 부도

덕한 행위를 자초하게 되었다. 그 결과 한국은 1997년 IMF 금융위기을 맞이하면서,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의 늪에 빠져버렸다. 미국과 유럽 또한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를 계기로 지금까지 엄청난 경제위기와 영국의 브랙시트, 연금 및 복지재정 감축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좌우 포퓰리즘 정치의 도전 속에서 경제위기는 정치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무페는 바로 약 30년 동안 유럽 사회를 강력하게 지배해온 신자유주의를 흔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이 위기가 만든 틈새에서 출현한 포퓰리즘 현상에 주목하고, 이 현상의 배경을 '포퓰리즘 계기'라 칭한다. 무페에 따르면, 포퓰리즘 계기는 1970년대 이래로 자유민주주의를 지배해온 모든 정치적 규칙과 대표성, 그리고 사회적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기존 정치 질서와 지배 헤게모니가 이에 대한 불만족의 폭발과 함께 불안정하게 되는 상태이다(무페, 2019). 20세기 초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활동한 정치사상가이자 정치가인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가 정치적으로 재해석한 '인터레그넘interregnum)[39]', 즉 이미 정치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이고 도덕적으로 받아드려지고 있는 사회적 합의와 규범들이 도전받는 시기와 같다고 볼 수 있다.

2008년 이후 유럽에서 형성된 포퓰리즘 계기의 주된 특징은 초국적 기업의 권한이 주권국가의 정책결정 권한보다 강력해졌지만, 정반대로 의회의 역할이 축소되고, 국민주권이 약해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영국 정치학자 콜린 크라우치(Colin Crouch)가 제시한 '포스트 민주주의(post-democracy)'의 특징이기도 하다(크라우치, 2008). 즉 포퓰리즘 계기는 바로 민주주의가 시민이 아닌 초국적 금융자본과 신자유주의 자본시장의 이해에 따라 변질되고, 이것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할 국가의 주권적 권한과 대의제 정치의 핵심 역할이 쇠퇴하여, 결국 모든 책임과 고통이 시민에게 전가되는 '포스트 민주주의'의 맥락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다.

3. 포스트 민주주의: 탈정치와 금융과두제

포퓰리즘은 포스트 민주주의, 즉 초국적 금융자본의 정치적 영향력이 주권국가의 그것보다 커져, 민주정치가 후퇴하는 맥락에서 그 출현의 계기를 갖게 된다. 콜린 크라우치는 포스트 민주주의 관점에서 민주정치가 후퇴하는 현상을 '탈정치'라 부르고, 초국적 금융자본의 정치적 영향력 강화를 '금융자본 중심 과두제'라고 부른다.

---

39) 인터레그넘(interregnum)
인터레그넘이란 유럽 신성로마제국 시대에 기존 황제 사후 다음 황제를 추대하지 못해 황제가 공석이었던 상태를 칭했다. 이후 가톨릭에서 새로운 교황을 뽑기 전까지 교황의 자리가 비어 있는 시기를 말하는데 쓰이기도 한다. 1980년대 이후 탈규제와 소유적 개인주의가 중심이 되면서 신자유 주의 헤게모니는 세계 정치경제 질서는 물론 윤리와 사회 규범 영역까지 지배해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를 시작으로 2008년 유럽을 강타한 금융위기 이후 인터레그넘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2008년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 차원에서 제시한 긴축 정책이 사람들이 겪는 불평등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 책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면서 정부와 엘리트 권력 집단,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과 분노가 커졌지만, 전통적 좌우 어느 세력도 그럴듯한 정치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날 인터레그넘은 포스트 민주주의 시대의 다른 표현일지 모른다. 바로 이 인터레그넘에서 기성 정치와 제도 에 도전하면서 새로운 규칙과 질서를 만들어가려는 정치적 시도가 포퓰리즘이다. 이 차원에서 포퓰리즘은 정치의 원형 그리고 주권적 정치라고 부를 수 있다.

◎ 관료적 권위주의(Bureaucratic Authoritarianism)
1980년대 후반 한국정치학계에서는 아르헨티나 정치학자인 기예르모 오도넬이 라틴 아메리카 국가 체제 분석을 위해 제시한 개념이다. 관료적 권위주의는 일개인의 독재가 아니라, 외형적으로는 민주적 시스템이 갖춰진 국가라고 할지라도, 경제성장을 강조하면서 엘리트 기술관료 집단의 판단이 아래로부터의 시민의 요구보다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면서, 시민정치가 사실상 배제되고 민주주의가 왜곡되는 특징을 보인다.

탈정치는 정치적 허무주의나 무관심이 아니라, 좌우, 진보와 보수, 민주와 반민주, 적과 아의 정치적 경계가 모호하고 흐릿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보수대연합, 보수정당 구도와 같은 현상도 탈정치 현상 중 하나일 것이다. 이것은 좌우 혹은 정치적 경쟁·대립세력 간 타협이 아니라, 합의를 의미한다. 타협은 공동의 적에 맞서기 위해, 서로가 전술적으로 양보하는 것이다. 하지만, 합의는 좌우가 공동의 목적, 즉 제한된 권력이라는 파이를 나눌 집단의 수를 최소화하여, 권력 유지의 기회를 줄이지 않는다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신자유주의 프레임, 의회정치 규칙, 선거법, 신관료적 권위주의와 같은 기본적인 틀을 합의하는 것이다.

탈정치 상황을 만드는 정치 세력간 '중도합의'는 새로운 정치적 주체의 참여기회를 막고, 시민의 새로운 정치적 시도를 어렵게 한다. 결국, 시민은 정치를 관조할 수밖에 없고, 극단적으로는 정치적 팬덤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팬덤정치란 불평등과 차별, 개인의 무력함이 악화되어, 도저히 자기 자원을 동원하여 스스로 정치를 할 수 없을 때, 결국 자원이 있는 세력 중 특정 정치세력에게 지지를 표명하면서 시작하게 된다. 팬덤정치는 진영정치로 이어지고, 이 둘은 기본적으로 기성 정치질서를 매개로 하고, 정치적 상상력 또한 자원을 독과점한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를 벗어나기 힘들어서, 팬덤정치가 새로운 정치를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다.

포스트 민주주의의 또 다른 특징인 '금융자본 중심 과두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확산 및 강화된 금융자본의 글로벌 패권주의를 의미한다. 과거 워싱턴 컨센서스나 현재 WTO, IMF, 다보스 포럼과 같은 글로벌 협의체의 의사결정력은 주권국가의 권한을 넘어 신자유주의 글로벌 스텐다드를 만들어냈다. 신자유주의 글로벌 스텐다드는 점차 주권국가의 민주주의와 시민성을 침해하게 되었고, 시민과 사회적 약자가 아닌 초국적 금융자본 중심으로 정치지형을 변형하게 되었다. 결국, 이 금융자본 중심 과두제는 미국과 유럽의 경우, 최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했고, 지금까지도 전 세계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 차별이라는 부정적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중의 불안과 분노가 여러 급진적인 형태로 터져 나오고, 이것이 기성 정치권력과 금융 관료제에 대한 포퓰리즘적 저항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의 대응은 이에 대한 위로와 대안 제시가 아니라, 악마화 낙인과 부도덕한 폄하 뿐이다.

4. 불안과 포퓰리즘

포스트 민주주의는 시민의 정치적 무기력과 좌절을 만들기도 하지만, 오히려 민주적 저항이 시작되는 조건이기도 하다. 포스트 민주주의 상황이 포퓰리즘이 발생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은 이 상황이 혼란, 불안, 절망의 계기일 수 있지만, 반면, 불안과 절망에 빠진 시민들이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과 그 가능성을 갖게 되는 기회이기도 하다. 즉 포스트 민주주의 상황에서 시민들이 정치적 무기력이나 허무주의에 계속 남지 않고, 이 상황을 극복하려는 어떤 실천을 행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불안'에 대한 대응이다.

불안이란 무언가 '나'에게 고통을 줄 것 같으나, 아직 그 인과관계가 설명되지 않은 채 반복되는 기이한 현상에 대한 감정 상태다. 20세기 말 이후 세계적으로 나타난 좌우파 포퓰리즘 모두 공통점은 탈정치와 금융 과두제의 포스트 민주주의가 시민들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차별이 고통을 해결해주기

는커녕, 오히려 악화의 원인이라는 좌절에서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좌절은 시민 자신이 느끼는 고통이 어디에서 시작했고,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면서, 불안으로 전환되었다. 이 불안은 투기, 혐오, 배제, 범죄, 자살이라는 반작용을 사회적으로 확산하기도 했고, 사회연대경제, 집단지성, 커뮤니티 케어, 상호부조와 같은 공동체적 가치와 실천을 촉발하기도 했다.

불안은 시민들이 오랫동안 포스트 민주주의 상황에 머물지 못하게 한다. 이 상황에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안 자체가 어떤 인과관계와 해결책을 찾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포스트 민주주의 상황을 타개하려는 시도는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지향점,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때로는 주체적이고 자율적이지 않은 군중심리에 따른다거나, 특정 정치 지도집단을 맹목적으로 따른다거나, 불법적이고 비합리적이며, 즉흥적인 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다. 포스트 민주주의 상황에서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권력집단은 이런 시도를 '포퓰리즘'이라 부르면서 악마화하고, 통제하고,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고 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포퓰리즘은 기성 권력집단의 존재 기반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기성 권력집단이 포퓰리즘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또한 바로 '불안'인 것이다.

제2절 포퓰리즘 특징의 재해석과 정치의 복원

포퓰리즘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카리스마 리더십, 소수 엘리트와 다수 대중의 적대적 대립, 그리고 기존 정치질서와 윤리를 넘어서는 정치적 실천과 실험이다. 여기서는 이 세 가지 특징을 정치의 복원 차원에서 재해석해보려고 한다.

1. 카리스마 리더십

포퓰리즘이 기성 정치제도에서 보면 도발적인 카리스마 리더십을 특징으로 하는 것은 포퓰리즘에 참여한 시민들이 무엇보다 기성 정치제도와 리더십에 대한 불신이 크고, 나아가 자신들이 겪는 사회경제적 고통의 원인을 바로 이 기성제도에서 찾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 불안에 대한 원초적 대응으로 나타나는 포퓰리즘은 기성 정치제도를 넘어선 리더십과 결합될 수 밖에 없다. 전통적 중도합의를 과감히 벗어나, 제도와 절차를 통한 문제해결의 기대감 대신 거리와 광장에서 직접 행동하고, 불공정과 부정의에 대한 적대감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카리스마 리더십에 대한 기대감은 바로 불안하지 않을 대안 질서로 가는 시작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페가 강조하듯, 포퓰리즘은 그 목표가 '포퓰리즘 정권'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포퓰리즘은 특정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화와 사회안정을 추진한다. 포퓰리즘은 기성제도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하지만, 제도 자체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포퓰리즘은 크게 좌우로 나뉠 수 있다. 우파 포퓰리즘은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포용할 수 있는 가치와 주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제의 논리'를 강조하고, 이를 위한 제도를 강요한다. 이민자, 난민, 성 소수자 등을 대하는 우파 포퓰리즘의 태도는 이를 분명히 한다.

하지만, 좌파 포퓰리즘은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원래의 가치였던 '모든 이들의 자유와 평등'을 급진적으로 확장하려 한다. 좌파 포퓰리즘도 우파 포퓰리즘과 마찬가지로 불안에서 시작하지만, 더 많은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해 기존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재구성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좌파 포퓰리즘은 여성, 아동, 청소년, 비정규 노동자, 실업자, 노인 장애인, 이주민, 사회문화적 소수자 등 다양한 사회집단이 함께 새로운 '민주시민'의 상을 세우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것을 넘어선 새로운 윤리와 상식을 합의해 나갈 기회를 제공한다.

중요한 것은 이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어떤 정치적 담론을 가지고서 시민의 지지를 이끌어내는가이다. 그 정치적 담론이 무엇인가에 따라 포퓰리즘은 우파나 권위주의, 그리고 좌파나 민주주의 포퓰리즘이 될 수 있다.

2. 정치적 대중의 출현

포퓰리즘의 또 다른 특징은 사회경제 정책의 실패와 정치적 불신 속에서 고통받는 다수 대중, 그리고 이 고통의 원인과 책임을 대중에게 전가하면서, 사회경제적 이익 배분의 주도권을 장악한 소수 엘리트 집단 사이 적대적 대립이다. 이 과정에서 다수 대중은 소수 엘리트에 대한 적대를 어떻게 표출하는가에 따라, 좌나 우 혹은 제3의 정치사회적 특징을 드러내는 집단적 정체성을 스스로 통일해 나간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어떤 불안한 경험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이것을 특정한 정치적 방향으로 묶는 정치적 시도를 통해서 가능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을 이끈 촛불집회, 그 촛불집회의 원류였던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 투쟁, 또는 그 반대편에 있던 태극기 부대의 집회가 처음부터 대단히 정치전략적인 개입에 의해 준비된 투쟁이 아니라, 폭발한 대중의 원초적 분노가 이후 특정한 정치 담론과 결합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갔던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 결합은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 오랜 시간 일상 속에 전개된 여러 시민사회운동과 캠페인, 각종 미디어 활동 결과가 축적되어야 가능할 수 있다. 특정한 정치적 담론과 실천이 결합한 시민은 이제 새로운 정치적 주체로서 이름(촛불 시민, 태극기 부대 등)을 얻게 된다

이 과정에서 민주적이고 평등한 주체성을 강조하는 세력은 좌파 혹은 민주적 포퓰리즘으로 불릴 수 있다. 이 좌파 즉 민주적 포퓰리즘은 이민자나 난민을 배제하지 않고, 이들은 물론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과 함께 민주적 공생을 추구하는 새로운 포용적 시민의 탄생을 잉태하려 한다. 그리고 이 좌파/민주적 포퓰리즘은 새로운 시민이 더욱더 확장되고 깊어진 자유민주주의가 다시 후퇴하지 않을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 나간다. 이것이 때로는 디지털 기반 직접 민주주의 실험일 수 있고, 지역 공동체 중심의 사회적 경제 기반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제도적 분권화의 추진이기도 하다.

포퓰리즘 계기에 어떤 이념과 정치적 전략이 어떻게 결합하는가에 따라, 포퓰리즘은 좌파나 우파의 방향을 취하게 되고, 때로는 좌파와 우파 포퓰리즘이 거대한 대립과 충돌을 벌이게 되기도 한다. 이것은 포퓰리즘이 정치의 원초적 형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바로 포퓰리즘은 기성 정치에 대한 불만과 동시에 새로운 정치를 위한 다양한 실천을 촉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퓰리즘은 어느 우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보수 세력과 전통적 사회민주주의 세력들이 사

이에서 만들어 낸 '중도합의' 결과로서 그저 선거공학과 의회의 의사일정 수준으로 전락해버린 정치를 다시 시민주도 정치로 복원하고 재활성화하는 중요한 민주주의 정치 전략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물론 이것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신자유주의 체제와 우파 포퓰리즘에 대항하는 '좌파 포퓰리즘'의 목표가 될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민주적 포퓰리즘'이라 부를 수 있다.

3. 불안을 넘어서려는 새로운 정치적 실험

사회적 불안은 포스트 민주주의 현상에 대한 대중의 정서적 반응이다. '정서적'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불안 자체가 포스트 민주주의 현상에 대해 좌우나, 보수진보 등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진 반응이 아니라, 대단히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반작용이기 때문이다.

포스트 민주주의가 증폭시킨 대중의 사회적 불안은 이중 운동을 촉발한다. 이중 운동의 한 축에는 '구성성'이 있고 그 반대 축에는 '전복성'이 작동하고, 대중은 이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두 가지를 대단히 적극적으로 앞세우는 정치적 실천을 추진하기도 한다.

불안을 느끼는 대중은 그 불안의 원인이 제거된 새로운 정치사회 질서를 구성하여 불안의 재발을 막으려 한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질서는 불안의 원인 제공자로 인식되는 기성 정치사회 질서 자체를 전복하거나, 작동하지 못하게 하려는 과정과 병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 전복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므로, 불안이 제거되고, 정치적 신뢰가 회복되면, 기성질서 또한 새로운 질서와 언제든지 조화 가능하다.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과 전복을 오고 가는 포퓰리즘의 이중 운동은 다양한 실험을 시도할 수밖에 없다. 광장에 모이거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기존 선거제도와 의회 중심주의, 사법 제도나 조세제도의 개혁을 위한 다양한 실천을 전개할 수도 있다. 또한, 소수 엘리트에 대한 적대와 사회적 불공정성에 대한 분노 속에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기본소득이나 기본자산, 사회적 상속, 공동체 토지신탁,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이나, 부동산 거래 초과이익 환수제와 같이 사적 소유권의 배타적 권한에 도전하는 정책을 지지할 수도 있다.

물론 다른 차원에서 포퓰리즘은 여성, 장애인, 청소년, 이주민, 난민, 사회문화적 소수자, 상가나 주택 임차인들 차별하거나 사회적으로 배제하는 정책을 옹호하기도 한다. 이것은 전형적인 우파 포퓰리즘의 모습이며, 우파 포퓰리즘은 정치적 중도합의를 더욱 보수적으로 변경시키거나, 카리스마 리더가 주창하는 정치적 구호나 정책의 내용이 무엇이든, 리더에 대한 맹목적 지지나 팬덤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포퓰리즘이 어떤 정치적 담론과 결합하는가는 포퓰리즘을 통해 드러난 사회적 불안과 정치적 위기의 원인을 밝혀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내서 사회를 심각한 파국으로 빠지지 않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 파국과 민주주의의 쇠퇴로 갈 것인가를 정하는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다.

우리가 목격하고 경험하는 포퓰리즘이 적어도 사회적 파국으로 이어지는 우파 포퓰리즘으로 뒤틀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나아가 민주적 포퓰리즘으로 발전하여 새롭고 발전한 민주주의 정치질서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이 포퓰리즘을 지지하는 '우리'의 목록을 민주적으로 작성해 나가야 한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이 이뤄낸 민주화의 성과는 바로 이 목록의 내용, 즉 해방 직후, 미군정, 친일파, 엘리트 관료

등이 장악했던 ‘우리’의 목록을 억압받고, 배제되고, 차별받고, 소외받던 대중 각각의 이름으로 새로운 ‘우리’의 목록을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해방공간, 전쟁, 가난과 독재의 시대 속에서 불안으로 몸부림친 수많은 대중은 때로는 산업화에 동원되기도 하고, 때로는 민주화 운동의 무명투사로 참여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우리’의 목록에 넣었고, 민주주의 질서를 수립해 나갈 수 있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정의하는 작업은 ‘우리’에 속하는 사회 집단과 계층들을 나열하는 목록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록을 어떤 원칙과 어떤 권위로 누가 만드는지, 그리고 그 목록은 개방적인 것인지에 대해 원칙을 정의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원칙은 감춰지고, 은폐되고, 억압받는, 그래서 사회적 불안을 가장 크게 느낄 수 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의 존재를 ‘드러내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제3절 민주적 포퓰리즘을 위한 반성과 정치의 재구성

1. 민주주의 정치의 재활성화 복원의 맥락

포퓰리즘은 정치사회의 위기에 대한 대응이며, 이 포퓰리즘 현상이 우파나 권위주의로 빠지지 않고,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포퓰리즘을 민주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문제는 한국사회에서 포퓰리즘은 좌나 우로 가기 이전에 사실은 제대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기성제도에 대한 대안적이고 혁신적인 비판과 도전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혹자는 이미 뉴스를 통해서 ‘포퓰리즘’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다뤘듯이, 현재 언급되는 포퓰리즘은 단지 상대 정치인이나 견제해야할 정치세력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폄하하기 위해 사용될 뿐 제대로 된 정의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포퓰리즘 용어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시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실험을 억제하거나 차단하는 비민주적 효과를 만들기도 한다. 따라서, 포퓰리즘에 대한 연구와 관심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정치를 어떻게 다시 활성화시킬 것인가, 시민 주도 민주주의 정치를 어떻게 복원시킬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연결시켜야 한다.

민주주의 정치의 재활성화나 복원은 단지 앞으로 의회나 행정부가 어떤 과제를 다뤄야 한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기성 제도정치 자체의 프레임과 굳어진 관습·상식을 바꾸고, 다양하고 서로 다른 여러 형태의 정치가 동시에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주의 정치의 재활성화와 복원을 주장하는 기본적인 맥락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 맥락은 현재 정당정치와 대의제는 근본적으로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차별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기는커녕, 선거 시기 관련 공약마저 이런저런 이유로 스스로 무산시키는 의회와 정부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정치를 향한 불신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결국 정당과 정당 사이 협치는 물론, 정부와 시민의 상호 협력은 점점 약해지고, 그 반대로 거리의 정치가 여기저기 분출하고 서로 다른 상식과 이해관계로 묶어진 집단지성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이것은 한편, 민주주의가 갈등과 소란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 팬덤과 진영정치

속에서 정당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 번째 맥락은 첫 번째와는 달리, 과학기술에 따른 일상의 변화가 민주주의 정치의 재활성화와 복원을 빠르게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사회와 이해관계자들은 대단히 다원화되어있고, 디지털 기술, 지식과 정보공유 등을 통해 개개인이 스스로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커져, 시민들의 역량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정당과 선거라는 대의제 제도가 현대 민주주의의 불현하는 원칙으로 받아드려진 결정적인 이유는 국가단위 규모에서는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처럼 모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제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시민 각자가 직접 정치를 하기 위해 각자의 생활과 생계를 위한 공간을 벗어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마트폰 보급 확산과 앱 개발기술의 발전은 시민들이 각자의 공간을 벗어나지 않고서도, 복잡하고 규모가 큰 의사결정 과정에 아주 손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은 물론, 그 정보에 대한 의사개진과 관련한 토론도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대의제 정치가 적어도 국가 단위 중앙 정부와 통치 시스템을 위한 유일한 정치 참여와 의사결정 방식이라는 주장은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게 되었다.

이미 60년 전 모델인 낡은 대의제 정치는 위기에 직면했고, 이를 대체한 과학기술과 시민역량도 뒷받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낡은 대의제 정치는 왜 여전히 21세기를 대표하고 있는 것일까? 다른 많은 이유도 있지만, 특히 이 글이 주목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협소한 상상력과 특정 집단에 의한 정치경제적 자원의 독과점 현상이다.

2. 한국에서 포퓰리즘이 비활성화된 이유

포퓰리즘을 비활성화시킨 민주주의에 대한 협소한 상상력과 특정집단의 정치경제적 자원 독과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시 과거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격변의 민주화 시대인 1980년대를 기억한다. 1980년대는 정치적 권위주의와 경제적 독점이 지배한 반민주적 권위주의 정권 시대였고, 재야인사들과 386 학생운동 세력들은 시민들과 함께 6월항쟁을 통해 직선제 개헌을 만들어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1980년대 중반부터 1997년 IFM 금융위기 전까지 우리 사회는 저유가·저달러·저금리 3저 호황에 따른 경제적 팽창이 있었고, 1990년대에 사회에 진출한 386세대의 많은 청년은 이 팽창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한국형 자본주의 시민이 탄생한 시기이기도 하다.

6월 항쟁 이후 보다 다양해지고 개방된 사회에서, 이들 중 상당수는 대기업은 물론 정부, 언론계, 대학, 사법연수원으로 진출했고, 2000년대부터는 사교육 시장, 벤처 또는 정보통신 산업 등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1990년 삼당합당과 1991년 지방선거 출범은 대학을 나온 386세대 학생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진입할 수 있는 의회정치 공간을 확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6월항쟁과는 달리 여러 사망자와 유서 대필 사건 등 여러 사건이 겹치면서 소멸한 1991년 5월 투쟁을 경과하면서, 정치적 급진담론은 사실상 사회적 지지를 유실하게 되었고, 한국 정치는 운동정치의 퇴장과 노동운동의 고립 속에서 정당중심 의회정치가 그 중심을 차지하고 사실상 독점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1990년대 중반 학생운동 세력이 여러 사건을 거치는 과정에서 쇠퇴하고, 386세대와 단절되면서 소위 학생운동권 재생산구조는 사라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후 기성 정치공간에 진입한 386세대는 후배세력과 사실상 단절되었고, 지금까지 기성 의회정치와 주류 시민사회 영역에서 장기집권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주의 정치의 비활성화의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신관료적 권위주의'이다. 이 용어는 정치학자들이 1970년대 한국 유신정권 시대를 분석하기 위해 도입한 학술 개념인 '관료적 권위주의'를 오늘날에 도입하기 위해 이 책에서 새롭게 정의한 것이다. 지금이 신관료적 권위주의 시대라고 불릴 수 있는 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법무부와 검찰과 같은 행정관료집단이 국회나 대통령보다 더 강력하게 정책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전문관료집단의 의견은 중요한 국가적 정책결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것이 엘리트화되고, 시민사회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과 요구가 숙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일방적인 엘리트 관료집단의 판단 속에서 다뤄진다면, 이것은 일종의 과두제적인 '관료적 권위주의'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신관료적 권위주의는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에서 WTO(세계무역기구) 바뀌는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우리나라는 WTO, FTA, IMF, 세계은행이 주도하는 글로벌 경제질서로의 편입, 그리고 6자회담, NPT, 이라크 파병과 같은 외교안보 현안에 빠르게 들어가게 되었다. 이 때, 당시 정부는 통상, 안보, 국제관계, 국제법에 관한 엘리트 전문 집단을 중심으로 제한된 정보공유 속에서 필요한 국제협상을 진행했고, 이후 우리 사회는 시민들이 이해하고 적응하기도 전에 글로벌 스탠다드, 초국적 금융자본, 국제 통상 규범과 같은 낯선 전문 용어 속에서 새로운 전문 관료집단의 엘리트화를 받아드릴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신관료적 권위주의는 한국 정치의 민주적 의사결정 및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정치적 참여를 배제하여 오히려 시민이 수동적인 응원부대처럼 취급되도록 한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스스로 대안적인 정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당하게 되고, 정치적 상상 또한 엘리트 관료의 판단 속에서 수동적으로 걸러지기 때문에, 제한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신관료적 권위주의는 실패한 정책의 책임을 고스란히 시민의 피해와 고통으로 전가한다. 환경, 에너지, 교육, 부동산 정책은 물론이고, 최악의 사례 중 하나는 신용카드 발급 규제 완화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신용카드 발급 규제 완화 정책 결과, 수백만 명의 신용불량자가 발생하는 신용카드 대출 부실사태가 났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정치인이나 관료 한 명 없이, 오히려 정부와 국회의 대책은 미온적이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후 이어지는 경제위기와 실업률 증가, 사교육비 및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많은 시민의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게 되었고, 이러한 가계부채 부담으로 인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참여는 과거 삼저 호황에 따른 경제적 팽창 시기와 비교하면, 매우 어려울 수 밖에 없었다.

3. 민주적 포퓰리즘과 정치의 재구성

특정 집단에 의한 정치적 자원의 독과점, 그리고 신관료적 권위주의로부터 민주주의 정치를 재활성화시키고 위해서는 포퓰리즘이 출현할 수 있는 정치공간을 적극적으로 열고, 포퓰리즘이 보다 포용

적이고 평등한 민주주의 담론 및 실천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서 이 글은 크게 세 가지 민주주의 정치의 재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21세기 한국사회에 맞는 적절한 민주주의 담론을 과감히 생산하는 것이다. 그 중 하나는 한국 사회에에 자신의 권리담론을 제대로 찾거나 결합하지 못한 채, 정치적으로 힘이 없고 수동적인 여러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권리 담론을 만나 새로운 정치 주체로 재탄생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의제 정치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의제 정치의 부족한 점을 채우고, 대의제가 독점한 정치 공간에 훨씬 다양하고 많은 정치적 주체와 정치방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대의제 정치는 대의제 정치의 위치에서, 그리고 새로운 주체의 새로운 정치는 각각 그 위치에서 서로의 한계를 상호 극복하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실천적 집단지성이 보다 개방적이고 민주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것의 필수 기반은 지식공유, 정보공개, 시민과학기술, 그리고 시민주도 사회문제해결 기회제공이라 할 수 있다. 이 집단지성은 어떤 정치적 또는 윤리적 성역, 행정 장벽, 권위주의적 틀에 의해 제약되지 않고,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차별, 기후위기, 대의제 정치의 한계와 같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창조적이고 대안적인 해답을 찾는 민주적 실험주의와 결합되어야 한다. 그리고 집단지성은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 때 사회연대경제는 제4섹터가 아니라, 사회연대경제의 복합체로서의 국가 수준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집단지성의 실천적 결과로 나타나는 사회연대경제는 투기적 금융자산이 아니라, '우리'의 민주적 자산과 사회적 자본을 공동생산하는 것이며, 이것은 '우리의 자유'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될 것이다.

셋째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유로운 개인으로 재탄생되어야 한다. 이 자유로운 개인은 일터와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가난하고 떠도는 자유인이 아니라, 실제로 다양한 복지기반과 공동체 자산, 그리고 사회적으로 서로 승인하고 있는 자신의 권리담론을 가지고서 언제든지 스스로 정치적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유로운 개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유로운 개인은 단지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자원의 수동적인 수혜자나, GDP 중심의 양적 경제성장을 위해 동원된 노동자가 아니라, 필요한 자원을 함께 생산하고, 배분하고, 관리·사용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생산은 사유재의 배타적 권한을 중심에 둔 신자유주의 시장경쟁 구조를 벗어나, 다중심적이고 수평적 협력, 지역 차원의 생태적 자원순환, 포용적 분배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본소득, 기본자산, 사회적 상속, 공동체 토지임대부 사회임대주택, 예방의학에 기초한 공공의료 정책 등 시민의 기본적인 자유의 기반을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자유로운 시민들은 이 기반 위에서 자유로운 시민들은 위기의 신자유주의의 대의제 중심 정치의 한계를 돌파할 새로운 생산과 순환 시스템을 만드는 창조적이고 협력적인 실험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권리담론의 등장, 집단지성의 향상과 구체적 실천, 개인의 자유를 위한 공공자산과 제도, 이 세 가지가 민주적 포퓰리즘의 핵심 조건인 이유는 이것들은 사실상 시민 개개인이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사회경제적 불안이나 정치적 불안정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이기 때문이다. 이 조건을 창출하려는 시도 자체가 민주주의 정치를 재활성화하는 것이며, 포퓰리즘이 우익이나 권위주의로 흐르지 않고, 보다 민주적인 대안질서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민주적 포퓰리즘인 것이다.

참고문헌

데이비드 하비, 2014, 반란의 도시, Harvey, David, The Rebel Cities, 한상연 옮김, 에이도스

샹탈 무페, 2019, 좌파 포퓰리즘을 위하여, Mouffe, Chantal, For the Left Populism, Verso, 이승원 옮김, 문학세계사

이승원, 2013, '현대 정치의 '주체', '공간', 그리고 민주주의: 최장집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기반으로', 김정한 편저, 최장집의 한국민주주의론, 소명출판

이승원, 2014, 민주주의, 책세상

장석준, 2011, 신자유주의의 탄생: 왜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막을 수 없었나, 책세상

최장집, 2010,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콜린 크라우치, 2008, 포스트 민주주의: 민주주의 시대의 종말, Colin Crouch, Post-Democracy, 이한 옮김, 미지북스

토론 5

한국 사회, 이미 포퓰리즘 국면으로 진입했는가?

장석준(전환사회연구소)

1. 본래 토론이 흥행을 하려면 발표자와 대척점에 선 토론자가 나와야 하는 법인데, 불행히도(?) 본 토론자는 포퓰리즘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과 좌파 포퓰리즘 전략의 가능성 모두에서 발표자에게 크게 동의하는 입장이다. 발표문 "민주적 포퓰리즘과 정치의 재구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커다란 이견이 없다. 그렇다고 억지로 쟁점을 '조작'할 수는 없겠고, 그보다는 발표문의 논지를 보다 발전시켜 보자는 취지에서 특히 한국 정치의 구체적 양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더 토론해야 할 거리를 찾아내고 싶다.

2. 발표문은 '팬덤정치'를 주요 정치세력 간 '중도합의'에서 비롯된 현상이라 파악한다. 중도합의 탓에 정책 선택 폭이 좁아지고, 그래서 기성 양대 정치세력 중 하나를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진영정치를 낳는다고 진단한다. 또한 시민들의 정치 참여 경로를 제약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정치를 관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정치적 팬덤 현상이 나타난다고 분석한다. 즉, 팬덤정치는 포퓰리즘 계기의 토대를 이루는 포스트 민주주의 국면의 병리적 현상 중 하나다. 그런데 이는 팬덤정치에 대한 한국 사회 주류 언론의 통상적인 취급과는 전혀 다르다. 한국 사회의 많은 '전문가'들은 팬덤정치를 한국적 '포퓰리즘'이라 규정한다. 발표문에서는 팬덤정치가 포퓰리즘을 통해(물론 바람직하기로는 '민주적 포퓰리즘'을 통해) 해소되어야 할, 그 전 단계의 현상인 데 반해 주류 분석가들에게는 그 자체로 포퓰리즘이다. 토론자는 후자보다는 전자에 동의한다. 그럼에도 제3의 가설 하나를 세워보고 싶다. 팬덤정치가 발표자의 분석대로 포퓰리즘이라기보다는 포스트민주주의의 한 양상이기는 하지만, 또한 포스트민주주의에서 본격적 포퓰리즘으로 넘어가는 과도적 현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탈정치 상황에서 그나마 대중이 정치적 욕구나 의사를 제한적으로나마 표출하는 방식이 팬덤정치이며 이것이 특정한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만날 때 본격적인 포퓰리즘으로 폭발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점에서 한국적 팬덤정치는 어쩌면 원시 포퓰리즘(proto-populism)은 아닐까.

3.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가 나오고 나서 특히 20대 남성의 투표 결과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오간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가장 적절한 분석의 단초는 바로 포퓰리즘과 '불안'의 정조 사이의 연관관계에 대한 발표문의 지적이 아닌가 싶다. 중장기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전성기가 끝났으나 이를 대체할 미래 전망은 좀처럼 대두하지 않고(발표문의 표현에 따르면, '인터레그넘') 되려 기후급변이나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새로운 위기가 엄습하는 전 지구적 상황, 단기적으로는 이런 시대 상황에 대해 전혀

진지하거나 성실하게 대응하지 않는 이른바 '촛불' 정권의 실정(失政)이 특히 한국 사회의 20대 사이에서 불안의 정서를 극대화한 게 아닌가. 그리하여 제1야당을 통해 여당을 단죄하는 '심판 투표'가 20대 유권자들 사이에서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것 아닌가. 그런데 일부 분석가들은 20대 중에서도 특히 남성이 우익 성향 정당에 몰표를 던진 이유가 '젠더' 변수와 관련된다는 주장을 한다. 20대 여성의 경우에는 페미니즘의 영향 때문에 '불안'감을 좀 더 진보적인 정치적 선택과 연결시킨다면, 20대 남성은 오히려 페미니즘 흐름에 대한 반감 탓에 정반대 선택으로 기운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도 이미 젊은 세대의 '불안'의식을 바탕으로 포퓰리즘 계기가 열리고 있고, 더군다나 서유럽이나 북미와 마찬가지로 좌파 포퓰리즘보다는 오히려 극우 포퓰리즘이 득세할 조짐이 처음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에 대한 발표자의 분석과 진단을 듣고 싶다.

4. 발표문은 기존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며 민주 정치를 재활성화할 토대 가운데 하나로 디지털화에 따른 미디어 환경 변화를 든다.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한 쌍방향 소통 증대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비판하는 논자들이 미래 대안의 기반으로 공히 주목하는 바다. 그러나 실제로 2010년대를 경과하며 우리는 이런 새로운 미디어 환경의 긍정적인 점도 확인했지만, 이를 상쇄할 만큼의 부정적인 점 또한 절감했다. 온라인에 범람하는 유례없이 풍부한 정보가 대중 사이에서 오히려 반지성주의를 유례없이 강화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중에 백신 관련한 논란에서 이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온라인 반지성주의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포퓰리즘의 극우적 버전이 득세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된다. 활자 매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사상 가장 협소하게 줄어들고 그나마 시각화된 정보를 정제된 형태로 송출하던 공중파 TV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반면에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정보의 바다'인 유튜브가 거의 단일한 플랫폼으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반지성주의를 최소화하면서 정보민주주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 누구도 쉽게 답할 수는 없겠지만, 민주주의의 운명이 걸린 심각한 물음이라 생각한다. '민주적 포퓰리즘'을 전망하고 실천하는 데에서도 이는 가장 중대한 난제가 아닐까.

5. 발표문은 결론에서 '민주적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의 재활성화 계기가 되기 위해 추구해야 할 바를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 이에 크게 동의한다. 그런데 여기에 약간의 군말을 덧붙이고 싶다. 세 가지 중 마지막이 '자유로운 개인'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발표자는 자유로운 개인을 뒷받침할 제도적 토대로서 기본소득이나 공유자산을 강조한다. 토론자는 여기에 한 가지 요소를 더하고 싶은데, 그것은 어쩌면 커먼스 혹은 공유자산의 일부라 할 수도 있다. 그것은 바로 다양한 자발적 결사체들의 발전이다. '자유로운 개인'이라는 표현을 가장 인상적으로 사용한 고전적 이론가들은 이미 그들의 문헌에서 이를 '연합'이라는 조건과 결합해 정식화한 바 있다("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 <선언>). 역설적으로 자유로운 개인의 삶이 충분히 보장받으려면 그/그녀는 국가권력과 직접 대면하는 것 외에 다른 장치들이 없어서는 안 된다. 개인과 국가 사이에는 다양한 중간조직들이 있어야 한다. 더 적극적으로는 국가권력이 민주화되기 위해서도 이는 충분한 대항 권력을 지닌 다양한 시민사회 조직들과 병존해야 한다. 그렇기에 모든 시민이 자유로운 개인이려면 그/그녀에게는 자신의 '연합'들,

결사체들이 있어야만 한다. ‘민주적 포퓰리즘’은 대중이 이러한 조직들을 건설하고 키워가는 대중운동의 봄을 열어야 한다. 그래야만 ‘민주적’ 포퓰리즘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토론자가 마침 결사체 민주주의를 포퓰리즘 시대의 중대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글을 쓴 처지이기에 이 점을 새삼 강조하고 싶다.

발제 6

실천적 시민과 민주주의 지속

김성하(경기연구원)

제1절 시민의 목소리

2018년 11월 17일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시민 집회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일명 '노란 조끼 운동[40](Mouvement des Gilets jaunes)'으로 불리는 이 집회는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이 발표했던 유류세 인상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였다. 노란 조끼 운동은 정당, 노조, 시민사회 단체 등 기존의 정치 결사체를 중심으로 조직화되고 동원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점에서 기존의 시민 집회와 구별될 수밖에 없다. 프랑스 사회학자 로랑 뮤치엘리(Laurent Mucchielli)는 "단 한번도 그 어떤 정치운동이나 이데올로기에 관여한 적이 없었던 사람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일어난 운동(Laurent Mucchielli, 2018)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노란 조끼 운동'의 특징은 시위 지도자가 없었고, 일반 시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발생(Federico Tarragoni, 2019, p.354)하였다는 점이다.

시위 지도자 없이 일반 시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일어난 '노란 조끼 운동'을 비사회적이며 비정치적인 무지한 폭력이 동반된 몰지각한 대중 운동으로 쉽게 규명할 수 없는 이유는 민주주의(民主主義)를 지향하는 사회라면 구성원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되며, 외면할 수도 없다는 암묵적 동의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암묵적 동의 속에서 민주주의 사회는 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를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담아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답을 해야 하는 것이 숙명일 것이다.

정당 혹은 시민사회 단체 등의 활동 공간인 정치의 공간에서 정치라는 사회 운동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던 일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그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그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밖에 없었을까 반추해 보는 것 역시 고대 그리스 이후 인류에게 던져진 '민주주의'의 의미와 실체, 그리고 지속성에 대한 고민과 실천의 과제를 푸는 하나의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노란 조끼 운동'을 불러왔던 유류세 인상은 궁극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프랑스 정부의 결정이었다. 그러나 환경 보호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세금 증액이 직·간접적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거대

40) 유류세 인상 반대로 시작된 '노란 조끼 운동'은 점차 프랑스 정치, 사회,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개선 방향을 담은 제도 변화의 요구를 주장하게 되었다. 이들의 다양한 주장을 대표적으로 집약한 것이 2018년 11월 29일 노란 조끼 운동 대표단이 언론과 의원들에게 보낸 노동(travail), 교통(transports), 구매력(pouvoir d'acht), 세금(impôts), 민주주의와 제도(democratie et institution) 등을 포함한 "45개 요구 목록(la liste de 45 revendications)"이었다. 당시 제시된 요구사항들은 대체로 "환경(transition ecologique), 제도(institution), 일자리와 기업(emploi et entreprises), 불안정성 제거(lutte contre la precarite), 공공재정(finances publiques), 교육·장애인·상속권·차량 등 기타사안(postbac, handicap, dorits de succession, controle technique)"으로 분류(심성은, 2019/Ouest France, 2018) 된다.

기업들을 제외하고 일반 국민들, 소시민들에게만 적용된 것이 문제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정책 결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거리로 나온 것이 '노란 조끼 운동'이었다.

'노란 조끼 운동'에 참여한 많은 일반 시민들은 환경보호라는 취지에 반대한 것이 아니었다. 시위에 참여한 그들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부유층이 아니라 자동차에 의존하여 그들의 삶과 일상을 지켜나가는 소시민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들에게 유류세 인상은 그들의 일상을 불확실성 속으로 내몰며 불안을 야기하는 불평등하고 부당한 결정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불안과 불확실한 일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관할 수 없었으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정부를 향해, 정책 결정권을 지닌 곳을 향해, 그들이 몸담고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 모두를 향해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것이다.

일반 시민들이 거대한 정치 이념이나 사회문제가 아닌 "구매력이나 세금(la fiscalité et le pouvoir d'achat)과 같은 일상의 당면 문제"에 대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노란 조끼 운동'은 "대중 운동(mouvement populaire)"으로, 특히 시민의 사회적 권리와 이를 보장하려는 제도적 절차에서 민주주의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중 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Federico Tarragoni, 2019, p.356)

이는 세금이나 구매력과 같은 일상의 당면 문제가 기존의 민주주의라는 질서 안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한 불만이 누적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불만은 기존 민주주의 질서 안에서 기득권을 보장받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그러한 기득권으로부터 소외된 일반 시민들에게서 더욱 크게 증폭되고 있었으며, 이들의 목소리가 기존의 민주주의 질서 안에서 반영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시민들, 특히 외면받고 소외된 사람들의 삶과 사회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로부터 자신들의 일상과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외치는 목소리는 기존의 민주주의 제도와 질서 안에서 절차를 준수하는 방법으로는 반영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민주주의 틀의 바깥이라 할 수 있는 거리에서 더욱 크게 울려 퍼졌다. 결국 그들의 기본적 삶과 권리가 소외되고 외면받는 현실을 벗어나, 자신들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정치의 공간으로 전달하고 그것이 정책적으로 반영되기를 원하는 대중의 실천적이며 직접적인 운동은 자연스럽게 기존 민주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보다 더 민주적인 민주주의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제2절 새로운 틀에 대한 요구

프랑스 정치철학자 쟈끄 랑시에르(Jacques Rancière)는《설명할 수 없는 것의 미덕Les vertus de l'inexplicable》에서 '노란 조끼 운동'의 핵심 논리는 "민주주의에서 질서와 무질서를 판단하는 근거와 그 근거에 따른 판단에 익숙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틀을 부수는 것"이며, 이러한 "틀(les cadres)"은 "민주화(la démocratisation)"라는 이름하에 부숴져야 한다고 언급한다.(Jacques Rancière, in Sylvain Bourmeau(dir.), 2019/(재인용)Federico Tarragoni, 2019, p.356).

이에 따르면, 기존 민주주의 질서가 정착시켜 온 "틀"은 전체 사회 구성원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과는 다른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기득권층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본적인 삶의 권리가 외면받는 상황에서 외치는 목소리는 기존 민주주의 제도와 질서라는 '틀' 안에서는 잘 들리지도, 충분히 외쳐지지도 못하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으며, 결국 거리로 나와 그들도 당당한 정치주체로서 새로운 '틀'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새로운 틀'을 만드는 과정은 "민주화"라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기존 민주주의 질서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미 '민주화'를 성취한 사회가 분명한데, 랑시에르는 왜 다시 "민주화"가 요구된다고 언급한 것일까? 이러한 주장은 민주주의 성취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 민주화이지만, 민주화를 통해 성취된 민주주의라 하더라도 그것은 완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의 민주주의 제도와 질서가 정착되었다 하더라도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두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사회 구성원들은 다양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원하고 또 그러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이 민주주의의 실천 과정이라고 볼 때, 이는 민주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민주화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은 단선적이며 일회적인 인과관계에 따른 완성체 혹은 완결체가 될 수 없으며 지속적인 민주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는 나고 자라고 성장하는 생명과 같다. 그래서 최장집의 언급처럼, "민주주의는 어떤 형식적 기준을 갖고 외부로부터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실천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민주화'하는 노력이 중단되거나 거부될 때 민주주의는 고사할 수밖에 없다"(최장집, 2006, p.24)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가 끊임없이 민주화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민주주의 사회 구성원 모두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기존 사회에서 소외되고 외면받는 소수의 구성원들이라도 그들의 목소리가 정치의 공간에서 외쳐지고 들려야 하며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3절 더 민주적인 민주주의

기존 민주주의 사회가 숙제로 남겨놓은 불평등과 이에 따른 일반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소리는 "민중의 권력에 대하여 기득이익을 수호하려는 사회세력과 민중간의 일정한 갈등을 전제"(최장집, 1993, p.4)로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의 증폭은 기존 사회의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소외되고 외면받는 시민들의 불만의 증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 전개와 함께 점차 민주주의는 사회로부터 외면받는 소수자, 약자들의 목소리를 더욱 많이 담아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기득권 혹은 엘리트(elite)에 속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즉, 인민 혹은 민중 간의 갈등을 전제로 이들 간의 대립 관계에서 인민 혹은 민중의 외면받은 기본적 권리와 삶의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정치 운동, 정치 양상 혹은 정치 이념 등이 포퓰리즘(Populism)[41]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어쩌면 포퓰리즘의 확산은 기존 민주주의 사회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며 동시에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열망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사회의 이분법적 대립관계에서 하층부에 속한 사람들이 상층부에 속한 엘리트(elite)에 대해 대립적이며 적대적인 관계를 갖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사회에 내재하는 불공정 혹은 불평등 때문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라 하더라도 엘리트와 인민(혹은 민중)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불평등과 불공정이 사회에 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평등과 불공정은 결국 민주주의 사회를 덜 민주적인 사회로 전락시키는 주범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포퓰리즘은 덜 민주적인 사회로 전락할 위기를 맞은 민주주의 사회에 울려 퍼지는 일종의 경고음이며 경고등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포퓰리즘이 제기하는 근본적인 화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는 불평등과 불공정에 따른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문제이다. 이는 인간이 타인의 기본적인 존엄과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타인의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을 지켜주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 구성원인 시민으로서 그 '존엄과 권리'의 동등함을 보장받기 위한 인민 혹은 민중의 외침이 기득권 세력인 엘리트와의 대립적인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결국 민주주의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포퓰리즘이 엘리트 對(대) 인민이라는 이분법적 대립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그로부터 발생하는 갈등과 불만을 더욱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그러한 불만과 적대감을 토대로 민주주의 사회를 점점 분열시키고 덜 민주화된 사회로 전락시키는 주범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포퓰리즘이 민주주의 사회를 더욱 진전시키는 계기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엘리트 對(대) 인민이라는 이분법적 대립 관계를 벗어나야 한다. 엘리트에 대립하는 단일한 동질체로서 인민 혹은 민중에서 벗어나 다양한 개인의 수준으로까지 확대된 시민의 목소리를 정치주체의 목소리로 담아낼 수 있어야 더 민주적인 민주주의 사회로 진전될 수 있는 것이다.

---

41)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민중(또는 인민)을 우선하는 정치원리"(서영표, 2014)라고 볼 수 있는 포퓰리즘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여러 국내·외 정치학자, 사회학자 그리고 역사학자들 간에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기득권 세력이라 할 수 있는 '엘리트(elite)'와 '인민 혹은 민중'의 대립 관계일 것이다. 그리고 포퓰리즘은 이러한 대립 관계 속에서 기득권층에 속하는 엘리트(elite)와 달리 덜 중요하게 인식되거나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인민의 기본권을 되찾고 보장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 현상 혹은 "정치 구성의 한 양상"(Laclau, 2016/(재인용)Pierre Rosanvallon, 2020, p.30))으로 이해된다. 프랑스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인 로장발롱(Pierre Rosanvallon)은 그의 저서 Le siècle du populisme(포퓰리즘의 세기)에서 "상층부와 하층부로 구분된 사회에서, 엘리트(les elites)가 속해 있는 상층부의 세계와 달리 일반인이 속한 하층부의 세계는 엘리트들에게는 이름도 없는 그저 남자와 여자로만 인식되는 사람들로 구성된 세계"일 뿐이라고 제시하며, 포퓰리즘의 대표적인 학자들 중 한 명인 라클라우(Laclou)의 언급에 주목한다. 라클라우에 따르면 "상층부와 하층부 둘로 나누어진 사회에서 근본적으로 사회질서가 불공정하다고 느껴질 때, 기득권에 대항하여 그 질서를 재구성할 수 있는 새로운 주체로서 하층부에 속한 인민(또는 민중, people)들을 동원하고 이들의 공동 행동을 이끌어낼 때 포퓰리즘이 등장"한다. 이에 대해 로장발롱은 포퓰리즘에 대한 라클라우의 해석과 시각에는 "사회에 존재하는 갈등과 요구사항들이 항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력을 가진 자들과 갖지 못한 자들(인민 혹은 민중, le peuple, people) 사이의 대립 혹은 적대 속에서 정해진다는 전제"가 깔려있음을 강조한다.(Laclau, 2016/Pierre Rosanvallon, 2020, p.31)

제4절 시민의 실천과 민주주의 지속

민주주의 사회는 누구를 위한 사회인가라는 물음을 던진다면 거의 모든 사람이 '국민' 혹은 '시민'이라는 답을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물음 자체를 의아해하거나 깊이 성찰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민주주의(民主主義)'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원적 의미 때문일지도 모른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한자로 '백성'과 '주인'를 뜻하는 '민주(民主)'일 것이다. 즉 '백성'을 의미하는 '시민' 혹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 혹은 국민을 배제하고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언어 그 자체의 의미에서 보더라도 이미 모순이며 불합리한 것일 수밖에 없다. 하물며 민주주의가 단지 언어로서만 그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시민들이, 국민들이 모여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주요한 작동 기제로서 그 실천적 행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가 시민 혹은 국민을 배제할 수 없음은 명백한 사실일 것이다. 결국 민주주의는 시민의,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이며 제도로서 그 일차적 목적을 내세워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배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민주주의가 제도와 절차의 차원을 넘어 시민사회 내에서 실천의 작동 기제로서 민주주의의 궁극적 지향점이 되어야 함을 뜻한다. 즉 시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사회, 그들의 목소리가 자유롭게 들리는 사회, 그리고 그 목소리가 자신들의 삶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충분히 수용되는 사회가 궁극적인 의미에서 민주주의 사회[42]일 것이다.

아마르티야 센 역시 민주주의의 궁극적인 지향점으로서 시민의 참여를 강조한다. 그는 민주주의의 성과를 제도와 절차의 완성에서만 찾기보다 시민들이 정치문제, 즉 시민들의 삶과 연관된 사회,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가 혹은 활용하고 있는가라는 점에서 찾아야 함을 강조하며, 이를 필리핀 전 대통령 피델 발데스 라모스(Fidel Valdez Ramos)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에서 했던 강연(1998년 11월)을 인용하며 재확인 한다. 라모스는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독재의 지배 아래서 사람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고, 선택할 필요도, 결심하거나 동의를 표현할 필요도 없다. 그들이 해야만 하는 것은 따르는 일뿐이다. 이것은 최근 필리핀의 정치적 경험으로부터 배운 비통한 교훈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민주주의는 시민적 덕목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 (……) 오늘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정치적 문제는 권위주의적 체제를 민주주의로 교체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을 넘어서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민주주의가 작동하게 하는 것이다."(아마르티야 센, 2017, p.237/Fidel Valdez Ramos, 1998)

즉, 시민들의 일상의 삶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한다는 것은 다양한 개인으로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제약 없이 들리며 정책적으로 반영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

42)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와 그들의 참여를 토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에 대하여 최장집은 "민중(people)의 광범한 정치참여에 의한 공적 결정과 그 결정을 집행하는, 일련의 규칙 또는 제도를 가지며, 이를 통하여 그것은 정치의 영역에서 민중의 권력으로 표현되고 사회의 영역에서 민중의 물질적, 문화적, 정신적 삶의 질적 고양이 담보되는 정치적 체계"로 설명한다.(최장집, 1993, p.4)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민중(people)'이 시민, 혹은 일반인, 혹은 일반 시민과 사회학적, 정치학적 차원에서 동일한 의미일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최장집은 『민중에서 시민으로 - 한국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에서 민중과 시민의 연속성을 언급하며, 여전히 한국 민주주의가 제한적인 시민의 참여와 시민권의 부재 속에서 빈약한 발전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을 제시한다.(최장집, 2011, pp.201~212)

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개인의 기본적 권리가 동등하게 보장되고 실현되는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주요한 실천 기제가 '시민의 실천'이라고 한다면, 먼저 '시민'은 동질적인 단일체가 아닌 다양한 개인의 목소리를 담은 다양체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앞서 살펴 본 프랑스의 '노란 조끼 운동'은 기존 민주주의 제도와 절차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시위 지도자에 의해 동원된 단일체로서 인민이 아닌 다양한 개인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이라는 의미에서 더 민주적인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현장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가 덜 민주적인 사회로 전락하지 않고 더 민주적인 사회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결국 다양한 개인을 의미하는 시민이 정치주체로서 자신들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삶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소리를 자유롭게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의 목소리가 새롭게 마련된 틀을 통해 최대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회가 바로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사회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서영표,「포퓰리즘의 두 가지 해석 - 대중영합주의와 민중 민주주의」,『민족문화연구』제63호, 2014.

심성은,「노란 조끼 시위의 동인과 특징에 대한 고찰」,『의정연구』56권 0호(p.117-129), 2019.

아마르티야 센,『자유로서의 발전』, 김원기 옮김, 갈라파고스, 2017.

최장집,『민중에서 시민으로』, 돌베개, 2011.

- ,『민주주의의 민주화』, 후마니타스, 2006.
- ,『한국민주주의의 이론』, 한길사, 1993.

Federico Tarragoni, L'esprit démocratique du populisme, Paris, La Découverte, 2019.

Jacques Rancière, 《Les vertus de l'inexplicable》, in Sylvain Bourmeau(dir.), 《Gilets jaunes》, Hypothèses sur un mouvement, Paris, La Découverte, 2019.

Pierre Rosanvallon, Le siècle du populisme : histoire, théorie, critique, Paris, Ed. du Seuil, 2020.

Gilets jaunes. Environnement, emploi, précarité, impôts : voici leurs 45 revendications, Ouest France, 29 novembre 2018. URL : https://www.ouest-france.fr/societe/gilets-jaunes/gilets-jaunes-environnement-emploi-precarite-impots-voici-leurs-revendications-6099353

Laurent Mucchielli, "Deux ou trois choses dont je suis presque certain à propos des Gilets jaunes", The Conversation, December 4, 2018, updated December 9, 2018. URL : https://theconversation.com/deux-ou-trois-choses-dont-je-suis-presque-certain-a-propos-des-gilets-jaunes-108183

토론 6

“실천적 시민과 민주주의 지속”에 대한 토론

백미연(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김성하 선생님께서 발표한 “실천적 시민과 민주주의 지속”은 민주주의의 이론과 실천에 대한 근본적 재고를 제안하고 있다. 특히 근대 이후 현실에서 일종의 규범 혹은 상식으로 통용되고 있는 ‘민주주의’ 개념과 실천에 대한 비판과 성찰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018년 프랑스 사회에서 일어났던 ‘노란조끼운동’에 대한 예를 들며, 자발적 방식으로 저항하는 ‘시민’ 혹은 ‘인민’의 탄생을 프랑스 정치철학자 자끄 랑시에르의 민주주의론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있다. 랑시에르는 민주주의를 정치적 주체 즉 인민, ‘몫이 없는 자’의 정치적 주체화의 끊임없는 행위(act)로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는 사회에서 ‘몫이 없는 사람들’-자신의 경험과 이해가 대변되지 않는 목소리가 배제된 사람들-이 ‘인민’-정치적 주체로 되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사회적 자원의 배분 결정과정에서 목소리가 배제된 사람들이 목소리를 찾아가는 과정 즉 정치적 주체화 과정이라는 것이다.

랑시에르는 ‘인민’이 ‘텅빈 이름’이라고 지적하며, ‘인민’은 어떤 구체적 실체를 대변한다고 보지 않는다. 마르크스주의의 인민 ‘프롤레타리아트’ 역시 어떤 구체적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라, 비-계급적 계급, 비실체적 실체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김성하 선생님 글에서 한 가지 보완되었으면 하는 부분은, ‘노란조끼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에 대한 비난 즉 이들이 환경보호를 위한 유류세 인상에 반대한다는 비난에 대한 규범적 정당화의 논리이다. 운동의 참여자들이 환경보호라는 유류세 인상 정책의 취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위치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에 반대한다는 논리로 운동의 참여를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운동의 참여를 규범적으로 정당화하는 방법은 이들의 목소리가 철저히 배제된 과정이 부정의하다는 것을 밝히는 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유류세 인상과정에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가 완전히 배제되었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거대기업을 제외하고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만 유류세 인상 정책이 도출되었다는 것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정책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the affected)의 목소리가 삭제된 것은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우’(equal respect and concern)하지 않으며, 일부 사람들에게는 ‘지성적 평등’(도덕적 평등)을 거부했다는 점에서 부당하다(unjust) 점을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민주화’의 의미도 랑시에르의 민주주의 즉 인민의 정치적 주체화로 설명하는 것이 규범적 정당화의 방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랑시에르의 ‘민주화’개념은 ‘합의’(consensus)가 아닌 ‘불화’(dissensus)를 바탕으로 한

정치에 바탕을 둔 것으로, 불화의 목소리가 정책결정과정에 포함되며, 새로운 인민(demos, 정치적 주체)이 형성되는 과정인 것이다. 따라서 랑시에르에게 민주주의는 영구적으로 현재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랑시에르의 민주화는 보통의 사람들이 규범과 상식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지위를 갖는 다는 의미에서의 민주화라고 해석될 수도 있다.

따라서 최장집의 민주화 개념과 랑시에르의 민주화 개념이 어떤 연결성을 갖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양자 모두 민주화, 민주주의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랑시에르와 최장집의 개념과 주장이 어디에서 연결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